

# 현대정치연구

2022년 봄호 (제15권 제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 차례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인가?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본질적 차이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한나 .....5

한국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도묘연 .....35

한국인의 친미(반미) 감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박정훈·정승철 .....73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Woo, Byung-Deuk·Ryu, Ki Eun .....113

기억 연구의 정치학적 시론

: '70년만의 귀향' 사례를 중심으로

류석진 .....153

## ■ CONTENTS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Local Council Members <i>Kim, Hanna</i> .....	5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otests in Korea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raditional factors,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i>Do, Myo Yuen</i> .....	35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Democracy and Pro/Anti-American Sentiments <i>Park, Jung Hoon · Chung, Alec</i> .....	73
여성의 산술적 대표성과 국제다자조약 비준 <i>우병득 · 유기은</i> .....	113
An Essay on Memory Studies from the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 A Case Study of “Returning Home in 70 Years” <i>Lew, Seok-Jin</i> .....	153

#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인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본질적 차이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한나 | 서울대학교

## | 국문요약 |

최근 대법원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역할을 하지만 지방의원은 행정적 역할을 하므로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논리는 과연 타당한가?

이 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성에 관한 기존 사법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기관이 위상은 달라도 그 정치적 역할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다. 둘 다 선거를 통한 권력 위임과 토론을 통한 의결이라는 대의기관의 특징을 공통으로 갖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인식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탄생한 제도보장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헌법과 법률상 자치권의 의미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민주적 정당성, 지방자치, 지방선거

## I. 들어가며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가 청구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하여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희, 김○연, 오○윤, 이○규, 이○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현재 판결에 관한 학계의 해석과 비판도 주로 위 두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즉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선행 연구들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현재의 정당 해산 결정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에서 정당성을 갖춘 판결인지 현재 결정의 논리를 이룬바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김종현 2020; 송기춘 2014; 이종수 2015; 임지봉 2015; 채진원 2015; 한상희 2014; 홍철기 2014).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당 해산 결정의 후속 조치에 관한 논쟁으로서, 현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조치가 과연 합당한가에 관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 안에서 법리를 검토하거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이다(김종세 2015; 이상경 2016; 장영수 2015; 한명진 2018).

그런데 위 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산 결정을 내릴 때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일차적으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권을 가진 정부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서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지방의원 의원직에 관한 판단을 함께 내릴 수 있었음에도 현재는 이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임지봉 2015; 정연주 2015). 그리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들도 국회의원처럼 의원직을 상실하는가에 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몫이 되었고, 아직 선행 연구들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국회의원에 관한 논의를 지방의회의원에 확장하여 적용할 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특별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서범욱 2020).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2021년 4월 29일, 지방의회의원 지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있을지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반된 결정의 주된 근거로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 두 주체 간에는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거론한다. 즉 국회의원의 역할은 정치 영역에 있는 데 비해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행정의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 다르게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상기한 사법부 판결의 기저에 놓인 논리에 관하여 본 논문은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법리적 차원에서 왜 사법부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을 다르게 바라보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지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대의제에서 선거라고 하는 동일한 양식의 선출방식을 취하는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에는 역할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두 유형은 비록 대표하는 대상과 법률적 권한은 다를지라도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권력의 위임을 받은 이상 모두 정치

적 역할을 하는 대의제의 의결기관이다. 또한, 이러한 사법부의 인식은 20세기 초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제도보장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선행 연구들의 작업과는 별도로 정치학, 특히 지방정치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천하자는 개혁적인 주장들이 애당초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정치적 현실 속에서 가능했던 일인지 묻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업은 사법부의 법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이론의 기초를 개발하는 작업이 되므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화두는 시대적 과제로서 우리에게 상당히 규범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다양한 국정과제의 형태로도 실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담론과 제도의 근간을 구성하는 이른바 ‘주민주권’의 개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대표성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 등과 같은 개념들의 근원에 관해서는 아직 정치학계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이론의 공백은 향후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에 관한 담론과 정책들의 질은 물론이고 실현 가능성마저도 침식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같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면 정치학 이론의 부재는 결국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마는 정치의 사법화를 다시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에 관하여 개념을 정립하는 사전 작업은 지방정치 연구에 꼭 필요할 것이다.



## II. 정당 해산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

### 1.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였고, 그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때 통합진보당에 소속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현재의 판결이 있는 다음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의 정당해산판결에 따라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명(전북·광주·전남·여수·순천·해남)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여 현재의 해산 결정에 따른 당적 이탈에 해당하므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의결을 하였다. 그리고 그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의회 등에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의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각급 선관위와 지방의회 의장의 의원직 퇴직 처리 통보를 받게 되었고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2015년 1월 7일, 각급 선관위를 상대로 지방의회의원 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5년 11월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sup>1)</sup>과 2016년 4월 광주고등법원 2심 판결<sup>2)</sup>이 진행되었고, 두 판결에서 각 법원은 모두 원고인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sup>3)</sup>에서도 앞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결국 현재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과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규정 등을 통해 비례대표 지

1)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구합407 2015.11.25. 선고.

2)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 (전주)2015누1125 2016. 4.25. 선고.

3) 대법원, 2016두39825, 2021. 4. 29. 선고.

방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2. 사법부의 논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현재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 퇴직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구성하는 논리는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관한 것으로서, 조문에 명시된 ‘소속정당의 해산’이란 말이 정당의 자발적인 해산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따른 강제해산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sup>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등의 퇴직 사유로 당적 이탈 등을 규정하되, 그 당적의 이탈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인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산’은 자진하여 해체하여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강제해산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의 위헌 정당 해산 판결에 따른, 즉 비자발적인 해산도 ‘소속정당의 해산’의 개념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른 의원직 상실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들이 당연 퇴직으로 처리될 이유는 없다. 이러한 논리는 2015년 11월 25일에 선고한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각주 1)

---

4) 공직선거법 제192조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선행 연구들에서도 많이 논해진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효력이 후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논거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羈束性) 정도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명목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방의회의원’까지 퇴직하게 만드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논지 전개는 2016년 4월 25일에 선고한 광주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각주 2)에 잘 드러나 있는데,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아가 헌법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게 국회에게 국가의 입법(제40조), 재정(제54조, 제59조), 인사 및 국정통제(제62조, 제63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되며”(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강조하여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도 없이 소속정당이 강제해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신분유지의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위 두 번째 논리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한 기관의 구성원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체계 하에서 지방의회는 권력분립론의 원리에 따라 수직적으로는 국회를 견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 기관이나 대의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기능을 나누어 갖는 자치행정기관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법리적 시각에 의해 대표 선출의 정치적 의미가 간과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본 논문은 그렇다면 사법부는 왜 지방의회를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판단하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들을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법리적 차원에서 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 본질적 차이

#### 1. 대표성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선임방식의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함으로써 각 주체가 권한의 위임을 받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관념적으로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비롯되는 시원(始原)으로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헌법은 제1조 2항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 제2장의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여 출생이나 인지, 귀화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민의 자격을 부여한다.

헌법 제1조 2항으로 인해 국민은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데 비하여 주민(住民)은 그렇지 않다. 주민은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된다(제16조). 국민과 달리 헌법상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란 국민의 권리처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권, 지자체 재산·공공시설 이용권, 지자체 선거참여권 등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만 열거되어 있다.

한편, 주민의 총합이 반드시 국민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물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외국인인 주민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

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자격이 되므로, 주민의 개념에는 소수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김동희 2018; 박균성 2018; 서범옥 2020; 홍정선 2018).

주민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 후 3년이 지나면 거주하는 구역에서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는다.<sup>5)</sup>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sup> 통·반장에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주민의 자격을 가지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 법제처 선례도 있다(법제처 2014).

이렇듯,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과 지방의회의원이 대표하는 주민은 법률적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은 국가의 권력이 시작되는 주권자이고 국회는 그러한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입법기관이지만, 주민은 그러한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다. 게다가 주민의 개념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주권을 갖는 국민과는 배타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더 우선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

5) 한국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투표를 행사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종갑·김유정 2021).

6) 단,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자격 요건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의 대상자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자격이 없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서류 사실을 등록하는 대상이다.

## 2. 역할과 권한의 차이

한편,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이거나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헌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도보장을 받는 데 비해 지방의회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법리적 차원에서 보면 둘 간에는 보장받는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대등한 헌법기관이라 볼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이고 헌법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 제안 및 의결권(제128조, 제130조), 입법권(제40조), 예산안 심의권(제54조), 재정입법권(제59조), 국정감사 및 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기관과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고유한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지방의회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 헌법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를 언급하는 헌법의 조문은 제118조 제1항인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여 설치에 관한 사항만 정할 뿐이고 제2항에서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율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제47조부터 의회규칙에 관한 제52조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지하듯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가 제정·개정·폐지하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된다. 게다가,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의결하는 지자체 조례의 내용도 ‘법령의 범위에서’, 즉 국회가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8조). 그래서 조례는 범규범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입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리적 관점에서 지방의회는 국회 같은 입법기관이 아닌 자치행정기관으로서 간주된다(김명식 2015, 78; 홍정선 2018). 그러므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역할과 권한, 법률과 조례의 성격 등을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3. 관련 판례

상기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건에서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지위



와 관련 다른 사례들에서도 사법부는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유사한 판결을 내려왔다. 예컨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의원에게는 개인후원회를 금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은 해당 지역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76 결정]

시·도의원은 시·도 전체 주민의 대표자이며 시·도의회 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시·도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 데에 반해 시·도의원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기초로 하는 시·도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제정, 예산의 심의·확정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나(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및 제68조 등), 그 활동범위는 해당 시·도의 지역사무에 국한된다. 또 국회의원이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서 정치는 비전업의 부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질과 양에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430(병합) 결정]

자치구의회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

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치구의회의원의 활동 범위는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중략)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선거비용 측면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상대적으로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불허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판결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다음 인용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또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지자체의 권한은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결정]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의 수직적 분배는 서로 조화가 요청되고 그 조화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권력분립적·지방분권적인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

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다(헌재 1998. 4. 30. 96헌바62 참조). 다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 만일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 헌법도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리적 차원에서 검토했을 때 드러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 본질적 차이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진 이를 대표하는

가'에서부터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이는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는 국민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대표하는 이는 주민이며, 주민의 개념은 국가의 영토 중 일부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주민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과 달리, 주권적 권한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주민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법률상 주민과 그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자치 권한도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 안에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 IV. 사법부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렇듯 앞 장을 통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때 국민과 주민 간 권한의 차이, 법률과 자치법규 간 위계의 차이 등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에 차이가 파생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상기한 사법부의 논리와 그 판단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 1. 선거를 통한 선출의 중요성

우선 첫 번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 역할의 본질적인 차이를 국민과 주민의 위상 차이나 헌법과 법률의 위상 차이로부터 도출하여, 하나는 정치적 기관으로 다른 하나는 행정적 기관으로 구분하는 사법부의 논지 전개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상술하였듯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며 헌법에서 보장받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며 국회가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에서 열거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에서 기관의 위상 면에서 국회가 지방

의회보다 상위의 기관임은 분명하며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위상의 차이를 근거로 지방의회를 정치적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의회가 서로 대표하는 집단이 다르고 법률 체계상으로 명백한 권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둘 다 ‘선거’라고 하는 매우 특별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인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신하여 대표로서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선거라는 권한 위임 절차를 공통으로 하는 이상 두 유형 간의 역할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선임 방식이 행위 주체의 본질을 논할 때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인가. 세습이나 하향식 임명과 달리 선거는 권력에 대한 피치자인 인민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공직에 관한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적인<sup>7)</sup> 과정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인민의 동의를 만들어 내는 제도이고, 근대의 자연법 이론가들은 인민의 동의가 합법적으로 대표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자 정치적 복종의 근거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다(Manin 1997). 근대의 대의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체제에도 이러한 정치적 신념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권력의 사용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대표하는 국민이 선거라는 동의를 방식으로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방 의회의원이 지방의회라는 주민의 권력이 재현(representation)되는 장소에서 주민을 대신하여 조례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선거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권력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정당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7) 그러나 선거는 세습에 비해서는 민주적이지만 추천이나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 비하여 귀족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온전하게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엄밀히 말해 반(半)민주적이다. 대표의 개념에는 민주적 속성과 비민주적 속성이 함께 담겨 있으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야누스적 얼굴을 가지고 있다(Manin 1997).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지 중앙정부의 부속으로서 행정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처음부터 구태여 선거라고 하는, 인민 동의에 의한 권한 위임의 방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반면 이들이 선거라는 인민 동의의 방식으로 공직자가 되었다는 점은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그 뜻을 대신 표명하고 있는 주체가 중앙부처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의제 정치체제에서 의원이 정치공동체의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한다는 것의 이론적인 의미는 의원-유권자의 관계에서 의원이 유권자를 위해 행동해야만 하고, 의원이 하는 일에 유권자를 개입시키며, 의원의 의정 활동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Vieira and Runciman 2008). 이 양자 간 직접적인 관계성에 있어 중앙행정부처나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다른 동료 지방의회의원은 개입되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정말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관 정체성을 가지려면 주민에 의한 선거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임명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어야 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선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러한 하향식 임명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지방정치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도입하여 단기간 실시되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에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직위를 하달받았기 때문에(엄태석 2016),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하위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경우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지방선거는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와 6월 광역의원 선거로 31년여 만에 치러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부활할 수 있었다. 그 후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엄태석 2016). 19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제도에서 선거라고 하는 동의의 절차가 그 자체로 수행될 수 있었던 까닭에 관하여 역으로 추론해보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각 한정된 지역에 관한 자치의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권자 혹은 자치권자로서 합당한 권한이 없는 집단에게는 애초에 대표를 선출할 선거권이 주어질 수가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대표를 선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지역 자치권자인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의회에서 그들의 뜻을 대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들이 정치 권력의 수임 기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국회와 대비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 둘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그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정치적 기관이며, 그 정치적 위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차라리 더 타당하다. 지금처럼 지방의회를 행정 기관이라고 간주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방의회에 대한 유권자 주민의 정당한 권력 위임이 부정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의결 수단으로서 토론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지방의회를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의회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표하며 ‘토론’을 거쳐 사안에 관한 의결을 수행한다는 점 때문이다. 토론은 의회를 행정기관과 차별화시켜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독특한 특징이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토론의 정당화 절차 없이 표결로만 안건을 처리하는 의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의 지방의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관계로 체계화된 행정기관과 달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의결을 위하여 토론을 수행하는 공간에서는, 원칙상 대표 간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집합적 권위체로서 의회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구 집단의 정치적 의지가 각 대표에 의해 동등하게 현존하도록 도모한 정치적인 공간이다. 이때 의회에서 대표들 간의 관계에는 ‘의지의 평등(the equality of wills)’이라는 수평적 관계 개념이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의원들이 각자 선출된 지역의 인구를 동등하게 대표하며 의회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자신 개인의 의사를 다른 의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선천적인 권리가 없다. 그런 평등한 상태의 의원들이 모인 의회라는 공간에서 토론은 동의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작동한다(이관후 2015).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중국에는 다수결의 표결로 결정되어 법의 형식을 갖게 되지만, 그 다수결 표결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기제는 바로 의회의 ‘토론’이라는 것이다(Manin 1997).

참고로 밀(John Stuart Mill) 같은 사상가는 법률안이 관료나 비선출 전문가에 의해 기초가 구상되고 작성된다고 할지라도 선출된 집합적 권위체인 의회가 ‘토론’을 통해서 제정할 수 있다면 대의제 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런 점에서 대의제의 의회는 관료제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의회의 핵심적인 기관 정체성은 법률안의 제정보다 ‘토론’에 있다. 마닝에 의하면 “법안이 반드시 토론 기구에 의해서 발의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심사에 회부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Manin 1997, 234-235).”

그러므로 지방의회 역시 의회로서 토론을 수행하는 한, 지방의회를 행정기관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관료제의 위계관계가 아닌 의원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토론을 수행하고 그것이 이 의결기관의 핵심 기능과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정치적 대의기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제47조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제7절의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이라면 이와 같은 의결 절차를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다.



### 3. 제도보장이론에 관한 비판

앞서 ‘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획득’과 ‘의회의 토론에 의한 의결’이란 두 가지 특성을 들어 국회와 지방의회가 모두 정치적 역할을 하는 기관인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번에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 방식이 제도보장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판단에서 사법부는, 국회에는 헌법에 입법권을 비롯하여 재정, 인사 및 국정 통제 등 여러 가지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제한적인 권한들만 헌법에 부여되어 있음을 대비하면서 국회를 정치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의회를 행정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전자의 우월성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헌법에 직접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자치권을 아예 도출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내용을 장래의 법 발전과 법 형성의 방침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는 국민 ‘기본권’의 일종으로서<sup>8)</sup>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인식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주민의 자치권에 기초해 지방의회를 인식했다면 이를 단순히 행정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논리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

8) 이때 외국인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본 논문의 관심사는 아니므로 이 문제는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다만, 자치권을 국민 기본권의 일종으로 해석한다면, 외국인과 국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는 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개념에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다.

대의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구성된 제도보장(制度保障) 이론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며, 거기에 머물러 체제의 현상 유지를 옹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들을 보면 사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제도보장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제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단순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즉 지방자치단체 일반의 존립 유지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의 판례를 보면 그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헌재 2006. 2. 23. 2005헌마403 선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고(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2),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판례집 6-1, 317, 339; 1998. 4. 30. 96헌바62, 판례집 10-1, 380, 384),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장은 ... (중략) ...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헌재 1997. 4. 24. 95헌바48, 판례집 9-1, 435, 444-445).

한편, 제도적 보장으로서 주민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에 관한 권리침해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9-1440). 즉, 헌법상의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핵심영역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제도보장이란 “역사적·전통적으로 확립된 기존의 객관적 제도 그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 입법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객관적 법규범으로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고, 기본권의 개념과 구분된다(성낙인 2020, 989). 제도보장이론에 따르면, 헌법에서는 절대적·초국가적 자연권으로서의 천부인권인 ‘기본권’과 그러한 절대적인 성격을 담지하지 않고도 객관적 법규범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보장’이 존재한다.

기본권은 헌법 그 자체의 운명과 동일시되고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도 폐지될 수 없는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는 양심의 자유, 인격적 자유, 주거의 불가침, 그리고 사적 소유권 등을 의미한다면, 후자인 제도 또는 제도보장은 헌법에서 객관적인 법규범으로 표현되며,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도보장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지방자치의 보장, 공무원 제도의 보장, 학문·교수의 자유 보장, 대학 신학부의 존치, 일요일·경축일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오동석 2000a). 기본권이 자연권으로서 ‘최대한의 보장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후자인 제도보장의 경우는, 제도가 보장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

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는 의미로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7.4.24. 95헌바48 선고).

제도보장이론에서 이렇게 기본권과 다른 성격의 제도보장을 구분 짓는 까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의 본질을 입법자가 법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그 객관적 범규범의 제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이 제도보장이론은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헌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반(反)의회주의 사상가였던 칼 슈미트는 바이마르공화국이 의회 다수파의 결정에 따른 합법적인 체제 변혁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였는데, 그러한 체제 변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고안했던 이론이 바로 제도보장이론이었다. 자연적 권리인 기본권은 국가에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본권이 아닌 헌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그런 절대성을 갖지 못하므로 입법자의 의결을 통해 변경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사적 소유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사적 소유제도를 제도보장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러한 체제 이행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이중 차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오동석 2000a).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제도보장이론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는 기본권이 아닌, 대표적인 제도보장에 속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무엇이 기본권과 구별되는 제도보장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제도보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헌법학계 학설과 현재 판례의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성낙인 2020, 993).

하지만 이렇게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론도 존재해왔다. 그 이유는, 애초에 제도보장이란 본래 역사적으로 확립된 기존의 객관적 제도 그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 존재한 상태에서 그것이 입법자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인데, 과거부터 중앙집권체제였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서 지방자치제도란 헌법 제정에 따라 비로소 창설된 제도였고, 따라서 역사적 전통에 의해 확립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내용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서재호 2020). 그래서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던 제도보장이론을 현재 우리 헌법 해석에 원용해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정자가 의도했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오동석 2000b).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제도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오늘날 제도보장이론은 주권자나 입법자의 영향력으로부터 헌법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사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내려도 무방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그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사법부 판결의 논리를 법리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시각을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하였다. 본 논문의 주장을 정리하면, 사법부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에는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법리에 따른 그러한 논지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대의제에서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대표에게 정치 권력의 합법적인 위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정치 권력은 본래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에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주민에게 있었다. 지방의회의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무기관에 불과하다면 그 권한의 위임 방식도 선거가 아닌 하향식 임명이 되어야 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거를 통한 권한의 위임이 명백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를 정치적 역할이 아닌 행정적 역할을 하는 집행기관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회에서든 지방의회에서든 사안을 의결하기 전에 토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토론은 구성원 간에 평등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집합적 권위체이며, 그 의회에서는 대표 간 위계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은 수직적인 하향식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행정기관이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회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지방의회에서 토론이 다수결의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를 행정집행기관으로 간주할 이유는 없다.

한편, 사법부는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이론에 기초하여 헌법이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제도로써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자치권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보장이론은 20세기 초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헌법을 다른 정치이념 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고안한 방어이론이므로, 지방자치 개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은 헌법제정과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비로소 성립할 수 있었으므로 입법자로부터 지켜야 할 역사적·전통적 지방자치의 본질적 개념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도보장이론에 기반한 지방자치에 관한 사법부의 이해는 결과적으로 한정된 지방자치의 실현만을 소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헌법도 시대의 요청에 맞추어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화두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에서 그친 87년 체제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시대적인 개혁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줄곧 강조되어왔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담론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정 권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고 경제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초과밀·초집중된 불균형 성장 구조를 타파하여 실질적인 민주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개혁 의지로 표현되어왔다. 그리고 이는 역대 정부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이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정과제의 형태로 실천되어왔다.

그런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시대적 당위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엘리트와 관료의 주도로 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들과 별개로 현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담론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주권’이나 ‘자치권’ 등과 같은 자유주의·민주주의 사상과 밀접한 개념들이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관한 정치적인 이론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분권이 곧바로 민주주의 발전 혹은 자치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가 함께 촉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할과 대표 기능을 인정하는 한편, 헌법상 자치권의 의미를 개인의 자연적 기본권으로 수용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자유의 의미를 중앙으로부터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앙에 대한 적극적 자유까지 포괄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도 가능할 것이다(정병기 2018). 또한, 만약 현재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면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차재권 2022).

## 참고문헌

- 김동희. 2018. 『행정법 II(제24판)』 서울: 박영사.
- 김명식. 2015.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16권 4호, 69-94.
- 김종갑·김유정.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824호, 1-4.
- 김종세. 2015.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법학연구』 58호, 1-20.
- 김종현. 2020. “우리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독자적 인정가능성과 존재의의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48권 3호, 79-107.
- 박균성. 2019. 『행정법론(하) (제17판)』 서울: 박영사.
- 법제처. 2014. “통·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소식』 4월호, 11-13.
- 서범욱. 2020. 『정당해산결정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 논문.
- 서재호. 2020. “권리, 제도, 주권: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297-322.
- 성낙인. 2020. 『헌법학 (제20판)』 서울: 법문사.
- 송기춘. 2014.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56호, 97-153.
- 엄태석. 2016.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정치 발전사.” 59-83. 강원택 편. 2016. 『지방 정치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오동석. 2000a. “제도적 보장론 비판 서설” 『헌법학연구』 6권 2호, 50-68.
- 오동석. 2000b.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공법연구』 29권 1호, 219-234.
- 이관후. 2015.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 동의, 정의, 토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8권 2호, 97-123.
- 이상경. 2016. “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울법학』 24권 1호, 35-66.



- 이종수. 2015.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부인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법과 사회』 48호, 217-248.
- 임지봉. 2015.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논총』 33집, 369-387.
- 장영수. 201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고려법학』 76호, 111-148.
- 정연주. 2015.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입법과 정책』 7권 1호, 219-255.
- 정병기. 2018.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의 이론과 요건.” 『한국과 국제정치』 34권 1호, 1-24.
- 차재권. 2022.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완의 과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정치의 전망과 과제』 113-146.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서울. 1월.
- 채진원. 2014.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한국정치학회보』 49권 4호, 241-266.
- 한명진. 2018.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9권 3호, 109-140.
- 한상희. 2014.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54호, 369-430.
- 홍정선. 2018. 『신지방자치법 (제4판)』서울: 박영사.
- 홍철기. 2014.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민주 헌법의 이론.” 『진보평론』 63호, 73-95.
- Manin, Bernard. 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광준혁 역. 2015.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후마니타스.
- Vieira, Mónica Brito, and David Runciman. 2008. *Representation*. Polity Press. 노시내 역. 2020. 『대표: 역사, 논리,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Local Council Members

Kim, Hanna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aftermath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dissolu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in 2014, proportional local council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lost their membership. Howe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unlik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membership of proportional local councilors is not automatically depriv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is is because local council members play an administrative role in contrast to the political role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ut is this logic really valid?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logic of the judgment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and argues that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in the roles between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local council members. Although both types have different mandates and legal powers, they ar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that play a political role since their legitimacy on power has been democratically approved through the election process. In addition, the court's perception is based on a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s' born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Weimar Republic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ir judgment has limitations as they passiv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local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I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re essential concepts in the present era, the meaning of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needs to be actively reinterpreted in line with this trend of the times.

---

**Key Words** | National Assembly Member, Local Council Member, Democratic Legitimacy, Local Democracy, Local Election

# 한국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도묘연 | 계명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이념, 평상시 정치적 관여의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시기와 대상은 2016-17년 촛불집회 이후의 일반시위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둘째, 두 가지 가치는 전통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물질주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소득, 비투표활동, 낮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는 높은 연령과 비투표활동과,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이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였다. 셋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낮은 연령과 소득, 평상시 투표활동,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진보 이념은 시위참여를 촉진하였고, 이념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주제어 | 시위참여,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정치적 관여, 이념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 1.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요인, 즉 사회경제적 특성, 이념, 평상시 정치적 관여(political engagement)와 물질주의(materialism) 및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및 경험적 논의를 수용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시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탈물질주의는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90, 1997)가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 균열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탈물질주의는 2차 대전 이후 경제적 풍요와 안정적인 사회보장 제도 및 대규모 전쟁이 사라진 국제정세 속에서 기존의 물질적 욕구와 신체적 안정을 넘어서 인간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잉글하트는 서구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년기에 경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들의 가치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균열 속에서 점점 탈물질주의로 전환되는 상황을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규정하였다.

잉글하트에 의해 촉발한 탈물질주의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를 확산시켰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인식을 추적하여 세대 간 가치변화를 검증하기도 하고(Knutson 1990), 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특수성 및 복지제도의 구축 등에 의해 두 가지 가치관이 형성되는 배경을 규명하기도 했다(양해만·조영호 2018; Bomhoff and Gu 2012; Cho and Yoon 2015; Inglehart and Abramson 1994) 그리고 탈물질주의 가치가 정치적 신뢰와 정치참여 확산에 미친 정치적 효과와 관용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의식의 증진에 미친 효과도 제시되었다(김명숙 2008; 어수영 2004).

그렇다면,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잉글하트와 그의 지지자들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한다(김욱·이이범 2006; 어수영

2004; Cho and Park 2019; Gibson and Duch 1994; Opp 1990; Welzel and Deutsch 2012). 즉 탈물질주의가 시위를 포함해 정치적 항의활동과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에 동의하되, 양자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라는 인간의 가치가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기가 필요하며, 탈물질주의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물질주의 가치도 시위참여를 이끈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다.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90, 1997)는 탈물질주의가 다양한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시위 등의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 정치참여 방식, 이념 등의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라는 구체적 혹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물질주의 가치는 자원모델(resource model), 정치적 관여(political engagement)와 동원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시민자발성 모델(civic voluntarism)에서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전통적 요인과 결합할 때 시위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존 연구들은 탈물질주의와 함께 전통적 요인을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채택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관심을 양자 간 상호작용의 맥락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시위참여에 미친 탈물질주의의 영향에 집중한 결과로 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관련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물질주의 가치가 확산된다는 현실(양해만·조영호 2018)을 고려한다면, 물질주의 가치도 시위참여의 동기가 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물질주의 측정변수 역시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90)의 전통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등과 같이 최근의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가치를 측정변수로 설정하지 못하는 한계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전통적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한다고 검증된 요인들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분

석한다. 연구목적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이외의 전통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 및 평상시 정치적 관여(미디어 이용, 정치효능감, 신뢰, 정치참여 방식, 결사체 활동)로 구성하였다. 둘째, 탈물질주의 측정변수는 잉글하트가 고안한 변수 이외에 선행 연구(정병기 2017)에 기초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분석시기와 대상은 촛불집회 이후의 일반 시위로 한정하였다.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를 포함해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한국 시위의 성격을 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016-17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시위를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도묘연 2017a),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시위의 일상화, 즉 사회운동이 관습정치的一部分가 되는 운동사회(Meyer and Tarrow 1998)를 심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촛불집회 이후 그의 맞불로 개최된 태극기 집회와 소위 조국 사태를 둘러싼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나타났듯이, 시위는 이념적 갈등의 분출이라는 여전한 한계도 포착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구와 같이 시위의 일상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시위에서 표출된 주요 이슈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일반성과 특수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검토

### 1. 물질 및 탈물질주의의 여러 차원

탈물질주의는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77)가 1968년 이후 서구 산업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 균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그의 논의는 2차 대전 이후의 교육 수준의 향상,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에 따른 물질적 풍요, 그리고 대규모의 전쟁이 사라진 국제정세에 따른 신체적

안전의 확대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정병기 2018, 203). 즉 서구 사회의 경우 전후의 사회경제적 안정화에 힘입어 개인적 차원에서 물질적 생존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감소하고, 자기표현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라는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익히 알려진 대로, 잉글하트와 그의 지지자들은 탈물질주의 가치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희소성(scarcity) 가설과 사회화 가설을 제시한다(Inglehart and Abramson 1994; Knutsen 1990). 먼저 메슬로우(Maslow 1943)의 욕구단계론에 기초한 희소성 가설은 개인의 가치가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더욱 높은 차원의 소속감 및 애정,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생리적 욕구는 배고픔이나 갈증 및 성적 욕구 등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보안, 공포로부터의 보호, 혼동과 무질서로의 벗어남 등을 포함한다(김명숙 2008, 63). 따라서 개인은 장기간의 물질적 풍요와 경제성장으로 하위 차원의 두 가지 욕구가 확보되면 상위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존과 안정의 가치를 우선시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급격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개인은 필연적으로 물질적 생존과 신체적 안전의 가치를 선호하게 된다.

반면, 사회화 가설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핵심은 성장 과정의 학습에 의해 성인이 된 후에도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동일한 세대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역시 유사하다고 본다. 즉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어린 시절에 경제적 풍요를 경험한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 부모와 달리 생존과 안전의 가치보다는 상위 차원의 욕구를 갖게 되며, 자녀 세대들의 가치는 비슷한 동시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원용했던 가설에 의하면,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를 중요시하는 사고는 물질주의로 정의된다. ‘국가의 질서유지’, ‘국방 강화’, ‘범죄와의 전쟁’, ‘물가 인상 억제’, ‘고도의 경제성장’, ‘안정적인 경제 유지’는 물질주의를 개념화하는 지표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 가치의 충족 이후에 형성된 상위 차원의 욕구, 즉 소속감 및 애정,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를 중요시하는 사고가 바로 탈물질주의이다. 잉글하트(Inglehart 1990)는 1970년부터 1988년까지 수집된 26개국의 방대한 시계열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성인 세대에서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경험한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에 의해 탈물질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적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의 세대 간 가치변화 이론이 함의하듯이, 경제적 성장과 안정이 담보될 경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탈물질주의 가치를 더 선호하게 되며, 문화적 변화는 세대교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전을 우선시하는 물질주의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잉글하트의 논의를 수용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탈물질주의 가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진다. 메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따르면, 탈물질주의는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 사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서로 애정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소속감,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 및 자신감을 유지하는 존경,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려는 자아실현을 포함한다(김명숙 2008, 63-64). 주목할 것은 탈물질주의 가치가 욕구라는 인간의 심리를 뛰어넘어 시대적 환경이 투영된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탈물질주의 논의를 촉발한 동시에 탈물질주의 세대가 주도했던 68혁명의 주장과 요구를 확인한다면, 탈물질주의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잉글하트의 논의를 수용하여 서구의 68혁명을 분석한 정병기(2017, 2018)는 탈물질주의가 당시 사회구조적 모순을 거부하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68혁명 이후의 균열구조를 “인간의 일상에 주목하는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물질주의 갈등 구도”로 정의한다.



즉 68혁명 운동이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기성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68혁명을 주도한 탈물질주의 세대의 주장이 대의 민주주의, 거대 기업과 자본주의 기술, 전문가에 의한 지배, 미디어에 의한 조종, 교수·교사 중심의 학교, 가부장적 가정 및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러한 비판을 해방적 삶을 지향하는 반권위주의 사고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전후의 경제적 풍요는 자본과 물질에도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권위주의 의식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68운동 발생했다고 보았다. 당시 탈물질주의 세대의 요구는 경제적 자본주의 가치와 수동적 삶을 거부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탈물질주의 사람 사회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들을 근거 짓는 사고를 바로 탈물질주의로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그는 탈물질주의를 반권위주의의 맥락에서 네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했다. 그것은 국가 및 관료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관료주의적 모순 비판(‘언론자유 보장’, ‘정부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확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의 개인 발언권 확대’), 인간이 자연에게 행사하는 문명론적 모순 비판(‘핵 감축 또는 폐지’, ‘환경보호’), 사회의 다수가 소수에게 행사하는 진화론적 모순 비판(‘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강대국이 약소국 혹은 식민지국에 행사하는 제국주의적 모순 비판(‘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 가부장주의적 모순 비판(‘여성권익 신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권위주의적 탈물질주의가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영장류의 사회에서 항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병기(2017)의 논의는 탈물질주의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반권위주의와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의 탈물질주의 개념화는 기본적으로 잉글하트의 이론에 천착하고 있다. 관료주의적 모순의 비판으로 정의된 세 가지 탈물질주의 내용은 잉글하트의 전통을 따르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해서 수용된 것이다. 문명론적 모순의 비판 중 ‘환경보호’와 진화론 및 가부장주의적 모순의 비판 내용

역시 잉글하트가 성평등, 이혼, 낙태,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활용되었다 (Inglehart 1990). 다만 ‘핵 감축 또는 폐지’와 ‘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은 잉글하트가 주목하지 않았던 탈물질주의의 내용이다. 이러한 차이는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논의가 대규모의 전쟁이 사라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신체적 안전이 확보된 상황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2.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전통적 요인

일반적으로 시위는 비관습적 정치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의 한 유형으로 정의된다. 밀브레스와 고엘(Milbrath and Goel 1977)은 정치참여를 투표, 정당 및 선거활동, 공동활동, 사적 접촉, 의사소통의 관습적 정치참여와 항의활동의 비관습적 정치참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시위는 청원서 서명, 공과급 납부 거부, 파업 및 점거 활동 등과 함께 정치적 항의(political protest)의 한 유형에 포함된다(류태건·차재권 2021). 정치참여를 “정부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으로 정의할 때(Milbrath and Goel 1977), 시위는 집합적인 정치적 저항행위이자 정부와 시민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를 기반으로 공공의 상호작용을 벌이는 쟁투적 정치(contentious politics)의 성격을 가진다(Tarrow and Tilly 2007). 또한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시위와 같은 정치적 항의는 투표와 달리 참여자의 자발성과 비용이 상당히 요구된다. 따라서 투표는 ‘쉬운 참여’로, 반면 시위를 포함한 정치적 항의는 ‘어려운 참여’로 정의되기도 한다(김욱 2010).

개인의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잉글하트(Inglehart 1990, 361-362)는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그 배경으로 서구 사회에서 탈물질주의 가치가 등장했더라도 여전히 물질주의 목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경우 기존 사회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크고, 시위에 따른 혼란에서 감수해야하는 손해가 적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내외적으로 잉글하트의 이

론을 수용한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정치적 항의 혹은 시위참여 간의 친화성을 증명해왔다(김욱 2010; 류태건·차재권 2021; 어수영 2004; 조기숙 박혜운 2008; Cho and Park 2019; Gibson and Duch 1994; Opp 1990; Welzel and Deutsch 2012). 단 국내에서 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하여 탈물질주의 연구를 본격화한 어수영(2004)의 논의에 기초한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김명숙 2008).

국내에서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 간의 친화성을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욱(2010)과 조기숙과 박혜운(2008, 2019)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반시위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탈물질주의의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 시위의 성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조기숙과 박혜운(2008)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일반 시민들에 비해 교육 수준과 탈물질주의 의식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촛불집회를 소고기 먹거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적 참여자와 값싼 소고기 수입을 주도한 정부 간의 문화적 균열이 반영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갑윤(2010)은 이념, 세대, 지역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08년 촛불집회가 문화적 균열보다는 정치적 균열이 투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욱(2010)은 이갑윤의 연구가 물질 및 탈물질주의 변수가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교육 수준, 정치적 이념,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를 포함한 실증연구를 통해 탈물질주의 가치가 촛불집회에 참여에 미친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숙과 박혜운(200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다만, 그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균열이 기존의 정치적 균열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양자의 균열이 상호 공존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조기숙과 박혜운(Cho and Park 2019)은 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시금 한국의 시위참여에 미친 탈물질주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변수, 급진적 불만(disaffected radicalism), 사회적 자본, 이념이 포함된 모형을 설정하여 2005년 및 2010년 시위참여에서 이념과 신뢰와 달리 탈물질주의의 가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욱·이

범(2006) 역시 2000년-2001년의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탈물질주의 가치를 가진 유권자일수록 시위를 포함한 정치적 항의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처럼 탈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참여를 추동한다는 실증적 분석이 확산하였으나,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은 전통적인 모델이 일찍이 주목을 받아왔다. 자원동원론, 정치적 관여와 네트워크 동원으로 대변되는 시민자발성 모델, 그리고 사회자본론을 수용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정향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들 논의를 종합하면, 시위참여의 전통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특성, 정치적 관여, 이념의 차원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특성은 전통적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원동원모델에서는 개인이 시위참여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위험이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적 가용성(biological availability), 즉 연령, 교육, 자녀 유무, 가족 소득, 학생 지위 및 고용 상태 등을 강조한다(Schussman and Soule 2005, 1088). 한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소득과 교육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고 있으며(이혜인·홍준형 2013), 서구의 경우도 시위는 정치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경향성을 가진다(Norris et al. 2005; Rucht 2007).

다음으로 평상시 정치적 관여로 정의되는 변수는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이들 요인은 투표 및 비투표활동, 외적 및 내적 효능감, 정치 및 비정치 결사체 활동, 제도 및 사회 신뢰, 전통 및 뉴미디어 이용별로 시위참여에 구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다.

첫째, 정치적 효능감, 즉 정치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되는 내적 효능감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대변하는 외적 효능감은 오랫동안 시위참여의 주요한 요인으로 증명되었다. 이 경우 내적 효능감이 높은 대신 외적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캠페인이나 시위참

여에 적극적이기도 하지만(Pollock 1983), 외적 효능감 역시 시위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홍혜승·류은영 2015). 둘째,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의 정치 결사체와 친목모임·종교조직·취미동호회 등의 비정치 결사체 활동은 시위참여를 촉진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한편에서는 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추동한다는 연구도 확인되지만(도묘연 2021; Norris et al 2005),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이끈다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김상돈·김태준 2008). 셋째, 신뢰, 즉 정부·국회·정당 등에 대한 공적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사회 신뢰도 시위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공적 신뢰가 시위참여에 미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규명해 왔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시위참여를 촉진하기도 하지만(송경재 2013), 정치인에 대한 높은 신뢰가 시위나 집회를 포함한 광고 불매운동 등의 저항적 정치참여 활동을 증진하기도 한다(이정기 2011). 넷째, 미디어 이용 역시 시위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시청시간은 투표활동과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줄이거나 혹은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성동규 외 2007; Putnam 1995), 특히 온라인 정치토론 및 글쓰기 활동, 정치인과의 SNS 활동, 인터넷 기반 1인 미디어의 이용은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시위참여를 더 촉진하며(이정기 2011; 이정기·정대철 2009) SNS 이용 빈도 역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이었다(박영득·이재묵 2017). 다섯째, 평상시 정치참여 활동도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이다. 평상시 다양한 투표 및 비투표활동이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묘연 2021)도 있지만,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은 그만큼 정치적 관심을 높이기 때문에 시위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차현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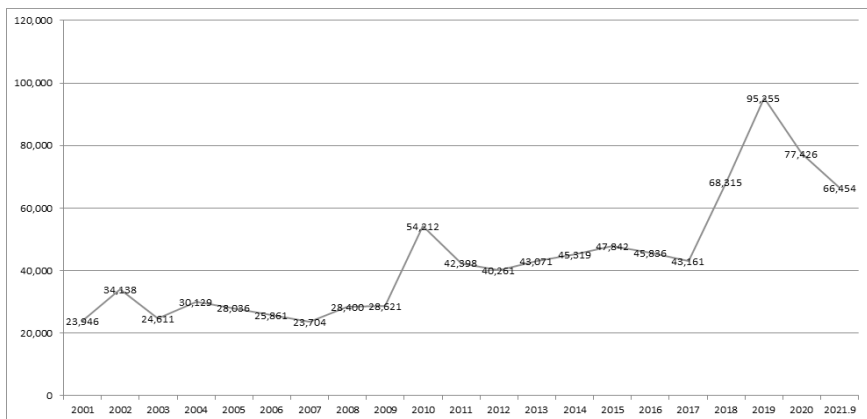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념 역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념적 균열구조가 뚜렷한 한국의 경우 시위참여에 미친 이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념은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들과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통상적으로 설정되며, 실제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시위참여 혹은 그 의사 형성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도묘연 2021). 물론 국외 연구에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좌파 혹은 진보적 이념은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Welzel and Deutsch 2012).

### 3. 한국의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고려사항

한국 사회에서도 시위가 관습정치 일부가 되는 운동사회(Meyer and Tarrow 1998)의 심화가 포착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시위의 일상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발표되는 가운데, 2016-17년 촛불집회는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시위를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도묘연 2017a),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촛불집회 이후 시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되듯이,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 19 이후로 감소하였던 시위는 2021년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도 서구처럼 시위가 일상화되었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림 1〉 2000년 이후 한국 시위 현황(단위: 건)



자료: 『2019년 경찰통계연보』 및 『치안전망 2022』 기초로 재구성

시위의 일상화 혹은 그 심화는 한국 시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하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 연구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에 주목한다. 기본적으로 탈물질주의 가치가 문화변동 및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시위참여를 추동했다는 기존 논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친화성에 대한 논의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가치가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기가 필요하며, 물질주의 가치가 증가하는 한국적 현실과 연구방법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기존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전통적으로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된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가 직접적으로 시위와 같은 정치적 행동을 이끈다는 주장은 일정 정도 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치, 신념, 태도로 구성되며, 세 가지 개념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 중 특정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인 가치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견해나 믿음으로서 신념을 형성하게 하고, 이러한 신념과 가치는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김육·이이범 2006, 92; Rokeach 196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치는 태도와 결부되어야만 정치적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차현진 2021, 31). 나아가 가치는 태도뿐만 아니라 평상시 정치적 행태와 결부될 때 정치적 행동을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물질주의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시위에 참여하기보다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가진 동시에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혹은 평상시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즉 탈물질주의 가치는 이념이나 평상시 정치적 지식, 정치적 신뢰,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적 관여(Norris 2001)와 결합할 때 시위참여를 이끈다는 논리가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잉글하트 역시 탈물질주의 가치가 인지적 동원을 통해서 시위 등의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1970, 1990, 1977). 한 개인이 정치공동체

를 다루는 기술의 습득을 의미하는 인지적 동원은 현대사회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이용을 통해 정치적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으며, 정치적 관심은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효능감, 평상시 활발한 정치참여 및 결사체 활동 등에 의해서 고양될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들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관여 변수를 탈물질주의의 경쟁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시위참여의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과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까지 그 관심을 확장하지는 않았다.

둘째, 국내 연구는 탈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친화성에 몰두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관련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1960년대의 경제적 풍요와 사회복지의 확충을 기반으로 탈물질주의가 확산하였던 시대와 현시대의 상황은 분명 차이가 있다.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새로운 경제위기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고,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탈물질주의보다는 물질주의를 다시 갈구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정병기 2018, 202-203). 물론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해만·조영호(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의 동반하락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만,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실업률과 비정규문제의 가속화라는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의 악화와 그에 따른 불안감이 물질주의 가치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잉글하트의 희소성 가설과 사회화 가설에 따르더라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그 시대에 성장기를 겪은 세대들은 물질주의 가치를 지속해서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그 결과 이들의 시위참여 동기는 자신들이 처한 물질적 어려움의 수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물질주의와 시위참여의 관련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2016-17년 촛불집회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국가사회 질서의 유지, 범죄 소탕, 물가상승 억제에 대한 인식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정병기 2017). 이는 시위참여



자와 비참여자 모두 물질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탈물질주의 가치의 주요 내용은 잉글하트(Ingelhart 1971, 1990)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탈물질주의의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탈물질주의의 측정변수는 잉글하트의 초기 및 후속 저작에서 소개된 항목과 조사방법이 세계가치조사의 표본으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에게 물질주의 항목과 탈물질주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중 중요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게 한 후 연구자가 고유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탈물질주의 지수를 설정하거나 혹은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그 혼합형으로 유형화한다. 이중 탈물질주의 항목은 ‘직장과 사회에의 참여확대’, ‘도시나 농촌의 환경미화’,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참여확대’, ‘언론자유 보장’,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로의 발전’이 포함되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차용하고 있다.

이들 목록은 주기적으로 수행된 세계가치조사에 활용되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의 통시적인 변화를 분석하는데 탁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탈물질주의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측정문항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즉 탈물질주의가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정을 뛰어넘는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라면, 고착화된 자기표현, 삶의 질, 소속감 확대와 함께 최근의 현대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 옹호, 여성권익 신장, 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 등에 대한 인식(정병기 2017)도 탈물질주의 가치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와 전통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시위참여의 요인을 추론한다. 이 과정은 잉글하트(Ingelhart 1990)와 정병기(2017)의 논의를 참고하여 탈물질주의 가치의 측정변수를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 3. 연구설계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0년 4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표본은 성별, 나이,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초한 비례층화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대상의 선정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시위참여는 촛불집회와는 구별되는 일반 시위참여를 묻는 별도의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촛불집회의 영향을 차단하여 일반 시위참여에 미친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영향을 추론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둘째, 분석대상은 시위참여자 및 비참여자로 한정하였다. 실제 동 자료의 설문대상은 1,683명이었고, 시위참여 문항은 참가한 경우,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로 세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위참여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시위참여자과 비참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175명이었다.<sup>1)</sup>

한편, 전통적 요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이 시위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유의수준 0.05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구성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배리맥스(varimax)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과정을 거쳤다. 그 외 시위참여 집단 및 비참가 집단별로 나타난 분석변수의 일반특성과 유의미한 차이

---

1) 분석대상 1,175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21명(18.8%), 부산 84명(7.2%), 대구 65명(5.5%), 인천 67명(5.7%), 광주 39명(3.3%), 대전 35명(3.0%), 울산 31명(2.6%), 경기 283명(24.1%), 강원 38명(3.2%), 충북 34명(2.9%), 충남 42명(3.6%), 전북 43명(3.7%), 전남 38명(3.2%), 경북 53명(4.5%), 경남 71명(6.0%), 제주 18명(1.5%), 세종 13명(1.1)이었다.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표 3>을 참조한다.

는 분산분석(Duncan 검증 병행)과  $\chi^2$ -test를 통해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 2.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유형화: 구성변수의 타당성 검증

분석모형을 설정하기 이전에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유형화하였다. 2장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기존 연구는 잉글하트의 방식을 원용하여 측정문항을 제시한 후, 응답자의 선택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가치를 유형화하거나 혹은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탈물질주의 지수를 고안하고 있다.

사실 두 가지 가치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며, 물질주의자 혹은 탈물질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쪽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 혹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다양한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김욱 2010, 39-40).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가치는 공통적 혹은 차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자아실현의 가치는 공통으로 탈물질주의로 불릴 수는 있으나, 탈물질주의 내에서도 다른 차원의 속성으로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의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유형화했다면, 이에 더하여 이 연구는 두 가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유형화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목록을 확장한 후(정병기 2017; Inglehart 1990), 개념적 타당성을 확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개별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1개 차원에서, 그리고 탈물질주의는 2개 차원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측정변수의 공통적 내용을 중심으로 요인 1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요인 2는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그리고 요인 3은 물질주의로 명명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sup>2)</sup>

2) 당초 측정목록에 포함되었던 “사회복지 확대” 및 “물가상승 억제”(물질주의)와 “환경

<표 1>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의 구성변수: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탈물질주의	참여·표현형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0.75	0.13	0.27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개인의 발언권 확대	0.74	0.19	0.14
		돈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0.65	0.28	0.24
		언론자유 보장	0.56	0.07	0.39
	권익옹호형	국제난민과 약소국 지원	0.12	0.83	0.06
		핵 감축 혹은 폐지	-0.04	0.78	0.31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증진	0.36	0.67	-0.12
	여성권익 신장	0.42	0.64	-0.06	
물질주의	국방비 등 방위력 증강	0.12	0.05	0.79	
	경제성장 달성과 경제안정	0.34	-0.01	0.78	
	국가 및 사회 질서유지와 각종 범죄 소탕	0.48	0.14	0.60	
모형 적합성	고웃값	4.2552	1.7544	0.8642	
	기여율	0.3868	0.1595	0.0786	
	누적 기여율	0.3868	0.5463	0.6249	

\* 7단계 리커트 척도 측정(국가 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1=매우 동의하지 않음, 4=보통, 7=매우 동의함).

### 3. 분석모형

<표 1>의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전통적 요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이 시위참여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는 분석모형을 확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시위참여는 참여 횟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전통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 정치참여활동, 신뢰, 정치효능감, 결사체 활동의 정치적 관여, 그리고 이념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보호”(탈물질주의)는 특정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기본모형]

$$y_{m_j} = \alpha + \sum_{i=1}^{11} (\beta_i * x_i) + \sum_{j=1}^3 (\delta_j * m_j)$$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상호작용 검증 모형]

$$y_{m_j} = \alpha + \sum_{i=1}^{11} (\beta_i * x_i) + \sum_{j=1}^3 (\delta_j * m_j) + \sum_{k=1}^{11} \gamma_{k*} \sum_{i=1}^{11} x_i * m_j$$

$y_{m_j}$ 는  $j$  시위참여 횟수(1=물질주의 시위참여 횟수, 2=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시위참여 횟수, 3=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시위참여 횟수)

$\alpha$ 는 상수항

$\beta_i$ 는 독립변수군의  $i$ 번째 추정계수

$x_i$ 는 독립변수군의  $i$ 번째 변수(1=성별, 2=연령, 3=학력, 4=소득, 5=이념, 6=진통미디어 지향도, 7=투표활동 지향도, 8=공적신뢰 지향도, 9=외적효능감 지향도, 10=정치·비정치 결사체 가입, 11=비정치적 결사체 가입, 12=물질주의, 13=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14=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delta_j$ 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군의  $j$ 번째 추정계수

$m_j$ 는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군의  $j$ 번째 변수(1=물질주의, 2=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3=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gamma_k$ 는 독립변수군과  $j$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군의  $k$ 번째 추정계수

$x_i * m_j$ 는 독립변수군의  $i$ 번째 변수와  $j$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

위의 분석모형에서 확인되듯이, 실제 분석은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모형 1]은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시위참여에 영

향을 미친 변수를 추론하는 기본모형이다. 반면 [모형 2]와 [모형 3] 및 [모형 4]는 각각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을 상정한 모형이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정치적 관여의 일부 변수는 개념화하여 구성하였다. 즉 전통미디어 이용도, 투표활동 지향도, 공적신뢰 지향도, 외적효능감 지향도로 조작화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전통 및 뉴미디어, 투표 및 비투표 활동, 공적 및 사적 신뢰, 내적 및 내적 효능감으로 구분된 유형에 따라 시위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2장의 논의에 기초하였다. 또한 분석모형 상의 문제, 즉 투표활동과 비투표활동을 함께 모형에 포함할 때 발생하는 자기상관성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결사체 활동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비정치 결사체 활동으로 유형화했다. 이는 총 분석대상 1,175명 중 정당(97명 8.3%), 노동조합(102명 8.7%), 시민단체(83명, 7.1%) 가입자 수가 너무 적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구체적인 분석변수의 내용과 측정방식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변수	척도	
종속 변수	시위참여	시위참여 횟수	비율	
독립 변수	물질주의/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표 1> 요인분석 결과	리커트 (7)	
	이념	주관적 이념 평가(1진보, 6중도, 11보수)	리커트 (11)	
	전통적 요인	성별	남(1)/여(0)	명목
		연령	18세-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학력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재/졸, 4년대재/졸, 대학원 석사재/졸, 대학원 박사재/졸	
소득		100만원이하-1,000만원 이상 11개 구간		

독립 변수	전통적 요인	평상시 정치 관여	전통·뉴미디어 이용 (전통미디어 지향도)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한 미디어 이용 시간(분) $\frac{TV\text{ 및 종이신문 이용시간}}{(\text{인터넷} \cdot \text{소셜미디어} \cdot \text{모바일메신저 이용시간})}$	비율
			투표·비투표 활동 (투표활동 지향도)	투표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문제 토론,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시사모임 참여, 청원 참여, 정부 기관 대상의 민원제기 정도 $\frac{\text{투표활동 수준}}{(\text{비투표활동 수준})}$	
			공적 및 사적 신뢰 (공적신뢰 지향도)	“대부분 공직자와 정치인은 신뢰할만함”,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임” $\frac{\text{제도 신뢰 수준}}{(\text{사회 신뢰 수준})}$	리커트 (11)
			외적·내적 효능감 (외적효능감 지향도)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의 생각에 관심 없음”,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음” $\frac{\text{외적 효능감 수준}}{(\text{내적 효능감 수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정당·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가입(1)/(0) 취미동호회·친목모임·향우회·동창회·종친회가입(1) /비가입(0)	명목

## IV. 실증분석

### 1. 시위참여 및 비참여 집단의 일반특성

<표 3>은 시위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별로 나타난 분석변수의 일반특성을 보여준다. 전체 1,175명 중 시위참여자는 352명(29.96%), 비참여자는 823명(70.04%)이었다.<sup>3)</sup>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시위참여 횟수별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1회 114명, 2회 100명, 3회 60명, 4회 15명, 5회 32명, 6회 4명, 7회 2명, 8회 1명, 10회 12명, 11회 1명, 12회 2명, 15회 3명, 20회 3명, 25회·50회·99회 각각 1명이다.

첫째, 전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5.55)에 대한 인식이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5.14) 및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4.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위참여 및 비참여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참여 5.22, 비참여 5.10)에서만 확인되었다. 즉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자기실현 및 표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의 경우는 참여집단(5.12)이 비참여집단(5.79)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시위는 여전히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는 연령을 제외한 다른 변수는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령의 경우 18세-19세(참 4.3%, 비 1.8%)·20대(참 19.9%, 비 14.8%)·40대(참 26.4%, 비 20.9%)는 참여율이 높았고, 30대(참 17.9%, 비 18.1%)·50대(참 19.9%, 비 23.9%)·60대 이상(참 11.7%, 비 20.4)은 비참여율이 높았다. 학력은 초졸(참 0.0%, 비 0.1%)·중졸(참 1.1%, 비 2.1%)·고졸(참 12.8%, 비 21.5%)·전문대재/졸(참 12.5%, 비 15.8%)의 경우 비참여율이, 4년대재/졸(참 60.5%, 비 50.9%)·대학원석사재/졸(참 9.1% 비 7.1%)·대학원박사재/졸(참 4.0%, 비 2.6%)은 참여율이 높았다. 따라서 시위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20대의 젊은층과 40대,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다.

넷째, 평상시 정치적 관여는 미디어 이용, 정치참여 활동, 신뢰, 결사체 활동에서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전통미디어 지향도(참 46.73, 비참 52.52)와 투표활동 지향도(참 2.05, 비 2.87)는 비참여 집단에서 높았던 반면, 공적 신뢰 지향도(참 0.97, 비 0.89)는 참여집단에서 높았다. 그리고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참 36.4%, 비 9.1%)은 참여집단에서 많았던 반면, 비정치 결사체 활동(참 42.9%, 비 59.4%)과 결사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참 20.7%, 비 31.4%)는 비참여집단에서 많았다. 따라서 시위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정보를 얻기 위해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동시에 평상시 투표 이외에 정치토론과 민원제기 등과 같이 비투표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며,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와 취미동호회 등 다양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표 3〉 시위참여 및 비참여 집단의 일반특성

(단위: 명, %)

		전체 (n=1,175)	참여 (n=352)	비참여 (n=823)	$\chi^2/F(\text{prob.})$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물질주의	5.55	5.58	5.54	0.56(0.4547)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5.14	5.22	5.10	4.51(0.0339)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4.53	4.60	4.49	2.81(0.0941)		
이념		5.59	5.12	5.79	24.99(0.0001)		
전통적 요인	성별	남	585(49.8)	189(53.7)	396(48.1)	$\chi^2=3.0669$ , df=1, prob=0.0799	
		여	590(50.2)	163(46.3)	427(51.9)		
	연령	18세-19세	30(2.6)	15(4.3)	15(1.8)	$\chi^2=25.3786$ , df=5, prob=0.0001	
		20세-29세	192(16.3)	70(19.9)	122(14.8)		
		30세-39세	212(18.0)	63(17.9)	149(18.1)		
		40세-49세	265(22.6)	93(26.4)	172(20.9)		
		50세-59세	267(22.7)	70(19.9)	197(23.9)		
	60세이상	209(17.8)	41(11.7)	168(20.4)			
	학력	초졸	1(0.1)	0(0.0)	1(0.1)	$\chi^2=20.6068$ , df=6, prob=0.0022	
		중졸	21(1.8)	4(1.1)	17(2.1)		
		고졸	222(18.9)	45(12.8)	177(21.5)		
		전문대재/졸	174(14.8)	44(12.5)	130(15.8)		
		4년대재/졸	632(53.8)	213(60.5)	419(50.9)		
		대학원석사재/졸	90(7.7)	32(9.1)	58(7.1)		
	대학원박사재/졸	35(3.0)	14(4.0)	21(2.6)			
	사회 경제적 특성	소득	100만원 미만	63(5.4)	6(1.7)	57(6.9)	$\chi^2=39.8300$ , df=10, prob=0.0.0001
			100-199만원	90(7.7)	19(5.4)	71(8.6)	
			200-299만원	196(16.7)	57(16.2)	139(16.9)	
			300-399만원	194(16.5)	50(14.2)	144(17.5)	
			400-499만원	173(14.7)	52(14.8)	121(14.7)	
500-599만원			145(12.3)	61(17.3)	84(10.2)		
600-699만원			98(8.3)	32(9.1)	66(8.0)		
700-799만원			88(7.5)	23(6.5)	65(7.9)		
800-899만원			49(4.2)	16(4.6)	33(4.0)		
900-999만원	19(1.6)	11(3.1)	8(1.0)				
1,000만원이상	60(5.1)	25(7.1)	35(4.3)				
평상시 정치적 관여	전통미디어 지향도	50.79	46.73	52.52	12.89(0.0003)		
	투표활동 지향도	2.63	2.05	2.87	77.18(0.0001)		
	공적신뢰 지향도	0.91	0.97	0.89	4.60(0.0322)		
	외적효능감 지향도	2.42	2.38	2.43	0.33(0.5680)		
	정치·비정치 결사체활동	203(17.3)	128(36.4)	75(9.1)	$\chi^2=128.341$ , df=2, prob=0.0001		
	비정치 결사체활동	641(54.6)	151(42.9)	490(59.5)			
무		331(28.2)	73(20.7)	258(31.4)			

## 2.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표 4>는 시위참여에 미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순수한 영향력을, 그리고 [모형 2]와 [모형 3] 및 [모형 4]는 각각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시위참여에 미친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론하고 있다.

[모형 1]에서는 이념( $\beta=0.1151$ ,  $t=-2.15$ )의 부(-)의 영향력과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beta=2.4547$ ,  $t=7.03$ )의 정(+)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진보적 이념을 가질수록, 정치 및 비정치적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할수록 시위참여가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와 다른 독립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2]는 물질주의 상호작용항을 검증한 모형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연령( $\beta=-1.1459$ ,  $t=-2.22$ ) 및 소득( $\beta=-0.6101$ ,  $t=-2.62$ )의 부(-)의 영향과 투표활동 지향도( $\beta=1.7046$ ,  $t=3.77$ ) 및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beta=8.9330$ ,  $t=4.69$ )의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에서는 연령×물질주의( $\beta=0.2050$ ,  $t=2.24$ )와 소득×물질주의( $\beta=0.0998$ ,  $t=2.40$ )의 정(+)의 영향, 그리고 투표활동 지향도×물질주의( $\beta=-3263$ ,  $t=-4.11$ )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물질주의( $\beta=-1.1961$ ,  $t=-3.47$ )의 부(-)의 영향력이 도출되었다. 이는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평상시 투표활동과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을 많이할수록 시위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가치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연령과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을 많이 하고,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시위참여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형 3]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을 검증한 모형으로, [모형 2]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연령( $\beta=-1.3686$ ,  $t=-2.64$ )의 부(-)의 영향과 투표활동 지향도( $\beta=1.1163$ ,  $t=2.50$ ) 및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beta=6.3054$ ,  $t=3.12$ )의 정(+)

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활동을 많이할수록, 다양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할수록 시위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에서는 연령×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beta=0.2655$ ,  $t=2.66$ )의 정(+)의 영향과 투표활동지향도×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beta=-0.2423$ ,  $t=-2.81$ )의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을 많이 할수록 시위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4]는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의 상호작용을 검정하는 모형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beta=3.7326$ ,  $t=2.45$ )의 정(+)의 영향과 이념×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beta=-0.1129$ ,  $t=-2.62$ )의 부(-)의 영향만 확인되었다. 즉 평상시 정당과 취미동호회 등 다양한 정치 및 비정치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할수록, 그리고 진보적이면서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가치가 높은 경우 시위참여가 많았다는 것이다.

〈표 4〉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구분	[모형 1] 기본모형		[모형 2] 물질주의 상호작용		[모형 3]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상호작용		[모형 4]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상호작용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추정치	t값
상수	0.9787	0.88	3.7229	0.84	0.1247	0.03	-1.7816	-0.53
성별	0.3127	1.37	1.1871	0.90	-0.6515	-0.49	-0.7268	-0.68
연령	-0.017	-0.20	-1.1459*	-2.22	-1.3686**	-2.64	0.0872	0.23
학력	0.0782	0.71	-0.8855	-1.52	-0.3697	-0.63	0.2681	0.59
소득	-0.0669	-1.47	-0.6101**	-2.62	-0.1965	-0.82	-0.2096	-1.12
이념	-0.1151*	-2.15	-0.4614	-1.33	0.5068	1.54	0.3943	1.94
전통미디어 지향	-0.0031	-0.66	0.0249	0.95	0.0306	1.14	-0.0002	-0.01
투표활동 지향	-0.1229	-1.60	1.7046**	3.77	1.1163**	2.50	0.0242	0.08
공적신뢰 지향	0.2354	1.28	1.9549	1.60	0.4352	0.36	0.6553	1.21
정치효능감 지향	0.0755	0.77	0.2119	0.45	-0.1649	-0.34	-0.2270	-0.56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2.4547*	7.03	8.9330**	4.69	6.3054**	3.12	3.7326*	2.45
비정치 결사체 활동	0.1150	0.44	2.3715	1.59	1.9774	1.28	-0.4237	-0.35
물질주의	-0.0287	-0.18	-0.5640	-0.73	-0.0987	-0.61	-0.0663	-0.42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0.1453	0.85	0.1195	0.70	0.3693	0.42	0.1087	0.63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0.0906	-0.74	-0.0351	-0.28	-0.1105	-0.89	0.6173	0.88
성별×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1639	-0.70	0.1862	0.72	0.2407	1.05
연령×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2050*	2.24	0.2655**	2.66	-0.0269	-0.32
학력×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1741	1.68	0.0884	0.79	-0.0465	-0.46
소득×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0998**	2.40	0.0251	0.55	0.0307	0.76
이념×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0591	0.99	-0.1157	-1.91	-0.1129**	-2.62
전통미디어 지향×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0049	-1.05	-0.0066	-1.27	-0.0005	-0.11
투표활동 지향×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3263**	-4.11	-0.2423**	-2.81	-0.0294	-0.42
공적신뢰 지향×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2882	-1.42	-0.0396	-0.19	-0.0853	-0.76
외적효능감 지향×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0236	-0.28	0.0476	0.52	0.0651	0.75
정치·비정치 결사체×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1.1961**	-3.47	-0.7543	-1.94	-0.2800	-0.85
비정치 결사체×물질/ (참): (권)탈물질주의	-	-	-0.4185	-1.56	-0.3651	-1.22	0.1241	0.48
모형 적합성	F(prob.)	6.90(0.0001)	5.61(0.0001)		4.76(0.0001)		4.32(0.0001)	
	r <sup>2</sup>	0.0768	0.1087		0.0939		0.0859	
	DW	2.11	2.10		2.11		2.11	

\*\*p<0.01, \*p<0.05

###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 가치가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 및 정치적 관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위참여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은 여전히 전통적 요인이 우세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반적 통념이 재확인되었고, 전통적 요인이 두 가지 가치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도 규명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물질주의(5.55) 가치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5.14) 및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4.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위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국민 및 지역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와 언론 및 자기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가 높았다.

둘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도 유효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 중 연령과 소득 및 이념, 그리고 정치적 관여 변수 중 투표활동 지향도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은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이었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은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유효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상대적으로 투표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취미동호회를 포함해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의 시위참여가 높았다. 특히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였다. [모형 1]을 비롯하여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 2], [모형 3], [모형 4]에서도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났고, 추정계수의 절댓값도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적 유대에 기초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위참여를 촉진한다는 서구 및 한국의 경험적 논의(도묘연 2017b, 2021; Schussman and Soule 2005)와 맥을 같이하며, 평상시 결사체의 활동이 시위참여를 확대한다는 사회자

본론의 이론적 및 경험적 논의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평상시 투표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시위는 평상시 다양한 결사체 활동과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의식을 축적한 시민들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위는 진보적 이념과 젊은층이 주도하여 일정 정도 이념 및 세대균열 구조가 반영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소득수준의 영향은 한국의 시위가 서구처럼 중상위 계층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의한다.

셋째, 물질주의의 가치는 연령, 소득, 투표활동 지향도,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촉진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변수의 영향은 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고려한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는 낮은 연령과 소득수준 및 적극적인 투표활동과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추동했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높은 연령과 소득수준 및 낮은 투표활동과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이 시위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즉 물질주의 가치를 소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경제적으로 중상위계층, 평상시 투표 이외에 민원제기와 정치토론과 같은 정치참여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정당과 취미동호회 등 결사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에 의해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전, 즉 경제발전, 범죄 소탕, 방위력 증가의 신체적 안전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시위참여를 이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가치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평상시 정치적 관여와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으로 발현되었다. 이 점은 한국의 시위에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대중들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진 한국의 시위에서 표출된 요구는 물질적 보상이나 경제적 요구가 40%를 차지했다고 한다(동아시아연구원 2008). 즉 전통적으로도 물질주의 가치가 시위의 주요한 이슈였다는 것이다. 시위에서 물질

주의 가치의 표출은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 위기가 지속하는 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열폐자의 양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남북대치라는 상황에서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는 연령과 소득 혹은 평상시 정치참여 활동과 결합하여 시위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는 연령과 투표활동 지향도와,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이념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와 전통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모형 2]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낮은 연령과 높은 투표활동은 직접적으로 시위참여를 이끄는 요인이었으나, 이들 요인은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와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높은 연령과 낮은 투표활동이 시위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즉 국민참여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동시에 연령이 낮고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시위참여가 많았다는 것이다. 반면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진보 이념과 결합하여 직접적 행동으로 발현되었다. 즉 국제적 및 국내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가치가 높고 진보적 정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및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가치 역시 시위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인과 결합이 필요하며,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에 의해 연령과 투표 및 비투표활동의 영향력은 달라졌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요구 역시 시위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전통적인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 가치와 새롭게 확인된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 가치는 모두 우리 사회에 현존하며, 그 인식은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한국 시위의 전면에 등장했던 탈물질주의 가치는 주로 국가권력의 확대에 따른 저항, 국민 참여의 확대, 표현의 자유 확대 등과 같은 권위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국제적 난민과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등 신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탈물질주의 가치 역시 진보적 이념과 결합하여 시위를 이끄는 하나의 이슈로 확인되었다.

##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의 가치는 평상시 이념과 정치적 관여와 결합할 때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탈물질주의 가치 이외에 한국 사회에 현재하는 물질주의 역시 시위참여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을 환기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탈물질주의 유형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둘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질주의는 높은 연령과 소득수준,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 낮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는 높은 연령, 투표 이외의 비투표활동과,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이념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위참여를 추동하였다. 셋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낮은 연령과 소득, 평상시 투표활동,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 그리고 진보 이념은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중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물질 및 탈물질주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시위참여를 추동하지 않으며, 평상시 이념과 태도 및 정치참여 방식과 결부되어 직접적 행동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위참여의 직접적인 동기는 가치보다는 이념이나 정치적 관여의 영향이 더 강하지만,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는 시위참여를 간접적으로 추동하는 잠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탈물질주의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시위는 아노미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를 넘어서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표출하는 축제로, 나아가 제도화된 정치참여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즉 시위의 일상화가 목격되는 것이다. 한국의 2016-17년 촛불집회는 시위



의 일상화 혹은 운동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시위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거리 정치의 요구를 제도권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시위 일상화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편으로는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위라는 직접적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화된 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의 가치에 의해 발현되는 시위의 새로운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물질주의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위의 주요 이슈이다. 경제적 안정을 갈망하는 요구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지속하는 한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에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감은 물질주의의 요구를 거리 혹은 과정에서 분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성상 신체적 안정을 희망하는 대중의 요구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물질적 및 신체적 안정이 보장된 사회를 상정했다면, 한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물질주의의 가치가 유세한 동시에 시위의 이슈로 유효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둘째, 신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탈물질주의의 가치 역시 시위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무게감은 탈물질주의의 가치를 권위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과 참여 혹은 개인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했다. 물론 이들 가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현존하며, 전통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시위참여를 이끌고 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규제를 반대하는 시위의 주요한 동기는 자유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사회 운동이 표방했던 여성권의 신장, 국제난민에 대한 지원, 성적 소수자의 존중 등의 탈물질주의의 가치도 진보적 이념과 결합되어 우리의 시위 현장에서 표출되는 주요한 이슈이다. 우리는 이미 먹거리 안정성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2008년 촛불집회도 경험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경제적 안정을

담보한다면, 그리고 좀 더 민주주의가 공고해진다면, 신사회 운동적 탈물질주의 가치는 시위 현장에 더 많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애초 자료수집이 시위참여자와 비참여자에 초점을 두지 않아 참여자에 비해 비참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설문조사의 시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촛불집회 참여와 일반시위 참여를 분리한 설문문항을 제시했으나, 촛불집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위참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코로나 19 종식 이후 개인의 시위참여가 다시 활성화된 시점에 자료를 수집하여 이 연구의 주장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20. 『2019년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 김명숙. 2008.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영향요인과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권 1호, 61-78.
- 김상돈·김태준. 2008. “자발적 결사체 가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효능감과 시민권 덕목의 매개효과분석.” 『사회과학연구』 16집 1호, 68-113.
- 김옥. 2010.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화: 거시적 변화에 따른 미시적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33-59.
- 김옥·이이범.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권 2호, 89-124.
- 도묘연. 2017a.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의정연구』 23집 2호, 109-146.
- 도묘연. 2017b.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 구조.” 『현대정치연구』 10권 2호, 5-41.
- 도묘연. 2021.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30집 1호, 93-126.
- 동아시아연구원. 2008. 『집회시위를 통해 본 시민사회 프로젝트Ⅱ 민주화 이후 항의의 정치: 특징과 개선방향』.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m/research\\_view.asp?intSeq=14373&code=70&menu=](http://www.eai.or.kr/m/research_view.asp?intSeq=14373&code=70&menu=)(검색일: 2021.01.21.)
- 류태건·차재권. 2021. “지난 40년간 한국의 정치향의의 사회적·집단적 변화추이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5집 5/6호, 35-68.
- 박영득·이재묵. 2017. “SNS활용과 정치참여 한국 제20대 총선 분석.” 『연구방법논총』 2집 1호, 1-22.
- 성동규·양소정·김양은·임성원. 2007.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미디어 영향력 비교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호, 1-50.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2권 2호, 221-244.

- 양해만·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집 1호, 75-100.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193-214.
- 이갑윤. 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 9권 1호, 95-119.
- 이정기. 2011.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미디어 이용량, 미디어 신뢰도, 정치신뢰도, 정치효능감이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 경험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18호, 74-109.
- 이정기·정대철. 2009. “광우병 촛불집회에 나타난 미디어 2.0 현상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6호, 193-244.
-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집 3호, 791-820.
- 정병기. 2017. “68혁명운동과 비교한 2016/2017 촛불 집회의 비판 대상과 참가자의식.” 『동향과 전망』 101호, 261-291.
- 정병기. 2018. “68혁명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 운동양상의 변화와 의미.” 정병기·도모연·김찬우. 『2016-17년 촛불집회: 민주주의 민주화, 그 성격과 의미』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5-225.
- 조기숙·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 차현진. 2021. 『촛불시위의 미시적 동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전망 2022』. 아산: 치안정책연구소.
- 홍혜승·류은영. 2015.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인사행정학보』 14권 2호, 131-155.
- Bomhoff, Eduard J., and Mary M. Gu. 2012. “East Asia Remains Different a Comment on the Index of “self-Expression Values,” by Inglehart and Welz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3): 373-383.
- Cho, Kisuk and Hye Yun Park. 2019. “Who Protest and Why? The Evolution of South

- Korean Civic Activism Since 2019.” *Korea Observer* 50(4): 535-563.
- Cho, Seong kyung, and In-Jin Yoon. 2015.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ost-Materialism.” *Development and Society* 44(3): 495-533
- Gibson, James L. and Raymond M. Duch. 1994. “Postmaterialism and the Emerging Soviet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7(1): 5-39.
- Inglehart, Ronald and Paul A. Abramson. 1994. “Economic Security and Value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36-354.
-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991-1017.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nutsen, Oddbjørn. 1990. “Materialist and Postmaterialist Value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Nordic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Comparative Politics* 23(1): 85-104.
- Maslow, Abraham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1998.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Milbrath, Laster W. and M. La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Norris, Pippa and Stefaan Walgrave and Peter Van Aelst. 2005. “Who Demonstrates Antistate Rebles, Conventional Participants, or Everyone?” *Comparative Politics* 37(2): 189-205.

-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pp, Karl-Dieter. 1990. "Postmaterialism, Collective, and Political Prote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1): 212-235.
- Pollock, Phillip H. 1983. "The Participatory Consequ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 Research Note."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6(3): 400-409.
-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Rucht, Dieter. 2007. "The Spread of Protest Politics." Russell J.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 10.1093/oxfordhb/9780199270125.003.0038
- Schussman, Alan and Sarah A. Soule. 2005. "Process and Protest: Accounting for Individual Protest Participation." *Social Forces* 84(2): 1083-1108.
- Tarrow, Sidney and Charles Tilly. 2007. "Contentious Politics and Social Movement."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lzel, Christian and Franziska Deutsch. 2012. "Emancipative Values and Non-Violent Protest: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Effec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465-479.

투고일: 2022.02.22.	심사일: 2022.03.25.	게재확정일: 2022.03.25.
------------------	------------------	--------------------

##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otests in Kore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raditional factors,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Do, Myo Yuen |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otests. To be specific,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protes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terialism, post-materialism, and traditional factors namel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deology,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analysis period and subjects were limited to general protests after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alues of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showed awareness above the median value. Awareness of materialism was relatively higher than of post-materialism.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wo values influenced protest participation only through interaction with traditional factors. Materialism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relatively high age and income level, non-voting activity, and low political-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y. One of the types of post-materialism: Participation-expression,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high age and non-voting activity. Another type of post-materialism: Advocacy,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ideology. Third,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factors was still significant. Low age and income, voting activity, political-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y, and progressive ideology promoted protest participation, with association activities having the highest influence.

---

**Key Words** | Protest Participation, Materialism, Post-Materialism, Political Engagement, Ideology





# 한국인의 친미(반미) 감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박정훈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정승철 | 제주평화연구원\*\*

## | 국문요약 |

한국사회 내에는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친미세력과 비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반미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바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믿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과 반미성향을 지닌 개인들 가운데 어느 집단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상대편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여론조사 데이터와 통계분석법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정치체제와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적인 개인은 친미성향을 지니고 진보적인 개인은 반미성향을 보인다는 단순한 시각으로는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한국인, 친미감정, 민주주의, 여론조사, 경험적 분석

\* 제1저자

\*\* 교신저자

“우리는 더욱 더 많은 민주주의와 반미를 결합시켜야 한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발표하고 소통하면서, 정치의 공간을 더 크게 열어야 한다. 모두가 반미 행동의 주체가 되어 힘을 모으자”(참세상, 2002/12/12)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중략)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파존 TV, 2019/08/03)

“정부는 지나친 반미시위를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정부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엄단해줄 것을 요구한다”(태영호 당시 전 주영(駐英) 북한공사, 배재성 2018에서 재인용)

## I.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정치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선거와 정당정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광장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이지문 2017). 이러한 “광장정치”는 2002년 여중생 효순이·미선이 사망사건,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등 최근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관통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급기야 2016년 말부터 매주 벌어진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의 이른바 “반핵반김” 집회들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태극기집회”의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장정치는 한국사회의 소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된 정치 동원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광장정치의 전개 과정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그리고 기존 문헌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주도한 세력의 이념성향에 따라 미국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미국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세력 모두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은 한국이 근대국가 형성과정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1980년대를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특히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던 것과는 다르게 1980년 5월 일어난 광주항쟁에 사실상 무관심했던 미국의 태도에 대해 당시 대학생들이 가졌던 실망감은 이후 반미감정 형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이강로 2004, 250). 이후 반미세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세력화에 성공함과 동시에 한국 시민사회 형성을 주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집단들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었던 미국에 대한 호의와 지지를 계승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북유화정책이 가시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정치화되었다(엄한진 2004; 이수인 2004). 주목할 점은 2020년대 초반 현재까지도 맨 앞에 소개된 상반된 입장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친미와 반미성향을 보여주는 세력 모두 최소한 광장정치의 단계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친미(반미) 감정과<sup>1)</sup>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와는 어떤 상

1) 본 연구에서는 반미주의와 반미감정을 구분하고 반미감정을 측정하도록 하겠다. 오창현 (2015, 193)에 따르면 반미주의는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또는 이념적 적대감”을 가르치고 반미감정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반미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적대적인’ 비판”을 지칭한다. 즉, 반미감정은 “미국과 미국의 정책이나 행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 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관관계가 있는가? 다시 말해 친미성향을 지닌 집단일수록 민주주의적 가치 및 정치체제에 더욱 호의적인가 혹은 그 반대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한국인의 친미 혹은 반미성향을 규범적 판단에 치우쳐 친미=(친일)=극우=반민주, 혹은 반미=(반일)=좌파(혹은 종북)=반체제 등과 같이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했던 기존연구들과 언론보도들은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가 한국정치의 균열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이내영 2011), 그리고 여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공고화 과정에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장우영 2016), 친미 혹은 반미성향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학문적 작업은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형(linear)과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높은 친미성향은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지지수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해 강한 호감을 가질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근간에는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체제, 그리고 군부가 이끄는 정치체제에 대해 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는 한국사회와 학계에서 지금까지 친미(혹은 반미) 감정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 분석 없이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다 다면적(multifaceted)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다만 한편으로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주주

---

것”으로 간주한다.

의 퇴행(backsliding) 혹은 탈공고화(deconsolidation)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친미적 성향을 보이는 집단이 현 민주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더욱 강력한 반민주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는 한국의 친미(반미)성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제III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 가설들을 소개하며, 제IV장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의 성격과 부합하는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설검정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도 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의의를 한국인의 친미(반미)성향뿐만 아니라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소개한다.

## II. 한국 사회 내 친미/반미감정 발전의 배경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타국인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막대한 경제·문화적 지원을 통해, 때로는 무력개입을 통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은 단순히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국의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로 부상했다.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호감(혹은 반감)은 한 국가의 정치적 경로를 설정하거나 변화하는데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1973년 친미장교들이 벌인 칠레의 쿠데타와 1979년 반미 이슬람주의 엘리트들이 주도한 이란혁명은 수많은 사례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Gustafson 2007; Baxter and Akbarzadeh 2008). 한국의 경우에도 일제 강점기의 종식과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과 분단에 이르기까지 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절

대적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적어도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전까지는 미국에 대한 호감이 정치적 견해와 계층별 차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었다는 점이다(Shorrock 1986, 1198-1199). 이러한 친미성향의 확산에는 물론 국시로 자리매김한 반공주의의 영향력도 컸지만(전상숙 2011, 159-161), 당시 모든 면에서 선진적이었던 미국에 대한 대중들의 동경도 큰 역할을 했다(전상인 2003, 200-203).

19세기 말부터 장기적으로 형성된 불평등한 한미관계,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시각을 비롯한 ‘구조적’인 요인에 천착한 연구도 있으나(커밍스 2003), 학자들은 대체로 1980년의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한국군을 방조했던 미국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오늘날의 반미정서를 촉발한 직접적인 기원으로 본다(Shin 1996; 전상인 2003; 이강로 2004; 김용철·최종건 2005).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임했던, 그리고 당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의 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미국의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적인 인식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특히 자주적 민주화와 통일의 직접적 걸림돌을 미국으로 상정한 대학생들의 불만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출되었는데,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이후 끊임없이 벌어진 미국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거와 방화는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른바 ‘운동권세력’으로 조직화 된 이들 대학생은 진보적 종교인들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와 반정부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미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내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Jung 2010, 952-953). 즉, 한국의 반미주의는 최소한 1980년대 말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사회의 변화로부터 촉발된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은 미국에 대한 감정과 민주주의의 선호에 대한 관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 번째는 반미감정의 대중화이다. 1980년대 확산하기 시작했던

반미감정은 1990년대 들어 잠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였더라면 한국은 결코 민주화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 또한 확산하였기 때문이다(Jung 2010, 953).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민주화되기 시작한 한국사회 내에는 반미감정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민주화를 시작한 한국사회는 그동안 군부정권 시기 동안 억눌려있던 다양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반미감정 또한 이 가운데 하나였다. 민주화는 곧 시민들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누리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권위주의 정권에서 억압받던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Oh and Arrington 2007, 334). 게다가 한국의 민주화 이후 들어선 김영삼 정부(1993-1998)는 시민사회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Oh and Arrington 2007, 341-342). 이어서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들어서자 (한국의 민주화 이전까지는 비주류에 속하고 있던) 반미성향을 지닌 정치인, 시민단체, 개인들의 발언권은 한국 사회 내에서 더욱 강해졌다.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1988년 하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한국인들의 자긍심은 상승하였으며 이제는 대외관계에서 한국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전상인 2003, 207). 이에 한국사회 내에서는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보다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한국정부 또한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Lee 2007, 479).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화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개방 압력과 한·미 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 Agreement) 개정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이슈들은 반미감정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hin 1996; Oh and Arrington 2007).

나아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 간의 경제력과 군사력 차이가 커짐에 따라 한국인들은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이는 곧 패권국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등장할 수 있는 여유를 한국사회가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Lee 2007; Jung 2010). 특히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2001-2008)의 일방주의적인 행보와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미관계의 악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촛불시위는 반미감정이 기존의 민주-반민주 구도를 넘어 일반대중, 특히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Jung 2010, 953; 이강로 2004, 255-6). 이와 관련해 김용철과 최종건의 공동연구(2005)는 나이가 적을수록 반미행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른바 ‘저항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분석한 조기숙(2009) 역시 집회참여와 이념적 정향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겪으며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시대별, 사건별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표 1>은 2010년대 한국인들이 미국을 얼마나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1>에 나오듯이 2013년부터의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미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과 2018년은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2020년 들어 6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sup>2)</sup>

---

2) 2020년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이전 연도들보다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2020년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질문들이 코로나19의 확산 문제에 집중되어있다는 점, 한국인의 93%가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함을 보였다는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우호/비우호적인 인식 (%)

연도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	모름	응답 없음
2013	8.65	70.58	16.56	2.22	1.73	0.25
2014	8.52	73.74	15.16	1.88	0.69	-
2015	8.86	75.42	12.54	1.39	1.39	0.40
2017	7.13	67.62	21.98	1.29	1.19	0.79
2018	9.83	70.51	15.79	2.38	1.09	0.40
2019	11.53	64.71	19.09	2.58	1.99	0.10
2020	6.63	53.15	30.06	8.40	1.51	0.25

출처: 퓨리서치센터 2013-2020 여론조사 데이터 (2016년은 한국에서 여론조사 시행 안함)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보수’ 혹은 ‘애국’세력의 일상적 동원과 이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친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프레임의 등장이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등장 이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적 개신교 지도자들은 특히 정권의 대북포용정책과 언론개혁 움직임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이수인 2004, 280-282). 그들의 반감은 곧 전직 직업군인과 일부 원로 지식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정부 대중 집회의 형식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한미동맹 수호와 미국에 대한 지지는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인 ‘친북좌익’세력의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엄한진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4년 9월 9일 전직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예비역 장성, 언론인, 그리고 교육계, 법조계, 의약계, 종교계 등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서명하였다(월간조선 2004/10). 이 선언문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친북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을 맹방이라 지칭하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중앙일보 2004/09/09).

이후 친미감정은 보수세력의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그들의 집회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계기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이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개최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연구한 김왕배(2017)는 탄핵이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중북좌파’ 세력이 세운 계획의 결과라는 인식을 집회참가자들 서로가 공유하며 이를 일종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친미와 반미감정의 대칭적 구도의 성장은 최근 한국 정치의 가장 분명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이념적 양극화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이내영·정환을 2005; 조성환 2016). 흥미로운 점은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의 친미와 반미세력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핵심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전상숙 2011, 161). 이는 박근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 촛불집회에서 사드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반미세력의 상징적인 주장들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적폐청산’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과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 태극기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는 현재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연합뉴스 2017/10/28; 최용략 2019).

그러나 김용철(2016)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과 공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경험적인 증거는 미약하다. 최근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더딘 민주주의의 발전이 특정 해외국가(혹은 집단)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표출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행사하는 정치세력(예를 들어, 극우 포퓰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의 부상, 그리고 이로 인한 이념적 양극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Enyedi 2016; Mietzner 2018), 한국인의 친미 혹은 반미감정의 기저에도 겉보기와는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가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방법론적으로 관련 연구들은 친미와 반미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시간에 따른 의미의 유동성과 개념의 다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한국의 반미주의 혹은 반미감정은 특정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예: 수출 규제, 사드 배치), 미국의 국내제도(예: 총기 소지), 미국적 가치(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특정 지도자(예: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반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때로는 한꺼번에 표출되기도 했다(이현송 2015). 마찬가지로 친미주의 혹은 친미감정 역시 6.25 전쟁과 냉전종식,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적 위상 상승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세대별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남궁곤 2000). 더욱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미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친미와 반미성향이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김용철·최종건 2005).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가 보다 정밀한 개념화 작업 대신 단순히 미국에 대한 추상적 호오(好惡) 혹은 특정 행동(예를 들어, 반미집회)에 대한 참여의사표시로 친미와 반미주의 혹은 감정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더욱 정밀한 개념화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조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친미와 반미성향과 이에 따른 민주주의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와 이를 통해 검증할 가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 III. 데이터 및 변수의 조작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물음은 “친미, 혹은 반미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한국의 정치체제로 더욱 강하게 선호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친미 혹은 반미성향 중에 어느 쪽이 더욱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설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퓨리서치센터 2017년 봄 세계여론조사(Pew Research Center Spring 2017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sup>3)</sup>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자료에는 1,01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 및 이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측정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조작화(operationalize)하기 위해서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은 다음 질문들을 이용할 것이다.

- 1) 시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고 무엇이 법으로 정해질지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직접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a)
- 2)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무엇이 법으로 정해질지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정치체제(간접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b)
- 3) 국회와 법원으로부터의 개입 없이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c)
- 4)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

3) 본 연구에 2017년 여론조사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본 자료가 미국에 대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설문지에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퓨리서치센터 2016년 여론조사의 경우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2018년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없었다. 2019년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은 있었으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만한 질문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이 견고함(robust)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걸쳐 동일한 경험적 증거가 나타남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여론조사 자료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은 본 연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2017년 여론조사 자료만을 경험적 분석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대 초반 혹은 그 이전의 한국사회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하는가? (Q29d)

5)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29e)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자료에서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다섯 가지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유, 평등, 인권 등 민주주의와 연관된 가치보다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체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지도자 선출 혹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반영되는지 등 제도적 특징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그 외의 정치체제를 구분하는 이른바 최소주의적(minimalist), 혹은 선거주의적(electoralist) 민주주의의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Diamond 1999, 7-10). 아시아안 바로미터 4차 여론조사 (Asian Barometer 4<sup>th</sup> Wave Survey) 자료의 경우 개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 국가 내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관들에 대한 신뢰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는지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안 바로미터 여론조사 자료의 단점은 응답자들이 미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아시아안 바로미터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친미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개인의 친미성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끼치는 영향 연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자료가 아시아안 바로미터 자료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험적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질문들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

4) 아시아안 바로미터 4차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Q164, Q170, Q171으로 총 3건, 선택지 중에 미국을 포함하여 미국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Q163, Q166, Q167으로 총 3건뿐이다.

묻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질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응답자가 직접 및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반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매우 좋음”과 “좋음”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은 “매우 나쁨”과 “나쁨”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응답들을 대표한다.

〈표 2〉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모름	응답 없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Q29a)	22.28	53.96	17.62	2.38	3.37	0.40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Q29b)	19.50	59.01	15.54	2.18	3.17	0.59
강력한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인식(Q29c)	4.75	18.91	43.07	30.50	2.67	0.10
전문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인식(Q29d)	5.74	45.74	33.96	7.82	6.44	0.30
군부의 지배에 대한 인식(Q29e)	1.09	6.93	33.17	57.92	0.79	0.10

<표 2>에 나오듯이 직접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76.24%가 좋다고 답변하였다.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응답은 78.51%가 좋다고 답하였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 없이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한 응답은 73.57%가 나쁘다고 답하였다.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41.78%가 나쁘다고 답한 반면 51.48%가 좋다고 답하였다. 즉, 시민들은 전문가가 결정을 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아니어도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응답은 91.09%가 나쁘다고 답하였다.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 대한 경험 때문인지 한국 시민들은 군부가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 질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응답 간의 상관관계는 부

록의 <표 6>을 참고 바람).

회귀분석을 위해 첫 번째(Q29a)와 두 번째(Q29b) 질문의 응답 가운데 “매우 좋음”과 “좋음”은 각각 4와 3으로, “매우 나쁨”과 “나쁨”은 각각 2와 1로 입력하였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Q29c, Q29d, Q29e) 질문은 “매우 나쁨”과 “나쁨”을 각각 4와 3으로, “좋음”과 “매우 좋음”은 각각 2와 1로 입력하였다. 이는 다섯 질문에 대한 응답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함이다 (즉, 수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질문은 하나씩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한국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독립 및 통제변수에 따라 각 정치체제에 대해 어떤 인식이 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다섯 가지 질문들을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 factor analysis)을 통해 하나의 종합적인 요약지표(summary index), 즉 ‘민주주의 지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주축요인분해법을 통해 구축한 민주주의 요약지표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 최솟값은 -3.891, 최댓값은 1.918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지수가 높을수록 그 개인은 민주주의를 좋은 정치체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본 지표는 의미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 즉 한국인의 친미 성향이며 다음 질문들을 이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 및 조작화 하였다.

- 1) 당신은 미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가? (Q12a)
- 2) 당신은 미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가? (Q12b)
- 3) 미국은 당신의 국가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 다소 위협이 될 것,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Q17b)
- 4) 당신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Q30)

- 5) 당신의 국가에 미국의 사상과 관습(ideas and customs)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31)
- 6) 당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식 사상(American idea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32)

이처럼 응답자의 친미성향을 단지 하나의 문항이 아니라 여러 문항에 대한 응답을 묶어 하나의 종합적인 지수를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친미가 단순히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응답자의 모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응답자의 모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영향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미국의 가치 및 문화에 대한 감정 등이 결합된 다면적(multifaceted)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Hollander 1992, 334-35; 이강로 2004, 243). 즉, 하나의 문항에 대한 응답만으로는 응답자가 친미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반미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단편적으로밖에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응답자가 여러 문항에 답한 결과를 고려하여야 그 사람의 성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에 나온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 가운데 74.75%는 미국을, 86.53%는 미국인을 우호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12.28%만이 미국이 한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즉,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는 것과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문항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본 연구가 2017년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한 변수인) 2017년 취임 직후부터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한국 극우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63%만이 신뢰를 표했다. 미국의 사상과 관습이 한국에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좋게 인식한 비율은 응답자의 54.65%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8.42%였다<sup>5)</sup> (각 질문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의

---

5) 다만 설문 문항에 “American idea”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기에



<표 7>을 참고 바람).

<표 2>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 (%)

미국에 대한 우호/비우호적 인식 (Q12a)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	모름	응답없음
	7.13	67.62	21.98	1.29	1.19	0.79
미국인에 대한 우호/비우호적 인식 (Q12b)	매우 우호적	다소 우호적	다소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	모름	응답없음
	7.92	78.61	8.32	0.50	4.16	0.50
미국이 한국에 위험인지에 대한 인식(Q17b)	매우 큰 위험이 될 것	다소 위험이 될 것	전혀 위험이 되지 않을 것		모름	응답없음
	69.41	16.93	12.28		1.09	0.30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신뢰수준 (Q30)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별로 신뢰 안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모름	응답없음
	2.87	13.76	48.12	29.90	4.85	0.50
미국의 사상과 관습이 한국에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Q31)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모름	응답없음
	54.65	34.65			8.61	2.08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 인식(Q32)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모름	응답없음
	78.42	15.94			4.26	1.39

그 정의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회귀분석을 위해 각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은 수치가 높을수록 미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도록 재입력하였다. 첫 번째(Q12a)와 두 번째(Q12b) 질문의 응답 가운데 “매우 우호적”과 “다소 우호적”은 각각 4와 3으로, “다소 비우호적”과 “매우 비우호적”은 각각 2와 1로 입력하였다. 세 번째(Q17b) 질문은 본래 설문지의 응답대로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은 1, “다소 위협이 될 것”은 2, 그리고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은 3으로 입력하였다. 네 번째 질문(Q30)에 대한 응답은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한다”를 각각 4와 3, “별로 신뢰 안한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2와 1로 입력하였다. 다섯 번째(Q31)와 여섯 번째(Q32) 질문은 “좋게 생각한다”를 1로 “안 좋게 생각한다”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입력하였다.

본 독립변수 역시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 factor analysis)을 통해 여섯 가지 질문들을 하나의 종합적인 요약지표로 묶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미국에 대해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친미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약지표를 통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축요인분해법을 통해 구축한 친미성향 요약지표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 최솟값은 -3.630, 최댓값은 3.655이다. 요약지표 수치가 높은 한국인일수록 그 개인은 다방면에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친미성향 요약지표를 각각 최하위 25%, 중하위 25%, 중상위 25%, 최상위 25% 집단으로 분류하고 친미성향이 높은 집단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지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측정 및 조작화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일 것이다.

- <세부가설 1>: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직접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2>: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간접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3>: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4>: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5>: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일수록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세부가설 6>: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지닌 시민은 적극적인 반미성향을 지닌 시민보다 민주주의 체제에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언급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외에도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주요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할 것이다. 통제변수로 사용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는 성별(Q144), 연령(Q145), 교육수준(Q159), 소득수준(Q160), 그리고 정치성향(Q164)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인 터미변수로 입력되었다.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1, 중학교 졸업자는 2, 고등학교 졸업자는 3, 대학졸업자는 4, 그 이상은 5로 입력되었다. 소득수준은 최하위 25%는 1, 중하위 25%는 2, 중상위 25%는 3, 최상위 25%는 4로 입력되었다. 정치성향은 0~6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0은 응답자가 본인이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한 경우, 6은 응답자가 본인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모형2>에는 각 지역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을 기저(base)로 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를 더미 변수가 추가할 것이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의 <표8>을 참고 바람).

#### IV. 경험적 분석결과 및 해석

통계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TATA 16.0 버전이다. <표 4>에 언급된 <모형 1>과 <모형 2>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에 관한 다섯 문항 (Q29a, Q29b, Q29c, Q29d, Q29e)의 응답들을 주축요인분해법으로 종합한 민주주의 요약지수이다. 이 변수는 최솟값은 -3.891, 최댓값은 1.918이다. 이처럼 이 변수의 수치는 연속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모형 1>과 <모형 2>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모형 3>에서 <모형 7>은 민주주의 인식지수를 만드는데 사용한 각 다섯 문항이 각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각 모형의 간소화를 위해 문항의 응답은 긍정을 1로, 부정을 0으로 재입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모형의 종속변수는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가 되었기 때문에 <모형 3>에서 <모형 7>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응답 가운데 “모름”과 “응답없음”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설의 방향에 맞추고 통계분석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와 친미성향 모두 수치가 높을수록 각각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강한 친미성향을 나타내도록 변수들은 재입력되었다. 따라서 친미성향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가 양수(positive number)이면 개인들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친미성향 변수의 계수가 음수(negative number)이면 개인들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이들이 민

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친미성향 변수 외에 나머지 변수들도 계수들이 양수이면 변수들의 수치가 증가할수록 이는 개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른 각 독립 및 통제변수의 계수는 모두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ceteris paribus*)”이라고 가정하고 해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분석 모형에는 이 점을 보정해주는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였다.<sup>6)</sup>

〈표 4〉 한국인의 친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모형 1 민주주의 선호도	모형 2 민주주의 선호도	모형 3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모형 4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모형 5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형 6 전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모형 7 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미성향	-0.180*** (0.044)	-0.183*** (0.049)	0.061 (0.059)	0.159 (0.145)	-0.276*** (0.061)	-0.168 (0.129)	-0.495*** (0.121)
성별	0.131* (0.061)	0.139 (0.086)	-0.022 (0.094)	0.909*** (0.201)	-0.389** (0.161)	-0.137 (0.182)	0.275 (0.328)
연령	-0.008*** (0.002)	-0.008*** (0.003)	-0.007 (0.005)	-0.016* (0.009)	-0.034*** (0.003)	-0.001 (0.006)	0.002 (0.008)
교육수준	0.095* (0.047)	0.095* (0.054)	0.092 (0.140)	0.207 (0.188)	0.235** (0.102)	-0.054 (0.147)	0.277 (0.249)
소득수준	0.023* (0.012)	0.021* (0.012)	-0.027 (0.018)	0.043*** (0.008)	0.021 (0.015)	-0.028 (0.027)	0.093*** (0.034)
정치성향	-0.071*** (0.016)	-0.064** (0.029)	-0.211*** (0.057)	0.021 (0.071)	-0.145** (0.060)	-0.055 (0.045)	-0.109 (0.096)
경기도		-0.081 (0.107)					
강원도		-0.221 (0.208)					
충청도		-0.142 (0.131)					

6) 개인별 구체적인 가중치(*weight*) 수치는 퓨리서치 2017 여론조사 자료에서 제공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전라도		-0.012 (0.126)					
경상도		-0.240** (0.117)					
제주도		0.913* (0.548)					
상수	-0.103 (0.125)	-0.001 (0.290)	2.276*** (0.630)	0.627 (1.002)	2.350*** (0.207)	0.397 (0.486)	1.055 (1.198)
R-sq	0.1152	0.1279					
Pseudo R-sq			0.0234	0.0523	0.1168	0.0111	0.0823
응답자 수	592	592	631	630	635	618	643

모형 1과 2는 선형 회귀분석, 모형 3, 4, 5, 6, 7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비고: Two-tailed test, \*p<0.1, \*\*p<0.05, \*\*\*p<0.01

<모형 1>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친미성향 지수가 1 상승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0.180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한국의 여러 지역을 더미변수로 추가한 <모형 2>에서도 한국인의 친미성향 지수가 1 상승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0.183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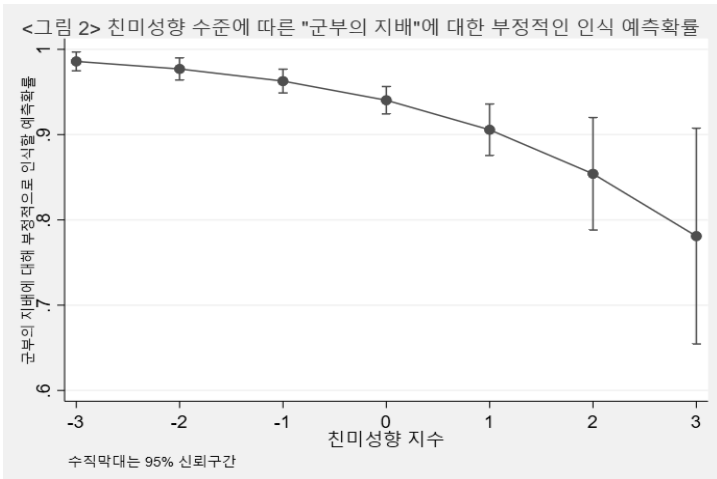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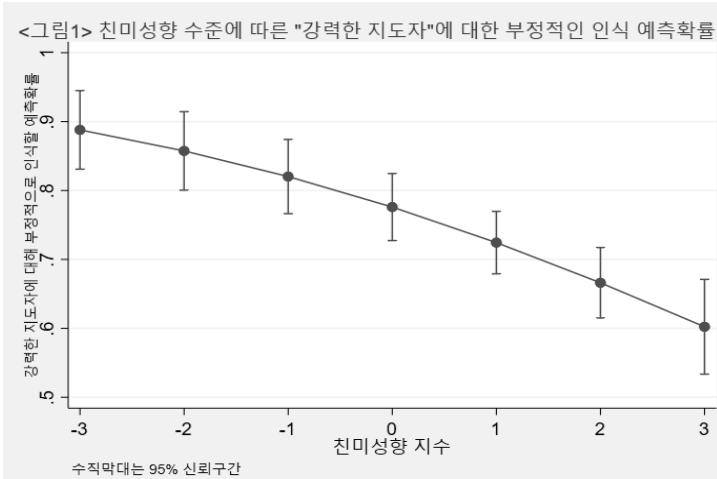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측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종합적으로 친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요약지표를 구축하는데 사용된 다섯 가지 문항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 3>에서 <모형 7>까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모형 5>의 결과에 의하면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인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또한, <모형 7>의 결과는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본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친미성향이 높은 시민들일수록 강력한 지도자와 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았다. 한편, 친미성향은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리고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설들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설 1>, <세부가설 3>, 그리고 <세부가설 5>의 예상과는 반대로 친미성향과 민주주의 지지수준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경험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나머지 <세부가설 1>, <세부가설 2>, 그리고 <세부가설 4>에 대해서는 가설을 검증할 충분한 경험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모형들의 경우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한 <모형 1>과 <모형 2>와 달리 그 계수들을 직접 해석할 수 없으므로 (친미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시키고)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ies)을 계산하여 해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형 5>의 결과에 따르면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시민들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낮아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개인의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0.8880인 반면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그 확률은 0.6023으로 떨어졌다. 즉, 친미성향이 강한 개인들일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낮은 것이다. 또한, <모형 7>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들의 친미성향이 강할수록 군부가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낮아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개인의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군부의 지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0.9858인 반면 친미성향이 3인 경우 그 확률은 0.7810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친미성향이 강한 개인들일수록 군부가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7) 다만, <모형 7>의 결과는 해석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미성향이 높은 개인(친미



성향 지수 3)일수록 군부의 지배에 대해 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지만 여전히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0.7810에 이른다. 따라서 친미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군부의 지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는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헤치는 군부의 지배를 옹호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였던 개인의 친미성향 외에 몇몇 통제변수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모형 1>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민주주의 선호도가 0.13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1$ ) 지역변수를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상관관계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모형 4>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계수 해석을 용이하게 해줄) 승수비(odds ratio)에 의하면 그 확률은 148% 높았다( $p < 0.01$ ). 반면, <모형 5>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일 확률은 32.2%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p < 0.01$ ) 그 결과에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나머지 모형들에서는 성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연령변수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개인의 연령이 1살 상승하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0.008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두 모형 모두  $p < 0.01$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모형 4>)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모형 5>)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1$ ,  $p < 0.01$ ). 보다 구체적으로, 승수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모형 4>에서는 연령이 1살 상승할수록 간접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연령이 10살 상승하면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하락할 확률은 16.0%인 것이다. <모형 5>에서는 개인의 연령이 1살 상승할수록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3.3%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의 연령이 10살 상승할 경우 강력한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33.0%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든 모형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개인들은 젊은 개인들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경제발전 성과와 집단주의적 상징과 의례를 직접 경험한 장년층 이상의 국민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미화된 기억을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다는 시각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홍성민 2015).

한편,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의 한 단계 상승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0.095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두 모형 모두  $p < 0.1$ ). 이는 개인의 교육수준과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5>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26.5%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의 정치참여 동기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특히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다줄 후보를 지지하려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문우진 2009). 즉, 이 주장의 가정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거에서 지지하고 승리하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모형 3>과 <모형 4>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직접 혹은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정치참여 동기, 민주주의 지지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는 없었다.

소득수준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 나타나듯 그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0.023과 0.021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두 모형 모두  $p < 0.1$ ).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4>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소득수준 단계가 높아질수록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확률( $p < 0.01$ )이 높아졌다. 승수비를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면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4.4% 상승하였다. 또한 <모형 7>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군부의 지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확률

( $p < 0.01$ )이 높아졌다. 승수비를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면 군부의 지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9.8%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비록 미약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Mischler and Rose 2001). 하지만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득수준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Sing 2012)도 있기에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성향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 보수적일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01$ ,  $p < 0.05$ ).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 의하면 정치성향이 한 단계 보수적으로 상승할수록 개인의 민주주의 지지 수준은 0.071, <모형 2>에 의하면 0.064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모형 3>에서 보수적일수록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29.6% 낮다는, 그리고 <모형 5>에서는 보수적일수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13.5% 낮다는 세부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보수적일수록 다른 어떤 민주주의 체제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수준이 진보적인 개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보수적일수록 자유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수준과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다(지병근 2013).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보수적일수록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최장집 1993).

주목할 점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내 친미성향을 보이는 개인들과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개인들을 반드시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친미성향과 정치성향 모두 <모형 1>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선호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0.2725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8> 참고). 만일, 보수성향을 지닌 개인들과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동일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두 변수 모두 민주주의와

관련된 특정 종속변수에 같은 수준의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모형3>에서는 정치성향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개인의 친미성향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형 7>에서는 미국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들의 정치성향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각 변수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한 <모형 5>의 경우 개인의 친미성향과 정치성향 모두 동일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친미성향과 정치성향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동일한 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서론에서 언급한 친미=(친일)=극우=반민주, 혹은 반미=(반일)=좌파(혹은 중북)=반체제라는 공식은 기존의 믿음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명확하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2>에 나타나듯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영남지역은 서울과 비교하였을 때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수준이 0.240 낮았다( $p<0.05$ ). 이러한 결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들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른바 보수정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영남지역이라는 점(윤광일 2019)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라운 점은 아니다. 이에 비해 제주 지역은 서울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퓨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자료의 표본(1,010명)에는 애초에 제주도 응답자가 10명뿐이기 때문에 본 결과는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표 5>는 <세부가설 6>에 대한 검증을 위해 <표 3>의 <모형 2>를 제외한 통계분석의 결과이다. <모형 8>의 결과에 따르면 친미성향 지수 최하위 25%와 비교하여 중하위 25%와 최상위 25% 집단은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각각 0.141, 0.49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5$ ,  $p<0.01$ ). 특히 최하위 25% 집단과 비교하여 친미성향 최상위 25% 집단이 중하위 25% 집단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세부가설 6>

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모형 8>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모형 11>과 <모형 13>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각 모형에서 친미성향 최상위 25% 집단은 최하위 25%와 비교하여 강력한 지도자와 군부 통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각각  $p < 0.01$ ,  $p < 0.05$ ). 강력한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친미성향 최상위 25%가 최하위 25%보다 27.1% 낮았으며 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35.3% 낮았다. 이처럼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지닌 한국인들이 강력한 지도자와 군부통치에 대해 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친미(그리고 반북)가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채장수 2018).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모형 9>),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모형 10>)와 전문가들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모형 12>)은 개인의 적극적 친미(혹은 적극적 반미) 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5> 친미성향 수준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변수	민주주의 지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미성향						
중하위25%	-0.141** (0.055)	0.153 (0.186)	0.346 (0.274)	-0.078 (0.196)	-0.176 (0.152)	-0.017 (0.278)
중상위25%	-0.117 (0.129)	0.317 (0.245)	0.354 (0.221)	-0.336 (0.320)	-0.215 (0.239)	-0.518 (0.362)
최상위25%	-0.499*** (0.117)	0.231 (0.149)	0.464 (0.356)	-0.803*** (0.116)	-0.432 (0.336)	-1.094** (0.426)
성별	0.119*	-0.034	0.902***	-0.401**	-0.145	0.215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변수	민주주의 지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0.058)	(0.098)	(0.198)	(0.162)	(0.191)	(0.316)
연령	-0.008***	-0.008	-0.017*	-0.033***	-0.0002	0.003
	(0.002)	(0.005)	(0.009)	(0.003)	(0.005)	(0.009)
교육수준	0.103*	0.101	0.206	0.239**	-0.051	0.272
	(0.043)	(0.131)	(0.193)	(0.093)	(0.150)	(0.249)
소득수준	0.022	-0.028	0.043***	0.018	-0.028	0.091**
	(0.012)	(0.018)	(0.008)	(0.014)	(0.027)	(0.036)
정치성향	-0.075***	-0.214***	0.023	-0.147**	-0.061	-0.132
	(0.012)	(0.059)	(0.073)	(0.061)	(0.042)	(0.097)
상수	0.051	2.144***	0.396	2.590***	0.577	1.485
	(0.109)	(0.632)	(1.071)	(0.258)	(0.487)	(1.008)
R-sq	0.1162					
Pseudo R-sq		0.0248	0.0541	0.1206	0.0108	0.0801
응답자 수	592	631	630	635	618	643

모형 8은 선형 회귀분석, 모형 9, 10, 11, 12, 13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친미성향 변수의 기저는 “최하위25%”집단이다.  
 비교: Two-tailed test, \*p<0.1, \*\*p<0.05, \*\*\*p<0.01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친미(반미)적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한국 시민들 가운데 친미성향이 높은 개인들일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친미성향이 높아질수록 이들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정치체제와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은 낮아지는 (긍정적인 인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가진 개인들 역시 친미성향이 이들보다 약한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강력한 지도자 및 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친미와 반미성향을 보이는 세력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결부시키고 있다. 광장으로 나온 (친미 혹은 반미) 세력 모두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닐 확률이 다른 이들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과연 친미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주장처럼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이 반민주주의 세력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개인들도 각종 예측확률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이들보다 강력한 지도자 혹은 군부의 지배에 대해 덜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논문을 통해 친미=(친일)=극우=반민주, 혹은 반미=(반일)=좌파(혹은 종북)=반체제 등과 같이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분류는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구조를 명확하게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들

이 상황에 따라 보수적인 정치성향과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 혹은 진보적인 정치성향과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동시에 지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내 갈등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친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퓨리서치센터 세계여론조사 데이터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인데 이 데이터에서는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이 각각 다섯 개씩만 존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친미(혹은 반미)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 그리고 제도적 측면 외에도 민주주의라는 개념·가치·정신·문화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다양한 방면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조작화 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더욱 적실성을 갖추고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김왕배. 2017.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5권, 7-59.
- 김용철·최종건. 2004. “한국인의 반미행동 의도에 대한 인과 분석: 미국의 이미지와 한국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권 4호, 123-143.
- 김용철. 2016.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민주화가 정제된 결합 있는 민주주의.” 『현대정치연구』 9집 2호, 31-62.
- 남궁곤. 2000. “친미주의 공공여론의 세대간 차이에 관한 한국·일본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6권 12호, 159-199.
-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권 4호, 327-349.
- 민중언론: 참세상. 2002. “더 많은 민주주의와 반미를,”(12월12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24955> (검색일:2022/01/31).
- 배재성. 2018. ““가만히 있으라” 태영호, 협박성 이메일에 강연 취소.” (11월8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05783#home> (검색일: 2022/02/04).
- 브루스 커밍스. 2003. “특별기고-한국 반미주의의 구조적 기반.” 『역사비평』 62호, 45-84.
- 엄한진. 2004. “우경화와 종교의 정치화 - 2003년 ‘친미반북집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2권, 80-117.
- 연합뉴스. 2017. “박근혜 퇴진→MB구속 反트럼프...1년만에 바뀐 ‘촛불 구조.’” (10월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8051100004> (검색일: 2020/03/31).
- 오창현. 2015. “한국인의 대미인식 변화에 관한 분석 - 반미감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3집 4호, 189-218.
- 월간조선. 2004.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총 1119명).” (10월호).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410100090> (검색일: 2022/02/05).
- 윤광일. 2019.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국제정치논

- 총』 35권 2호, 37-73.
- 이강로. 2004. “한국내 반미주의(反美主義)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44권 4호, 239-261.
- 이내영·정한울. 2005.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과 한국인의 대미인식: 한미동맹 위기론과 대미인식 다원화 현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권 3호, 81-104.
- \_\_\_\_\_.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권 2호, 251-287.
- 이수인. 2004. “개신교 보수분파의 정치적 행위 - 사회학적 고찰.” 『경제와 사회』 64권, 265-301.
- 이지문. 2017. “광장정치와 제도정치의 보합으로서 추첨시민의회 모색.” 『NGO 연구』 12권 1호. 1-40.
- 이현송. 2015.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 『국제·지역연구』 24권 2호, 91-126.
- 장우영. 2016. “온라인 미디어와 이념갈등의 위기.” 『한국위기관리논집』 12권 1호, 125-138.
- 전상숙. 2011. “친미와 반미의 이념갈등: ‘반미’를 통해 본 이념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0권 1호, 147-171.
- 전상인. 2003. “제7장 반미(反美)의 역사사회학.” 『비교사회』 통권 5호, 191-215.
- 조기숙. 2009.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집 3호, 125-148.
- 조성환. 2016. “제8장 민주화 이후 한국 진보·보수의 이념적·정치적 경쟁의 특성: 진보 헤게모니 구축, 진보체제의 형성·전개의 비판적 분석” 『통일전략』 16권 1호, 283-316.
- 중앙일보. 2004.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 (9월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7784#home> (검색일: 2022/02/05).
- 지병근. 2013.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국가전략』 19권 1호, 31-56.

- 채장수. 2018. “한국 보수진영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특성.” 『정치·정보연구』 21권 2호, 37-62.
- 최용락. 2019. ““박근혜 석방 그 황홀한 꿈” 꾸는 ‘성조기 부대’.” 『프레스시안』(6월29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6925?no=246925> (검색일: 2020/04/01).
-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 파파존TV, 2019. “우리공화당 태극기집회.” (8월3일). <https://www.youtube.com/watch?v=RN8o7utn-EI&t=10935s> (검색일: 2020/02/04).
- 홍성민. 2015. “감정구조와 대중정치학: 박정희 향수에 대한 문화이론적 접근.” 『정치사상연구』 21권 1호, 9-34.
- Baxter, Kylie, and Shahram Akbarzadeh. 2008. *US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The Roots of Anti-America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aniels, Timothy P. 2007. “Liberals, Moderates and Jihadists: Protesting Danish Cartoons in Indonesia.” *Contemporary Islam* 1(3): 231-46.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nyedi, Zsolt. 2016. “Populist Polarization and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Problems of Post-Communism* 63(4): 210-20.
- Gustafson, Kristian. 2007. *Hostile Intent: U.S. Covert Operations in Chile, 1964-1974*. Washington, D.C.:Potomac Books, Inc.
- Hollander, Paul. 1992. *Anti-Americanism: Critiques at Home and Abroad, 1965-19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ung, Heon Joo. 2010. “The Rise and Fall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South Korea: Deconstructing Hegemonic Ideas and Threat Perception.” *Asian Survey* 50(5): 946-64.
- Lee, Dong Sun. 2007. “Democratization an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7(3): 469-499.
- Mietzner, Marcus. 2018. “Fighting Illiberalism with Illiberalism: Islamist Populism and Democratic Deconsolidation in Indonesia.” *Pacific Affairs* 91(2): 261-82.

- Mischler, William, and Richard Rose. 2001. "Political Support for Incomplete Democracies: Realist vs. Idealist Theories and Measur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4): 303-320.
- Oh, Chang Hun, and Celeste Arrington. 2007. "Democratization and Changing Anti-American Sentiments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7(2): 327-350.
- Pew Research Center. 2013. "Spring 2013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3-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4. "Spring 2014 Global Attitud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2014-spring-global-attitudes/>(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5. "Spring 2015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5-survey-data/> (검색일: 2019/03/04).
- Pew Research Center. 2017. "Spring 2017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7-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8. "Spring 2018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8-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19. "Spring 2019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pring-2019-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Pew Research Center. 2020. "Summer 2020 Survey Data." <https://www.pewresearch.org/global/dataset/summer-2020-survey-data/> (검색일: 2022/02/04).
- Shin, Gi-Wook. 1996. "South Korean Anti-Americanism: A Comparative Perspective." *Asian Survey* 36(8): 787-803.
- Shorrock, Tim. 1986.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the Rise of Anti-Americanism." *Third World Quarterly* 8(4): 1195-1218.
- Sing, Ming. 2012. "Explaining Support for Democracy in East Asia." *East Asia* 29(3): 215-234.

투고일: 2022.02.09.	심사일: 2022.03.22.	게재확정일: 2022.03.22.
------------------	------------------	--------------------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Democracy and Pro/Anti-American Sentiments

**Park, Jung Hoon** |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Chung, Alec** | Jeju Peace Institute

Within South Korea, there are pro-American and anti-American groups depending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n present-day Sou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se two groups is one of the significant sources of conflicts that shapes the political landscape. However, these seemingly different groups also have one thing in common. Both groups argue that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s making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attempt to find out, using survey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whether individuals with a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US have a higher level of support for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 that support for democracy declined as individuals showed a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Specifically, those who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were less likely to perceive a political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makes decisions or the one which military rules negatively. The findings obtained through analysis imply that the conventional framework that conservatives are pro-American and progressives are anti-American turned out to be too simplistic, having limits in clearly analyzing the 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that exist in South Korea today.

---

**Key Words** | South Koreans, Pro-American Sentiments, Democracy, Public Opinion, Correlation

## 부록

〈표6〉 ‘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퓨리서치센터 2017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관계

	직접민주주의 (Q29a)	간접민주주의 (Q29b)	강력한 지도자 (Q29c)	전문가 (Q29d)	군부의 지배 (Q29e)
직접민주주의(Q29a)	1.0				
간접민주주의(Q29b)	0.1125	1.0			
강력한지도자 (Q29c)	0.0542	0.0390	1.0		
전문가(Q29d)	-0.0304	0.0144	0.2422	1.0	
군부의 지배(Q29e)	-0.0269	0.1266	0.3804	0.1597	1.0

〈표7〉 ‘친미성향 지수’를 구성하는 퓨리서치센터 2017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응답 간의 상관관계

	미국에 대한 인식 (Q12a)	미국인에 대한 인식 (Q12b)	미국이 한국에 위협인지에 대한 인식(Q17b)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인식 (Q30)	미국의 사상과 관습에 대한 인식(Q31)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 인식(Q32)
미국에 대한 인식 (Q12a)	1.0					
미국인에 대한 인식 (Q12b)	0.4202	1.0				
미국이 한국에 위협인지에 대한 인식(Q17b)	0.1800	0.1244	1.0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인식 (Q30)	0.2540	0.1347	0.1703	1.0		
미국의 사상과 관습에 대한 인식(Q31)	0.1974	0.2098	0.0726	0.1029	1.0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사상 인식(Q32)	0.1429	0.1327	0.0059	-0.0097	0.3898	1.0

〈표8〉 통계분석에 사용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친미성향 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
친미성향 지수	1.0					
성별	0.2044	1.0				
연령	0.1481	0.0829	1.0			
교육수준	-0.1154	0.0284	-0.3565	1.0		
소득수준	-0.0996	0.0228	-0.3202	0.4504	1.0	
정치성향	0.2725	0.0488	0.2794	-0.0759	-0.1294	1.0





#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Woo, Byung-Deuk |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Ryu, Ki Eun | Jeju Peace Institute\*\*

| Abstract |

Even though the influence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on domestic politics has been widely studied with the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link betwee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has not been thoroughly examined. To fill this research void, this article relying on the Politics of Presence theory and the Critical Mass theory empiricall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s and the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international treaties. Based on the time-series cross-national data of 158 countries from 1961 to 2019, this article apply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demonstrates that countries with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tend to ratify more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international treaties. Th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ly robust in two-way fixed effects negative binomial models. This study's empirical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women and politics, and treaty ratification.

**Key Words** |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ternational Multilateral Treaty, Human Rights Treaty, Environmental Treaty, Women's Rights Treaty

---

\* First Author, The Institute of Social Data Science

\*\* Corresponding Author

## I. Introduction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decades. According to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the global averag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has increased to 26.1 percent in 2021. With the pronounced growth of women's presence in parliaments, extensive research has examined various topics related to female representatives, such as the different policy priorities and political attitudes between male and female legislators (Beall and Barnes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and issue preferences (Swers 2002), and domestic policy adoption (Htun and Weldon 2012).

Previous efforts to assess female representatives' impacts and their systematic differences from their male counterparts have broadened our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Regarding female representatives' political attitudes, there is an academic consensus that women representatives are more likely to be politically left and liberal than their male colleagues (Swers 2002). Also,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female representatives tend to introduce more bills about women's issues,<sup>1)</sup> such as human rights and liberties, women's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tkinson and Windett 2019; Espírito-Santo et al. 2020). Despite mixed empirical results, a series of studies employing both case studies and cross-national approache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fluence of female representatives on policy adoption about women's issues

---

1) Throughout this article, we define women's issues as those that are "particularly salient to women either because they primarily, directly or disproportionately concern or affect women in particular or because they reflect the more 'traditional' concerns (or interests) that women presumably have about others" (Reingold and Swers 2011, 431).

(Cowell-Meyers and Langbein 2009).

Although the previous literature has broadened our understanding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domestic politics, the influence of women in parliaments on countries' international behaviors has not been thoroughly examined. The legislature is an important actor who can approve or veto treaty ratifications, but there are a surprisingly small number of studies that deal in-depth with the link betwee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the countrie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Given that unveiling potential factors of the countrie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is a prerequisite to understanding countries' behaviors and the non-negligible impacts of representatives' gender on political attitudes and policy outcomes, such an academic void is unexpected.

To fill this academic lacuna,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does women's presence in parliaments lead countries to ratify international treaties about women's issue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women in politics by unveiling the role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s. By conducting a time-series cross-national analysis of 158 countries from 1961 to 2019, we applying negative binomial models find that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is closely related to the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international treaties. Th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ly robust in two-way fixed effects negative binomial models.

The remainder of this article is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In the next section, previous literature on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s and the relative marginalization of domestic factors is presented. Then, the potential role that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s plays i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is introduced, along with

previous studies on the impacts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on policy adoption. In the Empirical Analysis section, model specifications, variables and data, and empirical results are presented. Finally, we conclude with a discussion of the results and future research topics.

## II. Why Do Countries Ratify International Treaties?

Previous studies investigating countries' reasons and motivations for ratifying treaties have focused on international factors. Realists have argued that the influence of great powers determines other countries' ratifications. Countries tend to ratify a treaty following a powerful country that has committed to the treaty (Perrin and Bernauer 2010). Yamagata et al. (2017)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and emulation, focusing on environmental treaties. Especially during the Cold War era, when the bipolar system shaped the international order, countries ratified a treaty if the USA or the USSR first ratified it. Other studies found that the pressure from import-trade partners with a high level of human rights standards can also make exporting countries ratify treaties and adopt international norms (Cao 2012; Greenhill et al. 2009).

Countries also voluntarily join international treaties because they do not want to remain aloof from multilateral treaties that most of their peers have ratified. As more countries—especially regional peers—commit to international agreements,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justify remaining not ratified (Simmons 2009).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countries are likely to emulate their neighbors, economic, religious, or language peers, and diplomatic partners (Yamagata et al. 2017; Neumayer 2002).

Other research, based on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has demonstrated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each” countries about norms. Countries’ institutional and policy innovations are the consequence of learning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product of states’ inherent characteristics or domestic needs (Finnemore 1993). Research reveals that international treaty participation is related to the role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GOs) and epistemic communities rather than governments (Kim 2013; Longhofer et al. 2016). Bernauer et al. (2010) demonstrated that countries that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more likely to joi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oberts et al. (2004) argued that the number of NGOs in a nation is closely related to its likelihoo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eaties.

Although international factors and rationale can b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why a country’s decision-makers join a treaty, we should not neglect domestic factors that affect countries’ decisions to sign and ratify international treaties. Many studies on international treaties have investigated countries’ reasons for and motives for signing and adopting treaties, mostly focusing on the intrastate rationale behind joining a treaty. The realists have focused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countries’ treaty ratification, arguing that countries join treaties that meet their needs or maximize their benefits. Although the realist explanation is useful to understand countries’ decision to join security (Kinne 2018) or economic treaties (Poulsen 2014), it hardly explains why countries ratify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women’s rights treaties, or environmental treaties where benefits and interests are not obvious and immediate.

Political institutions have also been considered the main determinant of countries’ treaty ratifications, although the findings are mixed. Some argue that

democratic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sign and ratify international agreements (Congleton 1992; Mansfield and Pevehouse 2006). Democratic countries especially support human rights-related treaties, as they reflect the values of civil and political liberties, equal opportunity, and the individual rights that the democratic system is based on. Those countries anticipate that they will be able and willing to comply with these treaties under most circumstances (Simmons 2009). Some research emphasizes the salient trend of many signings and ratifications by democratizing countries and young democracies (Landman 2005; Simmons 2009). Democratizing countries tend to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because joining an IO can help leaders in transitional states credibly commit to carrying out democratic reforms and can reduce the probability of backsliding to authoritarianism (Moravcsik 2000).

Although previous studies on the countries' joining to international treaties have provided various explanations of international factors or domestic motivations, they have failed to explain which domestic actors or institutions affect the ratifications and how they create the variation of ratification across countries.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legislative branches' gendered composition on treaty ratification, even though the legislature is the institution that could approve or veto international treaties' ratification and although the non-negligible impacts of representatives' gender on political attitudes policy outcomes have been wide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focusing o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ims to find out how the gendered composition of legislative branches affects the number of ratified treaties.

### III.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Although the signature of international treaties is mainly decided by the government, a signature itself does not make the country a party to a treaty. In order to become a party to an international treaty, it is necessary to express its willingness to fulfill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written in the treaty (United Nations 2012). A country expresses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through ratification, which is impossible without the support of the legislature in most countries including both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countries.

Given that the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process largely mirrors the domestic lawmaking process in most countries, a mechanism that explains the effect of women's representation on domestic legislation could possibly be extended to international lawmaking through treaty ratific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that finds the relationship between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tends to result in women-friendly policy adoptions (Courtemanche and Green 2017; Tam 2017), this study argues that gender effect also exist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Thomas and Welch (1991) unveiled the association betwee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pro-women policies by surveying members of the lower houses of state legislatures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considering a two-stage process, Caiazza (2004) found that a more descriptive representation of women tends to entail the adoption of women-friendly policies regardless of the female representatives' individual partisanship. More recently, based on a fifty-state dataset from 1999 to 2009 in the United States, Courtemanche and Green (2017) demonstrated that states' spending related to health care for poor

children, the disabled, and elder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ntage of women in legislatures.

Related to other countries' contexts, Bratton and Ray (2002) found that a more descriptive representation of women-led Norwegian municipalities provides more comprehensive childcare. Kittilson (2006) showed that an increase in elected women officials had a substantially positive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Furthermore, case studies of nondemocratic and less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support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Wang (2013) investigating the Ugandan parliament, demonstrated that the presence of women representatives advanced women's issues including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lso, Tam (2017) also showed that Hong Kong's female legislators are more likely to represent women's interests than male legislators are.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of gender on political attitudes toward feminist policies, previous literature on environmental politics has also demonstrated that gend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political attitudes and priorities toward green issues (Ramstetter and Habersack 2019; Sundström and McCright 2016). While Sundström and McCright (2016)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hat female legislato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pro-environmental policies, Ramstetter and Habersack (2019) using data on roll call voting in European Parliament showed that female representatives tend to vote for polici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Moreover, som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women at both citizen-level and elite-level are more likely to care about human rights than men are (Forman-Rabinovici and Sommer 2019).

The impact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o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can be explained by psychological development theory and the Critical Mass theory. Firstly, male and female representatives tend to have different life experiences because of their gender, which generates different inner-value systems (Gilligan 1982). In particular, Gilligan's (1982) Ethics of Care theory explains that women tend to pay more attention to human rights, environmental policies, and women's rights because they have been taught to pursue empathy, compassion, and morality since childhood. The large proportion of female legislator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adoption of domestic policies that are related to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because female representatives are more likely to discuss morality and ethics than their male colleagues (Allik 2016).

Secondly, when there is a small number of female representatives, their voices are likely to be criticized and ignored by their male counterparts. When women are marginalized in politics, it generates a vicious cycle under which women's ability to rule has been questioned; women remain in the marginalized status in politics and, thus, women's interests and women's issues cannot be represented in policy outcomes (Phillips 1995). Kanter (1977) argued through the Critical Mass theory that female representatives have difficulty changing policy areas until they overcome their token status. When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is below fifteen percent, the legislative body is a skewed body in which the minority group is dominated by the majority. In this case, female representatives are in token status under which conditions the topics of women's interests and issues, such a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likely to be criticized and ignored.

Therefore, a certain level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parliaments is a prerequisite for them to have a substantial voic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Kanter 1977). The entrance of women into politics through enabling devices, including funding for potential women candidates can reduce the barriers to political entry for women and result in the adoption of women-friendly policies (Mansbridge 1999). In particular, the critical mass of female representatives leads women in legislatures to pursue women's political agendas including both human rights and women's rights, and pro-environmental policies (Forman-Rabinovici and Sommer 2019).

We expect that the effect of gender on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will be similar to the effect on domestic lawmaking and policy adoption concerning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women's rights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provide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processes that reflect the domestic lawmaking processes in their constitutions (Hathaway 2008). One hundred and twenty-four countries have voting thresholds in the legislature for treaty ratifications that are the same as those for domestic laws (Hathaway 2008). Although in about twenty percent of countries the legislature is not directly involved in international lawmaking,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stipulate that the treaty can be ratified only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r two-thirds) of the parliament. They include most democratic countries, many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s like Russia, Iraq, Venezuela, Ecuador, Algeria, and Nigeria, and even some full autocracies such as China, Iran, Syria, and Kuwait.

Moreover, passing a bill for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could be a great long-term strategy for female representatives who may have struggled to suggest and adopt domestic policies for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women's rights. Before undertaking the treaty's legal oblig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ountries prepare themselves as members of the treaty by enacting the legislation

necessary to implement the treaty domestically. The series of efforts that countries make to meet global standards will help female representatives bring up and pass domestic policies related to the issue of the treaty.

Based on this logic, we tested three hypotheses about the influence that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has on the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previous studies classified as women's issues.

- Hypothesis 1: Countries with a greater level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tend to ratify a higher number of human rights treaties.
- Hypothesis 2: Countries with a greater level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tend to ratify a higher number of environmental treaties.
- Hypothesis 3: Countries with a greater level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tend to ratify a higher number of women's treaties.

## IV. Empirical Analysis

To test the influence that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has on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we conducted a time-series cross-national analysis based on data from 158 countries from 1961 to 2019.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untry and time coverages of data are based on data sourc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UNTS), the Variety of Democracy (V-Dem) dataset (Coppedge et al. 2019),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dataset (Teorell et al. 2010). Using panel data allows us not merely to control unobserved individual countries' heterogeneities but also to make causal inferences because

individual countries were observed repeatedly (Best and Wolf 2014). Moreover, the broad coverage of the number of countries is conducive to assessing the generalizability of the empirical results.

## 1. Variables and Data

### *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research were the number of ratified international treaties according to three issues: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women's rights. To build the dependent variables, we used the open multilateral treaties<sup>2)</sup> data from the United Nation Treaty Series (UNTS), which includes all international agreements registered or filed and recorded by the secretariat from 1945 to 2019 and all League of Nations treaties. The data do not include regional multilateral trea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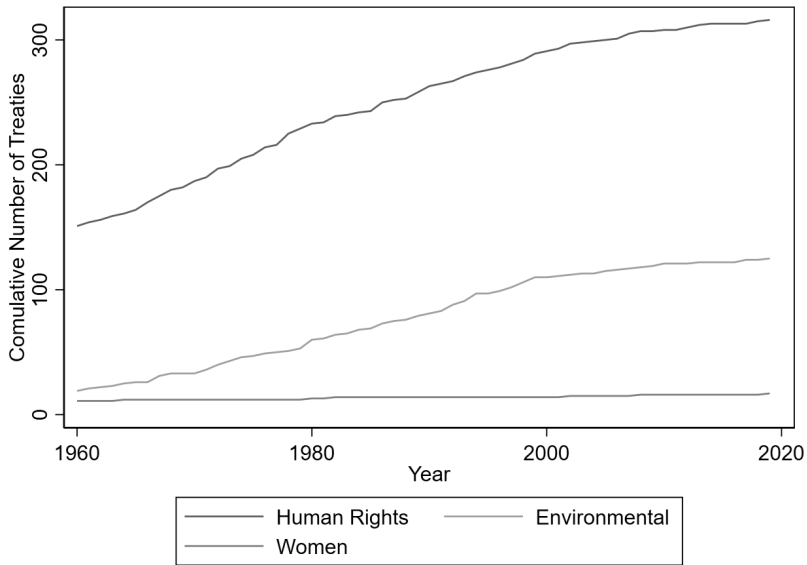
UNTS data include information on each treaty's "subject terms," which tags up to ten issue areas to which the treaty belongs (e.g., *commodity, finance, human rights, women, the sea, whaling, friendship, cultural matters*, etc.). If a treaty had the subject term women, it is classified as a women's treaty. A treaty with the following subject terms is classified as a human rights treaty: *human, rescue, refugee, asylum, women, children/minors/youth, labor, health, civil matters*, and social matters. Thus, human rights treaties include women's treaties. Finally, the treaty with the words environment, pollution, wildlife, animals, plants or whaling, resources, fishing, forestry, or energy in the title or

---

2) Open multilateral treaties are those that are open to all countries worldwide or to all countries in a particular region.

subject terms was coded as an environmental treaty.

<Figure 1> Cumulative Number of International Treaties by Issue



<Figure 1> shows the cumulative number of international treaties for three issues: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women's right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only slight changes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women's treaties, the cumulative number of international treaties for all three issues has shown an increasing tendency in recent decades. In our data, 316 human rights treaties, 125 environmental treaties, and 17 women's rights treaties were included. The treaties classified as human rights treaties includ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environmental treaties include the Paris Agreement, and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Also, women's rights treaties include the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so on.

Countries can sign and ratify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se two actions have different effects. A signatory does not become a member of a treaty through a signature alone unless the treaty stipulates otherwise. To become a party to a treaty, an entity must express its consent to be bound to the treaty (i.e., ratification) by demonstrating its willingness to undertake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ddressed in the treaty (Baccini and Urpelainen 2014). A country can ratify a treaty after its approval has been granted through internal governmental procedures, usually congressional approval. Thus, this article used the number of cumulative ratified international treaties according to the three issues as dependent variables. Whenever countries withdrew, this was reflected in each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As a key independent variable to operationalize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e percentage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parliaments based on the Parline Global Data on National Parliament developed by the IPU was employed. By tracking the results of elections, the IPU's historical datase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in countries.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is lagged by one year, given that political factors do not usually tend to be translated into policy changes within a year (Woo 2021). Moreover, the inclusion of the lagged independent variable enables us to parcel out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s caused by reserve

causality and simultaneity in panel data models (Reed 2015).

### *Control Variables*

Including appropriate lists of control variables should precede the empirical analysis because omitting relevant variables may bias the estimates and prevent us from unveiling the independent influence that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has on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s. Thus, this article encompasses a seri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rol variables that have been studied as potential factors i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based on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on this topic.

As one of the domestic control variables, logged GDP per capita is included to parcel out the influence of economic development o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bout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women's rights. Countries' level of develop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key domestic factor for them to ratify treaties (Waltz 1979). A branch of modernization theory argues that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tend to pursue more progressive or post-material values, including human integrity and rights, self-expression, and freedom (Inglehart 1981). On the contrary, economically less developed countries emphasize basic human needs, survival, and other materialistic values. Given that previous literature has supported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Wotipka and Tsutsui 2008), we expected that logged GDP per capita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Considering the domestic regime type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reasons behind individual countries' international legal commitments (Slaughter 1995). The levels of democracy have been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as a

determinant of treaty ratifications (Elsig et al. 2011). In particular, many studies have shown a rob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democracy and the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women's rights, and environmental in the rate of treaty ratification between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countries (Hafner-Burton et al. 2008). Rather than disregarding the potential positive impact of democracy, we included the level of democracy as a control variable. Given that the Polity Score and Freedom House Index have been criticized because of their underestimation or overestimation of the democracy level, we used the Polyarchy Index from the V-Dem dataset to measure the democracy levels of countries.

In addition, some argue that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ratify multilateral treaties to address domestic credibility problems and nondemocratic political threats (Mansfield and Pevehouse 2006). Based on the cross-national data presented in Boix, Miller, and Rosato (2013), defining a democratic country as a country with popular elections, free and fair elections, and universal suffrage, we assigned 1 to a country-year observation until three years after democratization; otherwise, 0 was assigned.

Moreover, for our study, government ideology is considered one of the control variables. Based on the traditional left/right political dimensions, both previous single case studies and cross-national analyze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the significant influence that left-wing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have on policy agendas promoting human or women's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Dahlerup and Leyenaar 2013). Even though some studies show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government ideology and policy outcomes is weak or insignificant (Htun and Weldon 2012), we included *Left Government* in the empirical models to control the potential positive influence that left governments



have on treaty ratifications rather than risk committing omitted variable bias. Based on the variable *dpi\_gprlc1* in the Quality of Government dataset, we assigned 1 if the largest government party was left-oriented.

We control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ountries' geopolitical regions by including regional dummy variables. Including these regional dummies also allowed us to control for additional unobserved regional effects on countries' likelihood of ratifying international treaties. For instance, the influence of regional norms concerning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women's rights will be parceled out due to the use of regional dummy variabl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from the Quality of Government dataset, Geopolitical regions are classified into ten categories: Eastern Europe and post-Soviet Union, Latin America, North Africa, the Middle East, Sub-Saharan Africa, Western Europe, North America, East Asia, South-East Asia, South Asia, the Pacific, and the Caribbean.

A series of international factors have been examined as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s. First, the existence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conflicts in a country is included because some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or indirectly suggested the negative impacts that countrie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conflicts or civil war has o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ies (Poe et al. 1999). By using data (*e\_miinteco* and *e\_miinetrc*) from the V-Dem dataset, we assigned 1 to the country-year observation when a country was involved in armed international or internal conflicts; otherwise, 0 was assigned.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Cold War o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The Cold War has been regarded as a hindrance for individual countries to join international treaties aiming to improve

human and women's rights and lessen environmental issues (Clark 2010). During the Cold War era, when inter-state conflicts were highly ideological and influenced by superpowers (Cole 2005), international instruments pursuing basic human digni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ere paralyzed or slowed (Donnelly and Whelan 2020). Conversely,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Cold War ironically created global norms about human integrity and elevated the status of human rights rhetoric, as the two superpowers employed human rights norms for their political goals (Buergethal 1997). Thus, rather than leaving this controversial variable out, the Cold War binary variable was used to control for the Cold War's positive or negative influence. We assigned 1 for the Cold War era (1965–1989) and 0 otherwise.

Trade openness has also been regarded as one of the possible factors in ratifying international treaties because countries economically integrated into the world economy have an incentive to take a cooperative stance and ratify multilateral treaties to enlarge future trade opportunities (Neumayer 2002). While som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non-negligible positive impacts of trade openness (Perrin and Bernauer 2010), others have found no substantial influence of trade openness 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s (Spilker and Koubi 2016). With the chance of omitted variable bias, we controlled for trade openness. As a proxy for trade openness, this article relies on one of the most frequently employed proxy measures: the sum of exports and imports divided by the GDP (*Trade % GDP*)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International autonomy, defined as no external actor having authority within the limits of the state (Krasner 1995, 116), has also been examined as a factor affecting individual countrie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Hafner-Burton

et al. 2008). We controlled for individual countries' international autonomy based on a variable named *v2svinlaut* in the V-Dem dataset.<sup>3)</sup>

The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 leadership of a country is also controlled. 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international treaty participation is related to the roles of INGOs (Longhofer et al. 2016). INGOs empower local actors and push governments to meet social demands and maintain political legitimacy (Kim, 2013); thus, the number of INGOs in a country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 likelihood of a country'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treaties. If a country has many INGO headquarters, the government is likely to feel more pressure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For this variable, we used data scraped from the United Nations Civil Society (UNCS) by Ryu (2020). This variable counts the number of INGO headquarters with consultative status in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Type	Obs.	Mean	Std. Dev.
<b>Dependent Variables</b>				
The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Count	8,306	66.888	38.361
The Number of Ratified Environmental Treaties	Count	8,306	17.777	15.276
The Number of Ratified Women Rights Treaties	Count	8,306	5.173	2.996
<b>Independent Variables</b>				
Women in Parliament (%)	Continuous	8,306	8.370	10.153
<b>Domestic Control Variables</b>				
Ln (GDP per capita)	Continuous	8,306	4.898	12.305
Democracy	Continuous	8,306	0.441	0.290

---

3) V-Dem uses latent variable analysis via the Bayesian item response theory measurement model to build comparable cross-national measurements of international autonomy. See Pemstein et al. (2018)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V-Dem's measurement model.

Variable	Type	Obs.	Mean	Std. Dev.
Democratic Transition	Binary	8,306	0.033	0.179
Left Government	Binary	8,306	0.053	0.223
<b>Regional Dummies</b>				
Eastern Europe and Post-Soviet Union	Binary	8,306	0.108	0.310
Latin America	Binary	8,306	0.146	0.353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Binary	8,306	0.130	0.336
Sub-Saharan Africa	Binary	8,306	0.293	0.455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Binary	8,306	0.166	0.372
East Asia	Binary	8,306	0.029	0.169
South-East Asia	Binary	8,306	0.065	0.247
South Asia	Binary	8,306	0.042	0.202
The Caribbean	Binary	8,306	0.021	0.142
<b>International Control Variables</b>				
Conflict	Binary	8,306	0.103	0.304
Cold War	Binary	8,306	0.419	0.493
Trade (% GDP)	Continuous	8,306	75.830	74.668
International Autonomy	Continuous	8,306	1.108	0.768
Ln (Number of INGO headquarters)	Continuous	8,306	0.463	1.005

Note: The regional dummy for the Pacific countries was not included because no countries in the Pacific regions were included in the final dataset.

<Table 1> show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all the variables employed in our empirical analysis. To assess whether there are multicollinearities among the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s, we conducted a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test. The mean VIFs are less than 2 and individual VIFs corresponding to each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 are not exceed 4, showing that there are no problematic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 1. Empirical Results

Applying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s on a count dependent variable is problematic because coefficient estimates will be biased, corresponding estimates of standard errors will be invalid, and predictions will be non-sensical. In turn, the use of OLS regressions with a count dependent variable prevents us from properly discussing empirical results and implications. Thus, given our dependent variables, we employ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s to test our hypotheses.

〈Table 2〉 Estimations from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Model 1	Model 2	Model 3
	Human Rights	Environmental	Women Rights
Independent Variable			
Women in Parliament (%)	0.004*** (0.000)	0.005*** (0.000)	0.008*** (0.000)
Domestic Control Variables			
Ln (GDP per capita)	0.106*** (0.005)	0.176*** (0.006)	0.099*** (0.007)
Democracy	0.157*** (0.015)	0.407*** (0.019)	0.061*** (0.019)
Democratic Transition	0.005 (0.013)	0.017 (0.015)	0.009 (0.017)
Left Government	0.021*** (0.006)	0.042** (0.016)	0.051*** (0.007)
International Control Variables			
Conflict	-0.007 (0.010)	-0.023 (0.014)	-0.026* (0.013)
Cold War	0.639***	2.008***	0.470***

	Model 1	Model 2	Model 3
	Human Rights	Environmental	Women Rights
	(0.037)	(0.055)	(0.045)
Trade (% GDP)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International Autonomy	0.078***	0.064***	0.090***
	(0.005)	(0.006)	(0.006)
Ln (number of INGO headquarters)	0.053***	0.072***	0.054***
	(0.004)	(0.004)	(0.007)
Regional Dummy Variabl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Constant	2.681***	-0.805***	0.558***
	(0.055)	(0.072)	(0.073)
Number of Obs	8306	8306	8306
Wald Chi2	30856.265	69762.630	9905.931
Pseudo R2	0.094	0.213	0.091
AIC	141917.808	96078.212	71550.658
BIC	142483.493	96643.897	72116.343

Note: \*  $p < 0.05$ , \*\*  $p < 0.01$ , \*\*\*  $p < 0.001$ .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The 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 an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 are presented for model comparison.

<Table 2> shows the estimations from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As expected, the independent variable, *Women in Parliament (%)*,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01$  across the three models. In Model 1, the coefficient of *Women in Parliament (%)* is 0.004, so the expected log count of the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increases by 0.004 for each 1 percent increase. In terms of the expected log count, the coefficien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highest in Model 3, where the number of rat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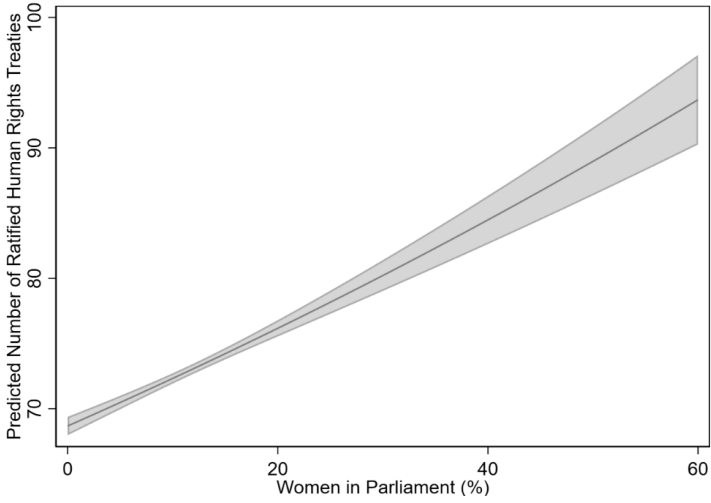
women's rights treaties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empirical results concerning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are consistent in bivariate models estimated without control variables (see Table A.1 in Appendix).

Turning to the control variables, we found that  $\ln(GDP\ per\ capita)$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as expected. Countries with higher levels of democracy tend to ratify m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which provides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for the argument that democratic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join these international treaties. Also,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our study reveals that countries led by left-wing governments tend to show more commitment to the three issues of international trea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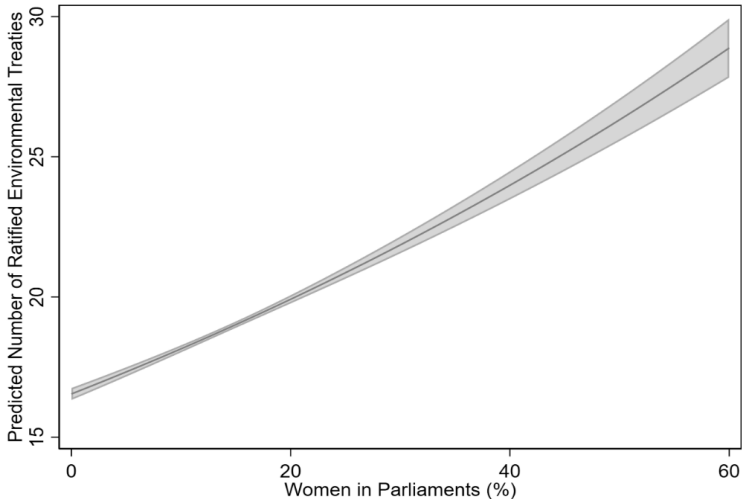
Among the international control variables, Table 2 shows that the *Cold War*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number of ratified international treaties. The relationship might reflect the situation during the Cold war when two super powers competitively introduce treaties and norm (Simmons 2009) and countries tended to join more international treaties by following the superpower they allied with (Yamata et al. 2017). Also, *International Autonomy*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at the level of  $p < 0.001$ . This finding buttresses previous findings that the degree of international autonomy might influence motivations toward and behaviors regarding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The logged number of INGO headquart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It demonstrates the non-negligible impacts of INGO on international treaty participation. Despite differences in the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related to both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s are robust in OLS regression models (see Table A.2. in Appendix).

〈Figure 2〉 Predicted Number of Ratified Treaties

(A)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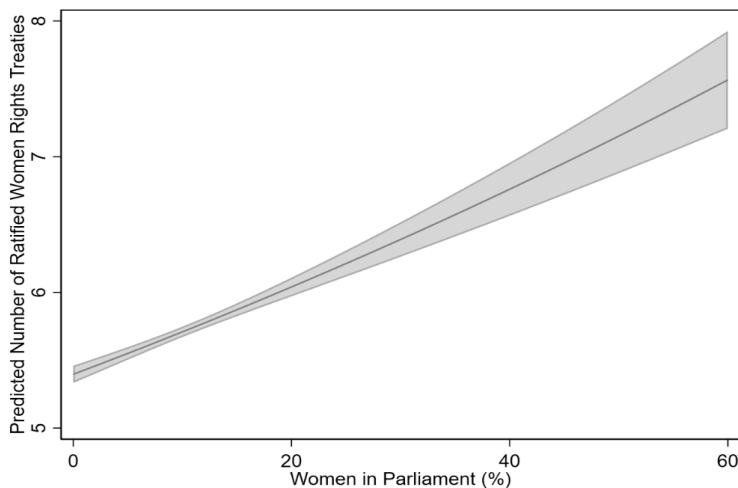


(B) Number of Ratified Environmental Treaties





(C) Number of Ratified Women Rights Treaties



Note: The predicted numbers were estimated while all other variables were held at their observed values. The gray area represents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Next, to evaluate the substantive effects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legislative branches on the number of ratified treaties, we estimated the predicted number of ratified treaties by issue areas. Figure 2 presents the predicted numbers of ratified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international treaties. This demonstrates that the influence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s is not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lso substantively significant. Panel (A) in Figure 2 shows the predicted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Women in Parliament (%)*. When the percentage of women representatives in legislative branches is 0, the predicted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is around 68.676. The predicted number increases to 76.168 when the percentage reaches 20 percent. If legislative branches are composed of 50 percent women, the

predicted number exceeds 88.966.

Such a substantial impact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s is also observed in Panel (B), where the number of ratified environmental treaties is predicted. In Panel (B), the predicted number increases from 16.540 to 21.856 when the percentage of women legislators increases from 0 percent to 30 percent. Related to the number of ratified women’s rights treaties shown in Panel (C), when *Women in Parliament (%)* increases from 0 percent to 30 percent, the predicted number increases from 5.396 to 6.390. Even though the impact that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s has on the predicted number of ratified women’s rights treaties is smaller, it is still substantively significant given that the ratification of women’s rights treaties is a rare event.

〈Table 3〉 Average Marginal Effects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n Parliaments

Model	dy/dx	std. err.	z	p >  z	[95% Conf. Interval]	
Model 1	0.377	0.028	13.53	0.000	0.323	0.432
Model 2	0.176	0.008	22.95	0.000	0.161	0.191
Model 3	0.032	0.003	11.64	0.000	0.027	0.038

Note: Average marginal effects (AMEs) were estimated while all other variables held their observed values.

We estimated the average marginal effects (AMEs) of *Women in Parliament (%)* in addition to the estimations of the predicted number of ratified treaties. Estimating the average marginal effects along with predicted probabilities enables us to properly understand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on the number of ratified treaties. As demonstrated in

Table 3, the AM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 in the three model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01$ . The AME in Model 1, Model 2, and Model 3 is 0.377, 0.176, and 0.032, respectively, meaning that a 1 percent increase in *Women in Parliament (%)* increases the number of treaties according to each issue by 0.377, 0.176, and 0.032, respectively. To sum up, the empirical results presented in Table 2, Figure 2, and Table 3, the influence of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on the number of ratified treaties is not merely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lso substantially meaningful.

Checking the robustness of the empirical results in different model specifications is an important step in accumulating scientific knowledge. Thus, rather than concluding only with the empirical results, we conduct a robustness check using two-way fixed effects (country and year fixed effects) negative binomial models. The inclusion of country fixed effects along with year fixed effects enables us to parcel out the influence of unmeasured and unobserved factors varying across the country and over time, and idiosyncratic countries' features such as electoral systems and procedures of treaty ratification of each country, culture, and religion. Although the use of country fixed effects leads to variance reduction, the addition of country fixed effects makes it possible to control between-unit variations and, in turn, to estimate explanatory variables' average effect within countries (Wooldridge 2010). Moreover, we include a lagged dependent variable as an additional control to handle the potential autocorrelation in the residuals which can cause bias in estimates of coefficients.

〈Table 4〉 Estimations from Two-Way Fixed Effec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Model 4	Model 5	Model 6
	Human Rights	Environmental	Women Rights
Independent Variable			
Women in Parliament (%)	0.002*** (0.000)	0.002*** (0.000)	0.003*** (0.000)
Domestic Control Variables			
Ln (GDP per capita)	0.054*** (0.004)	0.064*** (0.008)	0.042*** (0.006)
Democracy	0.049*** (0.006)	0.303*** (0.010)	0.002*** (0.000)
Democratic Transition	0.012 (0.015)	0.009 (0.008)	0.014 (0.007)
Left Government	0.002*** (0.000)	0.004** (0.001)	0.004*** (0.000)
Lagged Number of Ratified Treaties	0.013*** (0.000)	0.031*** (0.000)	0.177*** (0.001)
International Control Variables			
Conflict	-0.002 (0.004)	-0.046 (0.034)	-0.038*** (0.005)
Cold War	0.229*** (0.025)	1.705*** (0.061)	0.091*** (0.023)
Trade (% GDP)	-0.001 (0.002)	0.000 (0.000)	0.001 (0.001)
International Autonomy	0.030***	0.050***	0.004***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141**

	Model 4	Model 5	Model 6
	Human Rights	Environmental	Women Rights
	(0.002)	(0.004)	(0.001)
Ln (number of INGO headquarters)	0.031***	0.008***	0.035***
	(0.002)	(0.002)	(0.002)
Regional Dummy Variabl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Coun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Constant	2.681***	-0.805***	0.558***
	(0.055)	(0.072)	(0.073)
Number of Obs	8306	8306	8306
Wald Chi2	83771.742	147192.215	75599.922
Pseudo R2	0.240	0.308	0.284
AIC	117993.443	83916.914	55879.451
BIC	118566.138	84489.609	56444.510

Note: \*  $p < 0.05$ , \*\*  $p < 0.01$ , \*\*\*  $p < 0.001$ .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The AIC and BIC are presented for model comparison. The *Lagged number of ratified treaties* is the lagged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in Model 4, the lagged number of ratified environmental treaties in Model 5, and the lagged number of ratified women rights treaties in Model 6

Table 4 presents the results from two-way fixed effects negative binomial models with a lagged dependent variable. As presented, even though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Women in Parliament (%)* decrease due to the inclusion of country fixed effects and a lagged dependent variable,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Women in Parliament (%)* across the three model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01$  with positive directions. Models estimated

in Table 3 have lower AICs and BICs compared to those in Table 2, meaning that models in Table 3 have better model-fits.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additional support for our argument that the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increases with the emergence of female legislators. Even not presented because of the page limit, the influence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s substantially significant in terms of the predicted number of ratified treaties by issue areas and AMEs. Related to control variables, the significance and signs of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also similar to those presented in Table 2. Moreover, even after we estimate the two-way fixed effects model with the number of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except for women's rights treaties, the influence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is statistically and substantially significant.

## V. Conclusion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time-series cross-national analysis with data on 158 countries from 1961 to 2019 posit that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countries with parliaments that have a high percentage of women tend to join more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these three issues.

The findings from this articl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n women and politics by providing robust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meaningful

influence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on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women representatives in parliaments leads countries to ratify m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The impact that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has on legislative branches is not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substantively significant. This relationship is consistent in the two-way fixed effec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Given that the previous findings on the link betwee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policy outcomes are mixed because of the lack of a well-designed cross-national study (Wängnerud 2009), the use of time-series cross-national data in this study enabled us to bridge this gap and test the general impacts of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worldwide.

Moreover, we provide clues that the influence of a gendered composition in legislative branches on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is similar to that on domestic lawmaking and policy adoption.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domestic variables, including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e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and left-wing governments and political parties, are closely related to countries' international behavior. This empirical result provided additional evidence for the literature arguing for the importance of domestic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We should note that the innate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approach also apply to our study, even though our empirical results are based on various model specifications and robustness checks. Despite using time-series cross-national data testing and the findings' generalizability based on conditional expectation functions, the quantitative approach does not guarantee the confirmation of

theories but only tests the hypotheses. Thus, the natural extension of this work is to, by employing case studies or comparative approaches, thoroughly examine the mechanisms behind the association betwee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bout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women's rights. Also, future research comparing the legislative behaviors of female and male representatives related to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will be promising.



## References

- Allik, Mirjam. 2016. "Welfare state and representation: Do women make the welfare state or does the welfare state make women representatives?" *Representation* 52(4): 253-269.
- Atkinson, Mary Layton, and Jason Harold Windett. 2019. "Gender stereotypes and the policy priorities of women in congress." *Political Behavior* 41(3): 769-789.
- Baccini, Leonardo, and Johannes Urpelainen. 2014. "Before ratification: Understanding the timing of international treaty effects on domestic polic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8(1): 29-43.
- Beall, Victoria D., and Tiffany D. Barnes. 2020. "Mapping Right-Wing Women's Policy Prioritie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41(1): 36-65.
- Bernauer, Thomas, Anna Kalbhenn, Vally Koubi, and Gabriele Spilker. 2010.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ources of Global Governance Dynam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3): 509-538.
- Best, Henning, and Christof Wolf. 2014. *The SAGE handbook of regression analysis and causal inference*. Sage.
- Boix, Carles, Michael Miller, and Sebastian Rosato. 2013. "A complete data set of political regimes, 1800-2007."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12): 1523-1554.
- Buergenthal, Thomas. 1997.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9(4): 703-723.
- Caiazza, Amy. 2004. "Does women's representation in elected office lead to women-friendly policy? Analysis of state-level data." *Women & Politics* 26(1): 35-70.
- Cao, Xun. 2012. "Global Networks and Domestic Policy Convergence." *World Politics* 64: 375-425

- Clark, Ann Marie. 2010. *Diplomacy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and changing human rights nor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e, Wade M. 2005. "Sovereignty relinquished? Explaining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1966-1999."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3): 472-495.
- Congleton, Roger D. 1992.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lution Contro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3): 412-421.
- Coppedge, Michael, John Gerring, Carl Henrik Knutsen, Staffan I. Lindberg, Jan Teorell, David Altman, Michael Bernhard, M. Steven Fish, Adam Glynn, Allen Hicken, Anna Lührmann, Kyle L. Marquardt, Kelly M. McMann, Pamela Paxto, Daniel Pemstein, Brigitte Seim, Rachel Sigman, Svend-Erik Skaaning, Jeffrey K. Staton, Agnes Cornell, Lisa Gastaldi, Haakon Gjerløw, Valeriya Mechkova, Johannes von Römer, Aksel Sundström, Eitan Tzelgov, Luca Jacopo Uberti, Yi-ting Wang, Tore Wig, and Daniel Ziblatt. 2019. "V-Dem Dataset V.9."
- Courtemanche, Marie, and Joanne Connor Green. 2017. "The influence of women legislators on state health care spending for the poor." *Social Sciences* 6(2): 1-24.
- Cowell-Meyers, Kimberly, and Laura Langbein. 2009. "Linking women's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Politics & Gender* 5(4): 491-518.
- Dahlerup, Drude, and Monique Leyenaar. 2013. *Breaking male dominance in old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 Elsig, Manfred, Karolina Milewicz, and Nikolas Stürchler. 2011. "Who is in love with multilateralism? Treaty commitment in the post-Cold War era." *European Union Politics* 12(4): 529-550.
- Espirito-Santo, Ana, André Freire, and Sofia Serra-Silva, S. 2020. "Does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matter for policy preferences? The role of political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147

- parties." *Party Politics* 26(2): 227-237.
- Finnemore, Martha. 199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eachers of norms: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scienc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4): 565-597.
- Forman-Rabinovici, Aliza, and Udi Sommer. 2019. "Can the descriptive-substantive link survive beyond democracy? The policy impact of women representatives." *Democratization* 26(8): 1513-1533.
- Gilligan, Carol.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hill, Brian, Layna Mosley, and Assem Prakash. 2009. "Trade-based Diffusion of Labor Rights: A Panel Study, 1986-200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4): 669-690.
- Hafner-Burton, Emilie M., Kiyoteru Tsutsui, and John W. Meyer. 2008.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Repressive states and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Sociology* 23(1): 115-141.
- Hathaway, Oona A. 2007. "Why do countries commit to human rights trea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4): 588-621.
- \_\_\_\_\_. 2008. "Treaties' e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ternational lawmaking in the United States." *Yale Law Journal* 117: 1236-1372.
- Htun, Mala, and S. Laurel Weldon. 2012. "The Civic Origins of Progressive Policy Change: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Global Perspective, 1975-200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3): 548-569.
- Inglehart, Ronald. 1981. "Post-Materialism in an Environment of Insecu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4): 880-900.
- Kim, Dongwook. 2013.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Global Diffus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7: 505-539.

- Kinne, Brandon J. 2018.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s and the Emergence of a Global Security Network." *International Organization* 72: 799-837.
- Krasner, Stephen D. 1995. "Compromising westphalia." *International security* 20(3): 115-151.
- Landman, Todd. 2005. *Protecting Human Rights: A Comparative Stud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Longhofer, Wesley, Evan Schofer, Natasha Miric, and David J. Frank. 2016. "NGOs, INGOs, and Environmental Policy Reform NGOs, INGOs, and Environmental Policy Reform, 1970-2010." *Social Forces* 94(4): 1743-1768.
- Mansfield, Edward. D., and Jon C. Pevehouse. 2006. "Democratiz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1): 137-167.
- Moravcsik, Andrew. 2000. The origins of human rights regimes: Democratic delegation in postwar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2): 217-252.
- Neumayer, Eric. 2002. "Does trade openness promote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orld Economy* 25(6): 815-832.
- Pemstein, Daniel, Kyle L. Marquardt, Eitan Tzelgov, Yi-ting Wang, Joshua Krusell, and Farhad Miri. 2018. "The V-Dem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analysis for cross-national and cross-temporal expert-coded data."
- Perrin, Sophie, and Thomas Bernauer. 2010. "International regime formation revisited: Explaining ratification behaviour with respect to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greements in Europe." *European Union Politics* 11(3): 405-426.
- Poe, Steven C., C. Neal Tate, and Linda Camp Keith. 1999. "Repression of the human right to personal integrity revisited: A global cross-national study covering the years 1976-1993."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2): 291-313.
- Poulsen, Lauge. N. Skovgaard. 2014. "Bounded Rationality and the Diffusion of Modern Investment Treat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8(1): 1-14.
- Ramstetter, Lena, and Fabian Habersack. 2019. "Do women make a difference? Analysing environmental attitudes and actions of Members of the European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Women's Rights Treaties 149

- Parliament." *Environmental Politics* 29(6): 1063-1084.
- Reed, William Robert. 2015. "On the practice of lagging variables to avoid simultaneit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6): 897-905.
- Reingold, Beth, and Michele Swers. "An endogenous approach to women's interests: When interests are interesting in and of themselves." *Politics & Gender* 7(3): 429-435.
- Roberts, J. Timmons, Bradley C. Parks, and Alexis A. Vásquez. 2004. "Who ratifies environmental treaties and why? Institutionalism, structuralism and participation by 192 nations in 22 treatie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4(3): 22-64.
- Ryu, Ki Eun. 2020. *Dynamics of International Treaty Diffusio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 Simmons, Beth A. 2009. *Mobilizing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aughter, Anne-Marie. 1995. "International law in a world of liberal stat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3): 503-538.
- Spilker, Gabriele, and Vally Koubi. 2016. "The effects of treaty legality and domestic institutional hurdles on environmental treaty ratifica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Politics, Law and Economics* 16(2): 223-238.
- Sundström, Aksel, and Aaron M. McCright. 2016. "Women and nuclear energy: Examining the gender divide in opposition to nuclear power among Swedish citizens and politician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11: 29-39.
- Swers, M. 2002. *The Difference Women Mak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m, Waikung. 2017. "Do female legislators have different policy priorities than their male colleagues in an undemocratic/semi-democratic legislature? The case of Hong Kong."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23(1): 44-70.
- Teorell, Jan, Nicholas Charron, Marcus Samanni, Sören Holmberg, and Bo Rothstein. 2010. *The Quality of Government Dataset*. The QoG Institute.
- Thomas, Sue, and Susan Welch. 1991. "The impact of gender on activities and

- priorities of state legislator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4(2): 445-456.
- United Nations. 2012. *Treaty Handbook*, United Nations Publication No. E.12.V.1.
-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Data ([https://treaties.un.org/pages/AdvanceSearch.aspx?tab=UNTS&clang=\\_en](https://treaties.un.org/pages/AdvanceSearch.aspx?tab=UNTS&clang=_en)).
- Vreeland, James R. 2008. “Political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Why dictatorships enter in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2(1): 65-101.
- Wängnerud, Lena. 2009. “Women in parliaments: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 51-69.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 Wang, Vibeke. 2013. “Women changing policy outcomes: Learning from pro-women legislation in the Ugandan Parliament.”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41: 113-121.
- Woo, Byung-Deuk. 2021.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Facilitates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Laws Relating to Violence Against Women: Evidence from Asian Countries.” *Asian Women* 37(2): 1-33.
- Wooldridge, Jeffrey M.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 Wotipka, Christine Min, and Kiyoteru Tsutsui. 2008. “Global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Stat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1965–2001.” *Sociological Forum* 23(4): 724-754.
- Yamagata, Yoshiki, Jue Yang, and Joseph Galaskiewicz. 2017. “State power and diffusion processes in the ratification of global environmental treaties, 1981–2008.”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17: 501–529.

투고일: 2022.02.25.    심사일: 2022.03.18.    게재확정일: 2022.04.14.

## 여성의 산술적 대표성과 국제다자조약 비준

우병득 | 포항공과대학교

유기은 | 제주평화연구원

의회내 여성 의원의 증가는 국가의 국제조약 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변화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 데 반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국제 조약의 비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존재의 정치 이론(the Politics of Presence Theory)과 결정적 다수 이론(the Critical Mass Theory)에 기반하여, 의회에서 여성의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다양한 국제다자조약--인권, 환경 및 여성의 권리--비준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1961년부터 2019년까지 158개국의 시계열 국가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통계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인권과 여성의 권리와 환경에 관한 국제 조약을 더 많이 비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여성의 산술적 대표성이 환경 조약 비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른 정부 의석 할당제가 있는 국가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는 여성정치학과 국제조약 비준 연구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겠다는 점에서 학문적 함의를 지닌다.





# 기억 연구의 정치학적 시론: '70년만의 귀향' 사례를 중심으로\*

류석진 | 서강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은 기억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정치학적 시론이다.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틀을 만들기 위한 작은 디딤돌적인 시도로서, 첫째 기억활동 유형화 논의에 기초하여 '70년만의 귀향' 사례를 해석한다. '업혀있는 행위자'로 자임하는 기억활동가들이, 자신의 '투사형' 기억해석 입장을 견지하고 과거를 '현재진행형'으로 판단하면서 이루어진 사례다. 둘째, 기억의 동학 해석을 위해 규범동학 이론과 룩스의 권력론을 차용하여 기억활동가를 기억규범활동가-기억의제활동가-기억현장활동가로 분류하였다. 홉카이드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의 발굴과 반환 과정을 분석한 결과, 규범 출현-확산-내면화의 과정과 유사한 기억의 탄생, 확산과 연대, 그리고 기억현장의 창출이라는 기억의 동학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70년만의 귀향, 기억활동주의, 기억동학, 기억규범활동가, 기억의제활동가, 기억현장활동가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727).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3대학원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기억의 정치” 공동세미나 팀과 유익한 비평을 제시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015년 한일 시민단체는 일제강점기 시절 홋카이도 강제노동 조선인 희생자 유골 115구를 경기도 파주 소재 서울시립묘지에 조성한 ‘70년만의 귀향’(이하 귀향) 묘역에 안치하였다. 이 글은 기억활동주의(memory activism)<sup>1)</sup>의 관점에서 기억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기억의 동학(memory dynamics) 즉, 기억활동과 활동가(memory activities and activists)의 진화와 연대를 귀향 사례 분석을 통해 정립하려는 정치학적 시론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간단한 사례 소개를 한 후 기억연구와 정치학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2장에서는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유형화 논의에 기초하여 귀향을 위치 짓고, 3장에서는 귀향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동학을 해석한 후 결론 맺는다.

## 1. 들어가면서: 사례 소개, 기억연구와 정치학

### 1. ‘70년만의 귀향’ 사례 소개

2015년 귀향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배태기와 전환기 그리고 성숙기를 거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사례 분석에 앞서 귀향에 이르기까지의 기억활동 전개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

“강제노동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살려 내리는 움직임은 1970년대 일본의 혁신적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전개한 ‘민중사발굴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풀뿌리 ‘기억 활동가’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희생된 민중의 역사를 찾아서 되살려내는 실천적 저항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킨 전후 일본의 국가적이고 공식적인 기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중 홋카이도 소라치(空知)<sup>2)</sup>지역에

---

1) 기억 행동주의로 번역되고 있으나, memory activist는 기억활동가로 번역되고 있는 것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억활동주의로 번역한다. 기억활동주의의 구체적인 정의는 II장에서 다룬다.

서 결성된 민중사 발굴모임인 ‘소라치민중사강좌’는 그 지역에 산재한 탄광과 광산, 댐 공사 체험자의 구술을 토대로 강제노동의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을 진행했다”(정병호 2017, 6).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던 기억활동주의는 홋카이도 후카가와(深川) 일승사(一乘寺)의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스님과 한국연구자 정병호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한일 시민단체들 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1997년 ‘홋카이도 슈마리나이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발굴을 위한 한일 대학생 공동워크숍’으로 발전한다. 2001년 공식 명칭을 ‘한일’로부터 ‘동아시아<sup>3)</sup>(의 평화를 위한) 공동워크숍’(이하 워크숍)으로 변경하였다(임재운 2020, 12). 워크숍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총 23회 개최되었다.<sup>4)</sup>

2015년 ‘70년만의 귀향’ 행사는 워크숍을 통하여 발굴한 유골과 홋카이도 각지 사찰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 115구를 고국으로 모시고 온 것을 지칭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홋카이도의 탄광, 항만, 비행장, 댐 공사장으로 끌려간 지 70여 년만이였다. 양국의 자원 활동가들이 지난 20년간 함께 발굴하고 수습한 유골을 모신 운구행렬은 희생자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길을 되돌아 북에서 남으로 일본 열도를 종단하면서 삿포로,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시모노세키에서 추모제를 지냈다. 바다를 건너 관부연락선이 떠났던 부산항 부둣가에서 도착노제를 지내고 서울광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후 서울시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하였다”(정병호 2017, 3).<sup>5)</sup>

- 
- 2) 소라치는 홋카이도 중서부 내륙 지대를 지칭하며 사사노보효전시관이 위치한 슈마리나이(朱麴内) 호수를 포함한다.
  - 3) 대만과 중국 참가자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서구 각지의 참가자들이 추가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도 참가하였다.
  - 4) 2018년은 대만, 2019년에는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 2월 오키나와 공동워크숍(24차)을 대면으로, 2021년 10월 비대면으로 25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5년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3000명이 넘고 2019년까지 최소 3500명 이상으로 추계된다(임재운 2020, 12). 자세한 워크숍 연표는 임재운(2020, 19) <표2: 동아시아워크숍 연도별 정리>를 참고.

워크숍과 ‘70년만의 귀향’을 사례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기억과 추모의 공인류학 관점에서의 정병호(2017), 1997년 한일대학생 공동워크숍을 민족주의의 과잉 관점에서 분석한 김영환(2002), 워크숍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추적한 임재운(2020), 체질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정병호(1998), 식민주의 유골 반환의 쟁점을 분석한 정희운(2018), 홋카이도 아사지노 육군비행장 건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발굴 사례를 다룬 안신원(2013) 등이 있다. 처음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과 조우하여, 이 기억활동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온 도노히라(2021)의 자전적 기록은 긴 역사와 다양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sup>6)</sup>

## 2. 기억적 전회

현재는 가히 기억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사와 서술이 국가와 학계가 주도하는 공적 역사와 기억의 주요 무대를 점하고 있었다면, 근대의 다양한 식민주의·전쟁·독재의 희생자들 혹은 그들과 연루된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기억을 내세우며, 공적인 공간과는 차별화된 대항 기억을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sup>7)</sup>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체가 되어 공적인 기억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거에 대한 전략적 추모에 개입하는 개인이나 집단적 활동’을 기억

---

5) 유골 귀환 행렬 이동 경로와 홋카이도 유골 수습 현황 지도는 다음을 참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nso=so%3Ar%2Ca%3Aa1%2Cp%3Aa1&sm=tab\\_nmr&query=%ED%99%8B%EC%B9%B4%EC%9D%B4%EB%8F%84%20%EA%B0%95%EC%A0%9C%EC%A7%95%EC%9A%A9%EC%9E%90%2070%EB%85%84%20%EB%A7%8C%EC%9D%98%20%EA%B7%80%ED%96%A5#imgId=image\\_sas%3Ablog54084023%7C10%7C220543162674\\_1685183450](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nso=so%3Ar%2Ca%3Aa1%2Cp%3Aa1&sm=tab_nmr&query=%ED%99%8B%EC%B9%B4%EC%9D%B4%EB%8F%84%20%EA%B0%95%EC%A0%9C%EC%A7%95%EC%9A%A9%EC%9E%90%2070%EB%85%84%20%EB%A7%8C%EC%9D%98%20%EA%B7%80%ED%96%A5#imgId=image_sas%3Ablog54084023%7C10%7C220543162674_1685183450) (검색일 2022.03.22).

6) 이하 워크숍과 관련된 발췌와 인용 중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쪽수만을 표기한 부분은 모두 도노히라(2021)가 출처임을 밝혀둔다.

7) XXX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과 운동단체,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활성화, 임지현(2019)의 『기억전쟁』 출간, 일간지에 연재한 “손호철의 발자국” 등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활동주의라 칭한다. 이러한 기억활동주의의 등장은, 역사 연구에서 기억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최근의 현상인 ‘기억적 전회(mnemonic turn)’<sup>8)</sup>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국가와 학계가 주도하는 공적 역사/기억 공간에서는 문서와 기록이 중요하지만, 기억적 전회를 지나며, 희생자/힘없는 자들의 경험과 증언이 중요해졌다.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와 서사 이론(narrative theory)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발달 속에서, 오늘날 역사와 기억의 관계는 그 기준이 역사에서 기억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역사는 곧 사회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포스트 모던 역사학은 기억을 통해 폐쇄적이고 단일화된 역사를 비판한다”(이현미 2017, 352). 기억적 전회는 역사적 “재현의 중심이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문서와 기록으로부터 힘없는 자들의 경험과 증언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기억연구는 이미 그 출발점에서 소소한 역사적 행위자들이 역사적 재현의 주제로 등장하고 날 것 그대로 남아 있는 희생자의 목소리를 재현함으로써 내러티브와 전거 자료의 민주화를 내장”(CGSI 2017, 11)하고 있다.

피에르 노라는 기억과 역사를 정교하게 구분하였다. “기억은 생명체다. 그 기억의 이름으로 세워진 살아 있는 사회가 낳은 것이다. 기억은 ‘기억하기(remembering)’와 ‘망각하기(forgetting)’의 변증법 속에 있으며, 계속적인 변형을 의식하지 못하고, 조작되고 이용되기 쉽고, 오랫동안 잠재해 있다가 주기적으로 되살아나기도 쉽다. 반면 역사는 과거의 재현이다. 역사는 지적이고 세속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에 분석과 비판을 요구한다. 기억은 ‘기억하기’를 성스럽게 만드는 반면, 역사는 ‘기억하기’를 세속적으로 만든다. 기억은 다양하고 특수하고, 집합적이고 복수적이지만 또한 개인적이다. 역사는 보편적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속해 있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정병호 2017, 19에서 재인용). “기억은 문서자료의 실증적 보조 수단이 아니라, 과거를 재현하고 역사를 구성하는 인식론적 정치의 중요한 장치”(임지현 2021, 12)가 된다.

8) 기억적 전회는 탈냉전, 민주화, 지구화 등의 시대적 변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기억적 전회가 정치학에 던지는 과제는 무엇인가? 떠오르는 주제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억의 변형은 쿤(Thomas Kuhn)적인 ‘기억혁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라카토스(Imre Lakatos) 류의 반증주의와 보조가설 등에 따른 연구프로그램의 진화적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기억의 생애주기(life cycle), 즉 기억의 생산-유통-소비-소멸 과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산주체는 누구이고 유통경로는 무엇이며, 다양한 기억들이 경쟁하는 기억 ‘공간’은 어디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주체들의 소비와 결정에 의해 선택/배제가 결정되는가? 이 과정에서 개별 기억들의 인정투쟁과 국제연대, 그리고 공적기구와의 조우와 접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종결되는가?

하지만, 기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적 연구는 대부분 기존의 개별 학문 분야<sup>9)</sup>에 산재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억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문적인 차원에서 엄밀한 방법론/존재론/인식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학문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통섭적 학제간 학문 분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sup>10)</sup>

### 3. 기억과 권력

기억과 권력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룩스(Lukes 1974)의 권력 개념이 유용하다. 권력은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벌어지는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태적

---

9) 역사/인문학/사회과학 등에 기억학이라는 분과학문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분과학문 내에서도 기억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치학 분야에서는 각종 기념물이나 구술사, 풀뿌리 정치사 등에 대한 연구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식 외교문서로부터 학계와 언론 등 공론장에서의 논쟁, 증언 자료, 신문·잡지 기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영화·만화·소설·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장르, SNS 등 인터넷 미디어”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임지현 2021, 12).

10) 기억연구를 대표하는 세계적 학회인 Memory Studies Association이 2016년에야 창립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 검색일 2022.02.07).

(behavioral) 차원<sup>11)</sup>, 의제(agenda)의 선택과 배제를 둘러싼 구조적(structural) 차원<sup>12)</sup> 그리고 사고(idea), 신념(belief), 규범(norm), 정체성(identity)을 둘러싼 구성적(constructive) 차원<sup>13)</sup>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권력 개념을 기억연구에 도입하면, 기억활동가를 공간, 역할과 목적에 따라 기억규범(norm)활동가, 기억의제(agenda)활동가, 기억현장(onsite)활동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억규범활동가가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기억을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한다면, 기억의제활동가는 무엇을 기억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배제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억현장활동가는 기억경쟁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특정 기억이 지배 기억이 되도록 노력하는 존재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들이 상호연관되어 있기에 명확히 분리되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분석적인 차원에서 개념의 명확성과 이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성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떠한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기억을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기억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인권/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영토화된 기억공간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탈영토화된 지구적 기억공간에서는 인권과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가 중요해질 수 있다. 기억과 관련된 규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으로 기억규범활동가의 영역이다. 이는 기억과 관련하여 가장 기저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기억규범활동가가 반드시 ‘기억’만을

- 
- 11) 권력은 결정과정에서 실현되고, 이러한 결정과정에는 항상 실제적인 그리고 관찰 가능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 12) 정책결정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소위 비결정(nondecision)의 문제로서, 정치 의제를 통제하고 잠재적인 이슈를 배제하는 ‘결정 이전 단계의 권력(Power before the Decision as revealed by the control of political agenda)’을 의미한다.
  - 13) 각 개인의 욕구와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치적 의제를 통제하기 이전의 권력(Power before the control of political agenda)이다. 대표적으로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이라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가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억이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자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으로 규범적 활동을 하는 존재는 아닐 수 있다. 보편 차원에서의 규범적 활동이 기억 영역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것이다. 인권·정의 규범이 기억 영역에 확산되어 들어온 부분을 생각해보면 된다.

구조적 차원에서 본다면, 무엇을 기억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배제할 것인지를 문제가 중요해진다. 새로운 기억의 대상을 발굴하고 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sup>14)</sup> 같이 기억해야 하는 의제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과 이러한 새로운 의제설정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는 ‘의제설정’ 권력의 투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기억(하기/시키기)과 망각(하기/시키기)의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행태적 차원에서 본다면 의제 공간에 성공적으로 신규 진입한 기억과 기존 지배 기억 사이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의 활동공간(onsite)이 중요해진다. 신규 진입 기억과 기존 기억 사이에서 해석과 책임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현실에서 관찰하기 쉬운 기억 권력 투쟁이다. 동상 등 기념물 설립/철거, 추모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억규범활동가, 기억의제활동가, 기억현장활동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활동목적과 활동공간 상으로 보았을 때 상호중첩되어 있기에 분리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활동가가 하는 역할은 상이하다. 규범적 차원에서 본 질적인 가치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억규범활동가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억의제를 발굴하여 의제설정의 ‘장(field)’에 균열을 일으켜서 의제로 정립하려는 기억의제활동가,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의제를 현실 공간에서 기존 기억과의 투쟁을 수행하며 사회적 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기억현장활동가는 분명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현실에서 본다면 특정 개인 혹은 단체가 기억 관련 규범/의제/현장 활동가의 역할을 동

14) 의제화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내적인 차원에서 내용의 충실화와 풍부화(내실화)가 필요하고, 의제설정에 동참하는 외부와의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다. 규범만으로 의제화를 주장한다면 ‘몽상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의제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실화와 연대를 통해 문턱(threshold)을 넘거나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여야 한다. 즉, 규범은 필요조건이며, 내실화와 연대를 통한 심화와 확장은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즉, 기억활동가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지가 다를 뿐일 수도 있다. 각 활동가가 가지는 비교우위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다를 수 있고, 주된 역할도 규범/의제/현장에서 차별적이다.

1980년 광주와 수요집회를 사례로 간단한 설명을 시도해본다. 80년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억규범활동가들에 의해 규범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민주화의 효과로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금기시하던 구조적 권력을 돌파하여 새로운 기억 의제로 진입하였다. 구성적인 차원에서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과 내용에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기나긴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의제화를 이루어낸 광주는 발포명령자, 헬기기총소사 등의 규명이라는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행태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예로 수요집회를 들 수 있다. 수요집회는 전쟁과 식민지배, 제노사이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하는 규범활동가들의 노력(유엔 인권선언 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후 김학순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기억의제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국내적으로나 지구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기억현장활동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소녀상 건립과 연이은 수요집회 등의 ‘기억의 터’가 마련되면서 기억현장활동이 가능해졌다. 2022년 현재 수요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 수호세력과 철거세력의 갈등은 구성적/구조적 권력이 작동하였기에, 현실에서 관찰 가능하게 드러난 것이다.

즉,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저에 존재하는 구성적 권력에 의한 인식과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구조적 권력에 의한 의제설정이 선행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억규범의 변화 없이는 기억의제화가 어렵고, 기억의제화가 없다면 기억현장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억현장은 기억의제화를 전제로, 기억의제화는 기억규범화를 전제로 한다.<sup>15)</sup>

기억연구의 일천한 역사를 생각할 때 위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논문은 기억연구를 위한 작은 징검다리 혹은 디딤돌을 놓는다는 목적으로 다음 특정한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아직 일천한 기억연구 특히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이론화를 위한 토대 작업으로, 구트만과 위스텐버그(Gutman and Wüstenberg 2021)의 유형화에 기초하여 ‘귀향’ 사례를 설명한다.

둘째, 기억의 동학을 해석한다. 기억의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권력 자원과 관련하여 피네모어와 시킨크(Finnemore and Sikkink 1998)의 규범동학(norm dynamics) 이론을 차용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 II. 기억활동주의 유형화

기억활동주의 연구는 일천하다. 구트만과 위스텐버그(1-2)는 다음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기억정치에서 활동주의가 유례없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지나며 기억연구는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조된 기억동원 투쟁이 가지는 현실적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이고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억활동주의의 개념화와 이론화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개념화와 분석틀을 정교화하기 위한 시도로 기억활동주의의 ‘좁은(narrow)’ 정의와 유형화를 제시하고 있다.

### 1. 기억활동가의 정의

구트만과 위스텐버그(2-3)는 우선 기억활동가를 “국가영역(state channels) 밖

---

15) 여기서 제시하는 규범-의제-현장이라는 순차적 차원의 단순 도식화는 논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억의 동학은 세 차원을 오가며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단순 도식화의 위험성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에서 공적인 기억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에 대한 전략적 추모(strategic commemoration)에 개입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행위자”로 정의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는 개인이나, 공식/비공식 단체를 포함한다. 둘째, ‘전략적’ 행동은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적 기억을 명확한 목표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비전략적 개입(non-strategic intervention)<sup>16)</sup> 또한 공적 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억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비국가 행위자들은 ‘밑으로부터(from below)’ 조직된다. 기억활동가는 국가와의 대척점에 혹은 국가의 외곽에 위치한다.

## 2. 기억활동의 유형화

구트만과 위스텐버그는 기억활동주의를 기억활동가의 역할, 타 기억과의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시간대 관념 세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 표와 같이 유형화한다.

〈표 1〉 기억활동가의 유형화: 역할, 상호작용 방식, 시간대 관념 (Gutman and Wüstenberg 2021, 7).

상호작용방식 Mode	투사형 (Warriors)		다원주의자 (Pluralists)	
역할Role/ 시간대관념 Temporality	종료된 과거 (The past has ended)	진행형 과거 (The past is ongoing)	종료된 과거 (The past has ended)	진행형 과거 (The past is ongoing)
희생자 Victims	1. Association for the Recovery of Historical Memory, Spain	2. Memorial to the Victims of Violence, Mexico	3. Reconciliatory tours of the Sudetenland by German and Czech activists	4. Widows Against Violence Empower, Northern Ireland

16) 가정 등의 사적 공간에서의 추모행위는 공적 기억을 목표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전략적’이다.

저항자와 영웅 Resistors and Heroes	5. Former members of the GDR regime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s, Germany	6. The Legacy Museum in Montgomery, USA	7. Hiroshima-Auschwitz Peace March	8. Indigenous memory activists, Canada
얽혀있는 행위자 Entangled agents	9. United Daughters of the Confederacy, USA	10. “We are not Trayvon Martin,” USA	11. Jewish Revival activism, Poland	12. Nakba Memory Activism, Israel
실용주의자 Pragmatists	13. Hubertus Knabe and others in GDR memory politics	14. Filmmaker Joshua Oppenheim on anti-communist violence in Indonesia	15. Institutional leaders turned activists for GDR memory	16.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위 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Gutman and Wüstenberg 2021, 7-9). 첫 번째 요소로, 기억투쟁에서 기억활동가들이 자임하는 역할에 기초한 분류이다. 희생자(victims),<sup>17)</sup> 저항자와 영웅(resistors and heroes),<sup>18)</sup> 얽혀있는 활동가 (entangled agents),<sup>19)</sup> 실용주의자(pragmatists)<sup>20)</sup> 네 유형을 들고 있다.

17)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로, 상징적 혹은 물질적 보상청구의 기초가 되고 상당한 수준의 정당성(진정성과 트라우마 등을 권위있게 표현할 수 있기에)을 획득하게 된다. 모든 희생자가 자동적으로 기억활동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결단이 요구된다. 당사자주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18) 반대자(dissidents) 혹은 생존자(survivor)이기는 하지만, 희생자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 자임한다.

19) 시공간적으로 역사적 사건과는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물론 그 유산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후에 논의할 연루된 존재(implicated subjects)도 이 유형에 속한다.

20) 쟁점이 된 과거에 직접 연관이나 정서적 개입이 ‘없음(무관함)’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활동가들이다. 인권/민주주의규범/전문가적 표준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며 종종 중재자(mediator)로 기능한다. 많은 경우 전문가(역사가, 학자, memorial officials)들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요소는 다른 기억과의 상호작용 방식이다. 투사(warriors)형은 자신들의 역사 해석만이 유일한 진실이라 간주함에 반하여, 다원주의자(pluralists)는 과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여지를 남김으로 인해 타자의 입장에 대해 관용적이다.

세 번째 요소는 시간대에 관한 관념 (notions of temporality)이다. 과거 사건에 대한 시간대(역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종료된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기억과 과거와의 관계맺기는 종료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를 종료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기억활동주의는 불가피하게 미래에 진행될 사건을 역전/수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식민/제국주의 폭력에 대한 기억에서, 식민주의를 종료된 과거의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태를 달리한 현재진행형의 사건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억활동주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유형화는 상관/인과 관계 등 가설형태의 사회과학적 질문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형화에 따른 분류는 가설형태의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적 기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은(Gutman and Wüstenberg 2021, 13-14)은 이러한 유형화의 학문적 장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1) 기억-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가들 사이의 충돌과 연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도구를 제공한다. 2) 기억활동가의 진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투사형으로부터 다원주의자로의 변화, 혹은 현재진행형 과거로부터 종료된 과거로의 해석 전이 등은 기억활동가들이 취하는 추모 실천전략과 의미만들기 등에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3) 다양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억-정치의 비교·협력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즉, 개별 기억행동주의의 시계열적 연구 혹은 비교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기억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풍부한 연구 질문을 생산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귀향 사례를 구트만과 위스텐버그 유형화<sup>21)</sup> 속에서의 이론적 ‘위

21)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기억활동주의 사례들은 Gutman and Wüstenberg 2021, 9-14에 개

치 짓기'와 기억의 동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유형화가 어떤 기억활동이 어떤 조건 하에서 더 성공적인가 등등의 상관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까지 전개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론적 자원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연구의 일천한 학문적 역사를 생각할 때 유형화에 따른 분류는 추후 정치학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3. '70년만의 귀향' 사례

귀향을 앞에서 제시한 유형화의 표에 위치시킨다면 10번 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왜 10번 셀에 해당되는지의 논지를 이를 이끌어온 기억활동가들 자신의 연술을 통해 규명을 시도한다.

먼저, 구트만과 위스텐버그가 제시한 10번 셀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본다. “We are not Trayvon Martin – USA” 사례(Gutman and Wüstenberg 2021, 12)로, 2012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자경단원에게 살해당한 Afro-American 10대 Trayvon Martin 사건이다. 1년 뒤 살해범이 석방되자 BLM(Black Lives Matter)운동이 전개된다. 직접적인 연대와 동일시 하는 대신에 비흑인(non-Black)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연대(#NotTrayvon)’를 주장한다. 목적은 마틴의 죽음을 추모함과 동시에 이러한 죽음을 만들어낸 역사와 구조에 대한 자신들의 연루(implication)를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에서 현재진행형인 흑인에 대한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엷혀있는 행위자’로서의 역할 자임, ‘투사형’ 상호작용, 그리고 ‘현재진행형’ 시간대 관념을 가진 기억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첫째, 70년만의 귀향 기억활동가들은 ‘엷혀있는 행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억활동가 도노히라(353-4)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연루되어 있다. ... 이를 ‘사후 공범’이라고도 한다.

---

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한다.

... 전후 세대인 우리는 강제노동 희생자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성립된 전후에 몸을 부지하면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가. 나는 예전에 ‘주체적으로 인수한 전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전후 세대가 전전의 사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 역사가 초래한 희생과 마주한다면 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발굴된 유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후 오랫동안 그들의 죽음을 묵인해 왔다.”

한국의 기억활동가 정병호(2017, 37) 역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기억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즈음 가해자 측인 일본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반인도적 범죄 사실에 대한 부정을 통해 민족적 긍지를 회복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남경학살은 조작된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는 매매춘이었을 뿐이며, 징용은 보편적인 국가총동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왜곡이 근대 일본의 침략사에 무관심했고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임지현(2019, 296)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 벌어진 잔학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 결과로 혜택을 받는 ‘연루된 주체’로서의 전후 세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 ‘연루된 주체’로서 전후 세대의 삶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 인종청소, 대량 학살, 조직적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의 유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루된 주체’로서 얽혀있는 행위자로서의 기억활동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상호작용방식은 투사형이다. “일본인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쟁과 식민 지배의 과거에 대해 사죄하거나 배상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전후를 살아왔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기억의 삭제 때문이었다. ... 일본의 지배층은 의식적으로 기억의 삭제를 유도했다. ... 식민 지배의 상징인 유골을 민중의 손으로 발굴하는 작업은, 망각을 강요당하거나 망각에 의존한 우리 민중이 스스로 누우치고 기억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며, 민중이 시민으로서 깨어나는 실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강제연행 희생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일은 일본인이 스스로 과거와 현재를 자각하는 실천 과제가 되었다”(41-3). “‘70년만의 귀향’이란 말이 뜻하듯이, 지난 70년 동안 강제노동 희생자들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정부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기만을 기다렸다고 하겠다. ... 이런 상황에서 홋카이도의 수풀 속에 잊혀져 가던 희생자들의 유골을 다시 찾아내서 고국으로 귀환하여 그들을 추모하는 장례식을 거행하고 기념묘역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역사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자, 망각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정병호 2017, 26. 밑줄은 필자 추가).

“전후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한 가해의 기억을 들추어내는 것이 억압받아 왔다”(134). “1960년대 일본의 안보투쟁 세대의 젊은 지식인들은 독일의 ‘68세대’가 나치즘과 전쟁책임을 회피한 자신의 부모세대를 비판한 것처럼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킨 전후 일본의 국가적이고 공식적인 기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 바로 이들이 ‘70년만의 귀향’의 일본측 시민단체의 뿌리가 되었다”(정병호 2017, 6). 국가의 공식 기억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해석을 유일한 진실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시간대 관념은 현재진행형이다. “전후 7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도 일본사회는 어리석은 역사 인식 때문에 과거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과거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과거를 마주보야 자신과 타인을 깊게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332). “일본사회의 노골적인 혐오발언과 차별의 횡행이 과거를 부정하는 논조로 부합되어 정치와 언론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증오와 폐쇄의 공기는 마치 광현사가 건립된 1934년, 전쟁전야의 파시즘 시대의 도래를 생각하게 합니다”(사사노보효전시관 2019.12).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배의 과거를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사람들과 화해와 평화를 실현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슈마리나이에 모인 사람들은 희생자의 유골과 만남으로써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넘어 평화스런 동아시아를 실현하려고 걸어



왔습니다”(사사노보효전시관 2020.1). 이들에게 과거는 종료된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귀향 행사를 구트만과 위스텐버그의 유형화에 따라 위치 지으면, 얽혀있는 행위자가 현재진행형 과거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전쟁 기억에 대한 투사형 상호작용 방식을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귀향 사례를 기억동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 III. 기억의 동학: ‘70년만의 귀향’ 사례 분석

1장에서 기억활동의 영역을 권력과 관련하여 규범/의제/현장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 단계는 기억규범이다. 기억규범은 꼭 기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 차원에서 제기된 규범이 기억의 영역으로 진입/확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기억규범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규범 일반론 차원에서의 접근이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피네모어와 시킨크가 제시한 규범동학 이론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차용한다.

규범동학이론은 단순히 새로운 규범의 출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생명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규범동학이론은 국제정치 차원에서 적십자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사례로 규범의 출현(emergence)<sup>22</sup>-확산(cascade)<sup>23</sup>-내면화(internalization)<sup>24</sup> 과정을 분석하면서 어떤 규범이 어떤 조건하에서 중요해지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2) 규범 엔트레프레뉴어의 출현과 조직적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가치와 정체성의 설득 과정(Finnemore and Sikkink 1998, 896-901).

23) 신생 규범의 정당성/평판/존경의 획득,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통한 확산과 임계점(Finnemore and Sikkink 1998, 902-4).

24) 전문가와 관료집단의 동조와 수용에 따른 제도화 더 나아가서는 법제화(legalization) 수준까지 포함(Finnemore and Sikkink 1998, 904-5).

규범의 출현-확산-내면화의 생명주기는 기억활동주의에서의 기억규범출현-기억의제 설정-기억현장활동의 주기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에 기초한 기억규범의 출현이 기초가 되어 기억의제설정 투쟁이 벌어지며, 상호 충돌하는 기억 중에서 어떤 기억이 내면화되어 공식화/제도화/법제화에 성공할 것인지를 가름하는 기억현장에서의 갈등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귀향에 이르기까지 기억의 동학을 설명한다.<sup>25)</sup>

## 1. 기억규범활동가의 탄생

에이전트로서의 규범 엔트레프레뉴어(entrepreneur)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공감(empathy), 이타주의(altruism)와 아이디어에 대한 헌신(ideational commitment)을 강조한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898). 귀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과 조우하게 된 일본인 승려 도노히라 요시히코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는 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승려로서 장례를 집전하며 망자를 떠나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 죽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방치한 것, 이는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이다. 근대 국민국가와 제국주의가 수많은 망자를 비업(非業 제명에 죽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 비명횡사)의 죽음으로 몰았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태평양 전쟁 종결까지 80여 년간 아시아와 전쟁을 반복하고 식민지주의와 인종주의로 망자의 수를 늘려 왔다”(9-10).

전후인 1945년 9월 일본 홋카이도 북부 후카가와에서 승려의 자식으로 태어난 도노히라는 평화운동에 몰두한 교토 대학생살을 보낸 후, 1973년 승려직을 계승하며 후카가와로 돌아온다. 1975년, 이미 활동 중이던 ‘오호츠크민중사강좌’를 통하여 홋카이도 개척에 희생된 노동자와 죄수의 유골 발굴 스토리를 접하며

---

25) 강제노동과 이에 대한 전후 일본/한국 정부의 정책과 역사적 전개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배경이기는 하지만 핵심이 아니기에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유골을) 파내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파내는 일입니다. 자신의 역사의식과 인권 의식을 파내는 일”이라는 발언을 듣게 되고, 이는 소라치민중사 운동의 구호인 “유골을 파내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파내는 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62).

1976년 5월 강제노동을 경험한 재일코리안의 증언을 듣게 되면서 재일코리안 강제노동역사와 처음 조우하고, 7월 발족한 ‘소라치민중사를이야기하는모임’(이하 소라치민중사강좌)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70-79). 1976년 관광차 방문한 슈마리나이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할머니로부터 광현사(光顯寺)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슈마리나이 우류(雨龍)댁<sup>26)</sup> 공사 희생자들의 위패였다(79-89).

이 운명적인 만남 후 소라치민중사강좌는 희생자를 조사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위패에 적힌 이름과 사망연월을 옮겨 적는 것을 시작으로, 댁공사와 관련된 회사와 지역정사(호로카나이정사) 등을 조사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90-91). 시정촌에 ‘매·화장 인허증’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하여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기록을 확보한다. 매·화장 인허증에서 발견된 희생자 수는 110명이었고 그 가운데 조선인 희생자는 15명이었다. 인허증에는 매장인지 화장인지를 구별해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시신은 매장되었다(103).

1976년 처음으로 매장 추정장소인 조릿대 숲을 방문한다(105). 희생자의 유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 일본인 95명의 본적으로 기재된 해당 시정촌에 조사표를 보냈다. 확인된 일본 유족들에게는 사망사실과 유골발굴 참여와 인도 의향을 문의하는 편지를 보냈다(115-6). 일본 유족은 이러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조선인 희생자 15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에 편지를 써 희생자의 유족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한국의 유족을 조사하는 일은 난망했다. 그때 초청강

26)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척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댁이 있는 지역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슈마리나이는 홋카이도의 북쪽에 있으며 ...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에는 2미터 이상의 눈이 쌓이며 ... 영하 41.2도의 일본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김영환 2001, 44).

연을 한 재일코리아인은 “한국에 갈 수 없다면 죽은 본인에게 편지를 보내 보면 어떨까요. 매·화장 인허중에 적힌 건 희생자 본인의 이름과 본적뿐이니,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제안하였고, 편지<sup>27)</sup> 말미에 회송 주소를 명기하였다. 조선인 희생자 15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14명 앞으로 ‘망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1977년 발송하였고, 일곱 통의 유족 답장이 도착하였다(123).

홋카이도 신문이 소라치민중사강좌의 강제노동희생자 조사 활동을 보도한 이후 댐공사 현장에 대한, 강제노동을 직접 수행한 사람 혹은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의 다양한 증언이 자발적으로 이어졌다(153-159). 묻혀있던 기억들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1976년 ‘슈마리나이추도법회협력회’를 출범하고, 1980년부터 4년간의 발굴로 16구가 지상으로 인도되었다(174).

1982년 강제노동희생자 한국인 유족을 찾는 작업이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이루어지나 거대한 역사와 기억의 괴리만을 느끼고 돌아오게 된다(176-189). 이후 이들은 희생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민족의 화해와 우호를 염원하는 상’을 1991년 건립한다. 주민과 신도의 급격한 감소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현사를 소라치민중사강좌가 1992년 인수하여, 1995년 7월 광현사 본당을 역사자료관 ‘사사노보효 전시관(笹の墓標展示館)’<sup>28)</sup>으로 문을 열었다(189-196).

27)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립니다. 이번에 일본 홋카이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라치 지방의 민중사를 조사하는 단체인 ‘소라치 민중사를 이야기하는 모임’을 통해 소라치 민중사, 특히 일본에 끌려온 조선 동포의 역사를 조사한 결과 슈마리나이댐 공사장에서 ‘000씨’가 희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단체로 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매·화장 인허증에서 확인된 정보(희생자, 호주, 본적, 생년월일, 주소, 사망장소, 직업, 사망일시, 사망 시 나이, 매장 장소, 신고인, 사인)을 기재하였다 (121-2).

28) 이 전시관은 2019년 2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져 붕괴 위험에 처했고 2020년 1월 붕괴되었다. 2019년 12월 이를 <재생·평화의 숲>으로 재건하려는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 2. 국내·외적 연대와 기억의제활동가로의 진화

규범 연구에 따르면, 규범 엔트레프레뉴어의 개인적인 자질 외에도 조직 플랫폼(Organizational Platfor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899). 기억활동가에 있어서도 조직 플랫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홋카이도 유골 발굴과 반환 사례에서도 기존 조직 플랫폼은 중요하다. 일본 각지의 민중사 운동과 홋카이도 내의 오토츠크 민중사 조직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지역 차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국제적 플랫폼은 기껏하여야 1982년과 1992년 두 차례의 유족과의 만남 시도가 불교 (그것도 불교라는 조직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승려 개인 차원의)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뿐이었다.

일국적이고 소규모 지역차원에서 진행되던 강제노동 희생자에 대한 조사와 유골 발굴 작업은 또 다른<sup>29)</sup>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국제적 연대 차원으로 전개된다. 1989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정병호는 보육 연구를 위해 홋카이도 후카가와외의 일승사 부설 어린이집에서 필드워크를 한 달가량 수행하였다. 도노히라는 1983년 이래 중단된 슈마리나이뎀 공사 희생자의 유골 발굴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정병호와 상의하였고, 정병호(2017, 8)는 “한국에 돌아가 인류학 교수가 되면 학생과 동료들과 함께 와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 유골들을 발굴하고, 억울한 희생의 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와 함께 밝히려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은 그로부터 8년이 흐른 1997년 여름 실현된다. ‘강제노동희생자유골발굴한일대학생공동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후 워크숍은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개최되었고, 2000년에는 대만과 중국 참가자들까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으로 확대되었다.

---

29)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도노히라 스님과 위패의 만남이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이라면, 지금 설명하는 두 마음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취지에서이다.

2003년에는 삿포로시에서 조선인·중국인 강제 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골을 조사하고 발굴해 유족에게 반환하자는 시민운동 조직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이하 홋카이도포럼)이 일본인뿐만 아니라 재일코리아인, 재일중국인이 함께 하는 국제 시민 활동 단체로 발족했다(28-9). 2005년 ‘구일본아사지노비행장건설희생자유골발굴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2006년 ‘동아시아평화를위한공동워크숍’<sup>30)</sup>이 일본인·아이누인·재일코리아인·한국인·중국인·독일인 등 300여 명의 참가로 개최되었다(35-36).

한국인 유족을 찾는 작업도 지속되었다. 삿포로 별원 희생자 유골 명부에서 한국인 유족을 찾게 되어 유족이 2004년 1월 홋카이도를 방문하였다(252-6). 유족은 홋카이도 지사<sup>31)</sup>를 면담하여 유골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삿포로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유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제2회 홋카이도포럼에 유족이 참여하여 증언하였고, “자신도 홋카이도포럼의 회원이 되어 함께 유골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모금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시민운동이 국경을 초월해 연결되는 것을 눈앞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255). 이렇게 시민운동이 지속되면서 지방행정기관과 기업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홋카이도포럼과는 별도로 유골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던 무로란(室蘭)<sup>32)</sup>과 아카비라(赤平)<sup>33)</sup>의 단체들이 유골반환 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하였다(288).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도 조금씩 드러나 2007년 NHK 9시 뉴스에서도 홋카이도포럼의 활동이 소개되었다(288-9).<sup>34)</sup> 홋카이도포

30) 다양한 강연회(홋카이도 대학교수, 리영희, 중국교수, 마을 노인의 증언 등)와 유골발굴이 진행되었고, 아사지노 발굴은 2010년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되었다(정병호 2017, 30).

31) 2006년 홋카이도 지사는 홋카이도포럼 공동대표를 초청으로 초대해 ... 홋카이도 정부 차원에서도 유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홋카이도는 “홋카이도와 조선인 노동자”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32) 홋카이도 남부에 위치한 무로란은 “일본제철, 신일본제철 등 거대기업이 있고 빛나는 노동운동의 전통이 있다”(288).

33) 아카비라는 홋카이도 서북 지역으로 후카가와 근방이다.

럼의 활동으로 적어도 홋카이도 지방 차원에서는 기억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이다. 내실화 작업과 연대의 확산을 통해 의제화를 위한 문턱 혹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작업들이었다.

2004년 12월 17일 가고시마현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포럼과 도노히라는 한국, 일본, 북한, 중국<sup>35)</sup> 국가지도자에게 유골 반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가고시마 “정상회담 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유골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어떻게 할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정부 수준에서 처음으로 강제 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가 정식 의제(259)로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전몰자가 아닌 민간인 희생자 유골 반환은 정부와 국가 차원의 의제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 3. 기억현장의 탄생과 전개: 70년만의 귀향

2013년 홋카이도포럼, 공동워크숍과 소라치민중사강좌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강제노동희생자추도·유골봉환위원회’가 결성된다(315).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와 유골 발굴·반환 노력이 지지부진하기에 양국정부에는 알리지 않고<sup>36)</sup> 순수

34) 다른 미디어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97년 공동워크숍의 유골 발굴 작업의 전 과정을 동행 취재한 홋카이도TV 기사는 이 작업을 “할아버지를 파다(ハラボジを掘る)”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정병호 2017, 16). 카게야마와 후지모토 감독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의 동아시아공동워크숍을 통한 젊은이들의 만남과 우정, 삶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5부작 다큐멘터리(총 9시간 30분)를 제작하였다(정병호 2017, 25각주 20).

35) 북한과 중국이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삿포로 별원에 남겨지고 합장된 유골에는 한국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한국, 즉 예전 한반도 남부 출신 유골이 61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한반도 북쪽 출신 희생자가 13구, 본적 불명 조선인 유골이 11구였다. 중국인 유골이 6구, 일본인으로 보이는 유골도 10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58-9). 북한과 중국에서는 답신이 왔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답장은 없었다.

36)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적고 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어떻게 연락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미 유골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협의해 왔다. 우리가 봉환을 계획하는 유골의 존재도 충분히 알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유골 반환

한 시민단체 차원에서만 진행하기로 한다. 안장할 장소로 유족이 희망한 ‘망향의 동산’은 “115구 유골 각각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유족동의서<sup>37)</sup> 요구”(정병호 2017, 32)하면서 “유족이 판명되지 않은 유골과 합장된 유골은 받아들 수 없다”(318)고 답변하여 무산되었고 서울시의 협조로 파주 서울시립묘지에 조성한 ‘70년만의 귀향’ 묘역에 안장되었다.

봉환 여정은 희생자가 밟은 길을 역순으로 2015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sup>38)</sup> 봉환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미디어인류학자 데이비드 플래스(David Plath) 명예교수 촬영팀은 전체 봉환일정에 참여하면서 다큐멘터리 ‘길고 긴 잠(So Long Asleep)’<sup>39)</sup>을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과거의 역사적 희생을 함께 발굴하며 화해와 우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풀뿌리 평화운동의 선구적 사례”로 제작하였다.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일본과 한국의 민중이 스스로의 의지로 화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의 결실이었다. ... 유골 115구를 봉환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시도해 일군 화해의 일환이다.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화해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322).

---

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시 알릴 필요도 없었다. 이번은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협의해 직접 유골 봉환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일부러 양국 정부에 정식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317).

- 37) 이 유골은 합골되었기 때문에(개별성을 상실한 화장된 유골인 관계로), 개별 희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유족동의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 38) 별도의 사진전(9.9-20)과 보고회(9.9)가 열렸고, 9.19 19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장례식이 개최되었다. 봉환단은 유족을 포함한 한국인 13명, 일본인 20여 명,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참가자들까지 총 50명이었다(318).
- 39) 플래스 교수는 서울시청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추모하였다. “흰 유골함을 든 동아시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미국인들과 전세계가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 수십 명의 동아시아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날을 상상해 봅시다. 정부가 해 주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날을, 잃어버린 유골을 담은 함을 모든 인간의 삶을 담고 가는 신성한 상징으로 바꾸어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노력하는 날을, 마침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가는 그날은 진정한 세계평화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정병호 2017, 33).



70년만의 귀향 묘역은 이후 기억의 현장이 되었다. “가족 묘지를 찾았던 일반 시민들도 역사적 희생자들을 위한 묘역이 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추모의 발길을 이어갔다 ...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들은 이 ‘70년만의 귀향’ 묘역을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시민들이 우선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정병호 2017, 34). 이후 공동워크숍의 대만 참가자들, 그리고 ‘길고 긴 잠’ 다큐를 본 미국 교사들 등 다양한 세계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즉 묘역은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터전’으로 역할”(임재운 2020, 74-76)을 한다.

귀향 행사 이후 (사)평화디딤돌<sup>40)</sup>은 강제노동 “희생자들 ... 각 개인의 존재와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평화디딤돌’<sup>41)</sup>을 놓기 시작”(정병호 2017, 38)하였고, 다양한 기억의 현장<sup>42)</sup>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묘역이 ‘기억의 터’라면, 이후 진행한 다양한 기억현장사업은 그람시적 표현을 빌리자면, 기억의 ‘진지’를 만들어 ‘진지전(war of position)’을 수행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또한 워크숍과 귀향 행사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참여자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

40) (사)평화디딤돌은 70년만의 귀향을 준비하면서, 2015년 8월 워크숍 한국사무국을 사단 법인으로 확대 개편 제도화한 것이다(<http://steppingstone.or.kr>).

41) 평화디딤돌 명칭은 독일 행위예술가 군터 뎀니히(Gunter Demnig)의 ‘걸림돌(stolperstein)’과 관련이 있다. 나치즘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이름을 새긴 동판을 보도블록에 설치하여, 행인들의 발걸음이 걸리게 되면 행인은 이를 응시하게 되면서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를 가진 것이 걸림돌이다. 이를 한국어로 평화디딤돌로 번역한 것이다. 평화디딤돌 놓기 행사는 2016년 3월 군터 뎀니히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2022년 2월 현재 15차례 이상 진행되었다. 위치는 홋카이도 희생 현장과 희생자들이 살았던 한국의 마을 어귀이다. 개별 위치는 평화디딤돌 사이트 참조 <https://steppingstone.or.kr/history/>(검색일: 2022.02.07).

42) 2018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사진전>,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을 위한 국제회의>, 2018년 강제노동 관련 역사지 가이드북 <12:34 시간여행자 가이드북 - 홋카이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간, 2019년 <잊혀진 영혼들-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과 귀환>, <‘길고 긴 잠(So long asleep)’상영회>, <‘유골을 말하다’ 도노히라 요시히코 대담>, <‘유족의 삶을 말하다’ 플레이백 시어터>, <정태춘 ‘징용자 아리랑’ 추모공연>, <‘70년 만의 귀향’ 사진전> 등이 있다(<https://steppingstone.or.kr/history/> 검색일: 2022.02.07).

거나, 정체성을 찾거나, 본인의 소속감”을 찾고,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한일 간의 시민들이 다름을 인식하고 이해를 통해 연대를 만들어가는 ... 새로운 공동체의 생성”(임재운 2020, 108)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상 ‘70년만의 귀향’ 사례의 역사와 현재를 통하여 기억활동가의 진화과정과 기억의 동학을 살펴보았다. 기억규범의 탄생으로부터, 기억의제의 설정, 기억현장의 창출과 활동 등의 과정은 피네모어와 시킨크가 제시한 규범동학과 맞닿아 있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규범동학에서 규범의 출현-확산-내면화의 과정과 거의 유사하나, 마지막 단계인 내면화의 과정이 국가와 정부에 의한 제도화/법제화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억현장의 창출과 이것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볼 때 제도화/법제화를 위한 전단계까지의 준비 기간이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억과 권력과의 관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본다면, 기억의 기초 혹은 기저로 작동하는 규범활동에 기반하여 기억의제가 설정되었고, 이 기억의제로 인해 현실에서의 기억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억‘현장’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에 대신하여

이 글은 기억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정치학적 시론이다. 기억적 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기억활동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와 기억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억적 전회는 적어도 공적인 부분이 장악하고 있는 역사만큼이나(혹은 역사보다) 기억의 영역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기억활동주의는 매우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학문적 분석틀을 만들기

위한 작은 디딤돌적인 시도로서, 첫째 기억활동 유형화에 대한 논의를 도입하여 70년만의 귀향을 해석하였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까지의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유형화에 따른 분류는 바로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장 토대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70년만의 귀향은 ‘엮혀있는 행위자’로 자임하는 기억활동가들이, 자신의 기억해석에 대한 투사형 입장을 견지하며 과거를 종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으로 판단하면서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인가? 일본의 과거 망각하기와 한국의 과거 과잉 기억하기의 방식이 바뀐다면, 엮혀있는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실용주의자로서, 투사형으로부터 다원주의형으로, 현재진행형 과거에서 종료된 과거로의 전이는 가능한가? 즉, 기억활동가가 자임하는 역할, 과거에 대한 인식,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무엇인가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사례 연구들이 추가되어 역사적/지역적 비교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억의 동학을 해석하기 위해 규범동학 이론과 룩스의 권력론을 차용하여 기억활동가를 기억규범활동가-기억의제활동가-기억현장활동가로 분류하였고, 이를 귀향 사례에 적용하여 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의 발굴과 반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규범 출현-확산-내면화의 과정과 유사하게 기억의 탄생, 확산과 연대, 그리고 기억현장의 창출이라는 기억의 동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평화디딤돌’을 주도한 정병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양국의 국가권력이 외면하고 빨리 지우려고 하고 있지만, 양국의 시민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늘 새롭게 확인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평화디딤돌은 과거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로 희생되어 역사상 숫자로만 기록된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을 일상생활 공간에서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상징물’이자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같은 장소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유린당한 삶의 진실을 확인하고 되새기는 ‘진실의 상징물’이다. 역사적 진실

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족 간 화해와 인류의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평화의 상징물’이기도 하다”(정병호 2017, 38).

향후 진행되었으면 하는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마친다. 하나는 기억활동주의 유형화에 따른 다양한 기억활동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 보다 일반적인 상관/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분석틀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기대하여 본다. 다양한 유형이 어떻게 진화하고 연대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억동학을 통해 만들어진 기억현장이 어떻게 국가와 학계에 받아들여져 내면화 될 수 있는지, 즉 어떤 조건하에서 어떠한 활동이 제도화/법제화의 수준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 글이 이러한 연구과제를 만들어내는 데 자그마한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 김영환. 2002. “한일시민연대를 통해 본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 한일공동워크샵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 도노히라 요시히코 저. 지상 역. 2021. 『70년만의 귀향: 홋카이도 강제 노동 희생자 유골 귀환의 기록』. 서울: 후마니타스.
- 사사노보효전시관 (笹の墓標展示館). 2019.12/2020.1. “재생·화해와 평화의 숲 만들기 취지문.”
- 안신원. 2013. “일본 천모야 구일본육군 비행장 건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발굴.” 『비교일본학』, 28권, 27-47.
- 이현미. 2017. “『제국의 위안부』와 기억의 정치학.” 『국제정치논총』, 57권 2호, 329-366.
- 임재윤. 2020.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활동 참여자의 변화 과정: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을 중심으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사논문.
- 임지현. 2019. 『기억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서울: Humanist.
- 임지현. 2021.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서울: Humanist.
- 정병호. 1998. “한국 체질인류학의 역사적 과제: 일본 북해도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발굴의 인류학적 의미.” 『해부생물인류학』, 11권 2호, 213-229.
- 정병호. 2017. “기억과 추모의 공공인류학: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 발굴과 귀환.” 『한국문화인류학』, 50권 1호, 3-46.
- 정희윤. 2018. “21세기 식민주의 유골 반환운동의 딜레마: 베를린-나미비아와 홋카이도-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 CGSI. 2017. “HK일반연구원브리프자료.”
-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Autumn 1998.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887-917.
- Gutman, Yifat and Jenny Wüstenberg. 2021. “Challenging the meaning of the past from below: A typology for comparative research on memory activists.” *Memory Studies*, 1-17.

Lukes, Steven. 1974. *Power: A Radical View*. MacMillan.

- 인터넷 자료

70년만의 귀향 홈페이지 <http://return2015.com> 검색일: 2022.02.07

평화디딤돌 홈페이지 <https://steppingstone.or.kr/history/> 검색일: 2022.02.07.

Memory Studies Association

[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 검색일: 2022.02.07

투고일: 2022.02.16. 심사일: 2022.03.19. 게재확정일: 2022.03.21.
--

## An Essay on Memory Studies from the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of “Returning Home in 70 Years”

Lew, Seok-Jin | Sogang University

This essay is an attempt to expand memory studies into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The case I analyze is “Returning Home in 70 Years” which is a civic movement for the Excavation and Repatriation of the Korean Forced Labor Victims in Hokkaido, Japan. First, I borrow the typology of memory activism suggested by Gutman and Wüstenberg. Returning Home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Entangled Agents,’ who are ‘warriors’ with the perception of the past as ‘ongoing.’ Second, in order to analyze Memory Dynamics, I utilize the Lukes’ conceptualization of Power and Finnemore&Sikkink’s Norm Dynamics theory. Memory Activists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Memory Norm Activist-Memory Agenda Activist-Memory Onsite Activist. Returning Home event was made possible by Memory Norm/Agenda/Onsite Activities over about 50 years’ efforts.

---

**Key Words** | Returning Home in 70 Years, Memory Activism, Memory Dynamics, Memory Norm Activist, Memory Agenda Activist, Memory Onsite Activist





# 『현대정치연구』 편집 및 심사 규정

##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임기가 종료되는 편집위원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지명한다.

###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 제 3장 현대정치연구 발간

###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https://sips.jams.or.kr/>)나 편집위원장을 통해 투고한다.
2.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현대정치연구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현대정치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6.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봄호-2월 15일, 여름호-6월 15일, 겨울호-10월 15일

###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를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 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 소장이 결정한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게재료 200,000원을 부담한다.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대정치연구는 각 권호에 수록된 최종 출판물에 대해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자 본인이 본인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 혹은 리포지터리 등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4. 원고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 제9조 (발간 예정일)

1. 현대정치연구는 년 3회 발간하며, 봄호는 4월 30일, 여름호는 8월 31, 겨울호는 12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접수는 봄호는 2월 15일, 여름호는 6월 15일, 겨울호는 10월 15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마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후 게재	
가	가	게재불가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1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저자는 1 주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현대정치연구 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 제 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3. 현대정치연구는 심사와 출판이 완료되는 대로 현대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현대정치연구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부칙

본 규정은 현대정치연구소 정관 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현대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 1. 원고의 길이

- (1)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180매를 넘지 못한다.
- (2) 제출 논문의 표지에 원고 매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매당 5,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 2. 원고의 구성

- (1)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요약,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소속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 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 (5)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6)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훈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3. 저자의 익명성

- (1)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줄고(拙稿)XXX... 혹은 ...(拙著)YYY...

#### 4. 기타 사항

-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 (5)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 (6) 출처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처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 〈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처 표시 요령 〉

1. 출처는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4) 국문의 경우, 저자가 2명인 경우 “.”을, 3명 이상인 경우 “외”를 활용하고, 영문의 경우 2명은 “and”를, 3명이 이상인 경우는 “et al.”을 사용하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한배호 . 어수영 1991), (한배호 외 1995), (Almond and Verba 1963) (Verba et al. 1995) ...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하되, 한국 문헌을 외국 문헌 앞에 두고, 한국 문헌은 가나다 순서를, 외국 문헌은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예: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Lee 1968)...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5)혹은 ...(신동아 93/5, 233).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출판예정’을 사용하고, 미간행 원고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잉거정(출판예정); ...홍길동(미간행).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 〈 인터넷 자료 인용 〉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88.10.20).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1998.10.20>. (1/10 Bar).

## 〈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hanging indentation)

#### 가. 저서

##### 1) 저자 1인인 경우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7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믿음사.

Tillich, Paul. 1963.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출전 인용 규칙을 따르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V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이창동·김명희·허윤기.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 나.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건력과 시민사회.” 김서방 외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호박사.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a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4-113.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 자본주의의 정치』. 서울: 집현연구소. 261-306쪽.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 선택 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봄), 10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No. 1(Winter),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22), 23.

자. 편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르르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leski*(1979), 414-29.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5. 이 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편집위원회(705-8616, polsci@sogang.ac.kr)로 문의한다.

# 현대정치연구 저술 윤리강령

## 1. 목적

- (1) 현대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와 저자들 간 특수관계에 의한 연구논문 출간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등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 (4)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 4. 제재방식

-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 5. 기타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본 강령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 부록1: 현대정치연구소 학술활동 (2015년 3월~2021년 7월)

### 1. 2015년 3월 제 3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2015년 03월 27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가. 발표:

- 여지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복지균열의 부상에 관한 연구-무상급식부터 경제민주화담론까지의 시기 (2009-2012)를 중심으로
- 김태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균등이념과 제헌헌법
- 김성모(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사회적 자본이 사회실패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네트워크 자본을 중심으로
- 정성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 소고
- 이태규(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당- 국가 체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위상 변화
- 선민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중국식 민주에서의 사회집단의 역할 고찰’ - 위로부터의 정치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저항을 중심으로

나. 토론:

-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심은정(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정결(서

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유동(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 전재호(서강대), 이민자(서울디지털 대학교)

## 2.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6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서구중심주의와 역사교육의 공과 (서강대학교 김민정)

## 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13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중국학술의 주체성과 유럽중심론의 비판 (상해 화동사범대학교 류칭)

## 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후원 “정당정치 의 변화 왜 어디로” 저자와의 대화

·일자: 2015년 5월 28일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내용:

가. 발표:

정진민(명지대) :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 대안으로서의 유권자 정당

강신구(아주대) :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중정당론의 적실성에 대하여

최준영(인하대) : 대통령제 정당체제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채진원(경희대)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 약화론’과 네트워크정당모델

서정건(경희대) : 후보 선출과 정당 조직의 연계 및 변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현우(서강대) : 미국 정당의 양극화 평가 - 약화(decline)인가 적응(adaptation)인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 정당정치에 혁신에 대한 시론 -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성호(경희대) : 정당 내 정파(faction) 문제와 정치 양극화 - 탈산업시대 정당의 위협요소와 극복 방향

나. 사회:

김민전(경희대)

## 5. 현대정치연구소 · SSK 탈서구중심주의연구단 공동주최 세미나

·일자: 2015년 6월 5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A호

·내용:

가. 발표:

- 엄한진(한림대) :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김은실(성신여대) : “유럽중심주의와 러시아 정체성 논쟁”

박은홍(성공회대) : “동남아시아에서 반(反)서구중심주의 ‘아시아적 가치’의 양면성”

조경란(연세대) :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의 대립과 충돌-역사적 회고와 전망”

김광수(한국외국어대) :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 시각에서 본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역사적 맥락화”

- 김은중(서울대) :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본 권력의 식민성, 자본주의 세계경제, 유럽중심주의”

- 이지은(한국외국어대) : “서구와 탈서구, 근대와 탈근대-인도 역사학

의 여정”

- 고희탁(서강대)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근현대 일본의 동화전략과 역  
전전략의 이중주”

나. 토론: 장경섭(서울대), 김태연(서울대), 이한우(서강대), 정수복(사회학자  
/작가), 임기대(한국외국어대), 박정원(경희대), 김진영(서강대), 이새봄  
(연세대)

다. 전경옥(숙명여대), 장인성(서울대)

## 6.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정부연구단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일자: 2015년 6월 5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가. 발표:

- Edgar Grande(LMU MUNICH, 뮌헨대학교) : “Global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Political Conflict in Western Europe“

나. 사회:

이현우(서강대)

## 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16시

·장소 : 다산관 603호

·내용 :

- 한국 심리학계의 탈서구중심적 연구동향: 유학심리학의 연구를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 조공호)

- ‘우리성’과 ‘쪽’의 심리학: 한국적 세계관에 바탕한 심리학의 한 모형  
(한규석) (전남대학교 한규석)

**8.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8월 17일(월) 16시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발표 :

- ‘가족개인’과 한국의 계층질서: 소소유자의 존재와 의식(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 탈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사회학적 모색(이영찬) (계명대학교 이영찬)

**9.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4호

·발표 : 제국의 역사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선대학교 공진성)

**10.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보편주의적 한국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 속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전북대학교 조영철)

**11. 현대정치연구소, 한국사회기반연구(SSK) 좋은정부 연구단 공동 주최 해외학자 초청 강연**

·일자: 2015년 10월 16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호

·내용:

가. 발표:

- Sverker C. Jagers(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Gothenburg &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 Ecological Citizens - Realism or Utopia?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values for generating green behaviour and consumption

12.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정치연구소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해외학자 초청 강연회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5시 30분
- 장소 : 다산관 209B호
- 내용 : “유교민주주의의 가치: 도구적 가치로부터 내재적 가치로” (홍콩시립 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김성문)

1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16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발표 : “패치워크문명론” (동국대학교 황태연)

1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자: 2015년 11월 27일
- 장소: 다산관 209B호
- 내용:
  - 가. 발표:
    - 이수상(부산대) : 언어 텍스트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
  - 나. 사회:
    - 이현우(서강대)

15.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 2015년 12월 4일

·장소: 다산관 209B호

·내용:

가. 발표:

이남영(세종대) : 지역투표현상은 퇴조하는가

나. 사회:

이현우(서강대)

**16.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유럽중심주의와 역사학 비판 - 국내 서양사학계의 유럽중심주의 논의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김택현)

**1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발표 : 소농사회론에서 유교적 근대론으로 (성균관대학교 미야지마 히로시)

**18. 2016년 2월 제 4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2016년 2월 24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603호

·내용:

가. 발표:

- 추정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5.24조치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역 변화를 중심으로

- 황하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와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 1987년 13대 대선을 중심으로

이석희(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전략과 정치적 정당성: 역전적 동화주의 분석 -정관웅의 『성세위언』을 중심으로

양해만(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북한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경제민주화는 어떤 민

주화인가?

나. 토론:

김태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유재승(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윤호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전재호(서강대), 한영빈(서강대)

#### 19.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한국정치사상학회 3월 월례학술회의

·일시 : 2016년 3월 19일(토) 15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101호

·내용 : “존 롤스 정치이론에서 공동체주의적 요소” (국민대학교 이종은)

#### 20.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13시 00분

·장소 :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

·내용 : “What is Good Government in Asia”

#### 2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0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내용 : “Dynamic lobbying: Empirical evidence from foreign lobbying on free trade agreement”

·발표 : 유혜영 교수 (Vanderbilt University)

2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5월 20일(금) 17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501호
- 내용 :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deology and Taxation on Welfare Voting”(정부 이데올로기와 조세수준이 복지투표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신정섭 교수 (한양대학교)

23.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Rethinking “Capitalism” and Long-Run Paths of Development in East Asia”
- 발표 : 김원익 교수 (Louisiana State University)

24.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Factories for Votes? How Authoritarian Leaders Gain Popular Support Using Targeted Industrial Policy”
- 발표 : 박선경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5.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09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선거제도,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결과”, “유권자 지형의 변화와 양대 정당의 미래 / 미국 밖에서의 포퓰리즘.”
- 발표 : 이현우 교수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 (서강대학교)

## 26.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확대월례 세미나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2017 촛불집회: 누가 그리고 왜”
- 발표 : 이현우, 서복경, 이지호 교수(이상 서강대학교)
- 토론 : 장우영(대구카톨릭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하상웅(서강대학교), 김욱(배재대학교)

## 27.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특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촛불과 태극기의 정치”
- 발표 : 김종범(대전대), 전상진(서강대), 신진욱(중앙대), 도모연(영남대), 이현출(건국대),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이상 서강대)
- 토론 : 전재호(서강대), 김윤철(경희대), 박명호(동국대), 강신구(아주대), 황아란(부산대), 이재묵(한국외대)

## 28.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월례세미나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저자와의 대화: 정당의 과거와 미래를 묻다.”
- 발표 : 정진민(명지대)
- 토론 : 전진영(입조처), 강신구(아주대), 서정건(경희대), 안병진(경희대), 임성호(경희대), 채진원(경희대), 최준영(인하대)

### 29.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1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3시 2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한국 정치과정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 발표 : 박선경(인천대), 강신구(아주대), 조영호(서강대), 강원택(서울대), 장훈(중앙대), 이지호(서강대), 서복경(서강대)
- 토론: 하상응(서강대), 허석재(입조처), 임성호(경희대)
- 사회: 이현우(서강대), 정진민(명지대)

### 30. 2019 현대정치연구소 콜로키움

-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16시 2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미디어생태계 변화와 시사평론의 세계”
- 발표 : 장희영 시사평론가

### 31. 한국 선거학회-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21년 여름 공동학술대회

- 일시: 2021 6월 18일(금) 15시 30분
- 장소: 온라인(Zoom)
- 내용: 코로나 시대 정당 및 선거정치
- 발표: 박정훈(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태심(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황인정(성균관대 SKK 좋은민주주의 연구센터)
- 토론: 신재혁(고려대학교), 장한일(국민대학교), 강우창(고려대학교)
- 사회: 이현우(서강대학교)

### 32. 2021년 7월 월례발표

- 일시: 2021 7월 28일(수) 15시
- 장소: 온라인(Zoom)

- 내용: 박근혜 탄핵과 여성정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연구
- 발표: 이영임(California State University-Sacramento)
- 토론: 오세제(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사회: 이현우(서강대학교)

## ■ 편집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강우진(경북대)	김면희(한국외대)
박범섭(영국레딩대)	박선경(인천대)
박영득(충남대)	송병권(서강대)
우병원(한국외대)	이선우(전북대)
이현우(서강대)	조영호(서강대)
최일성(한서대)	하상응(서강대)
한경준(테네시대)	홍지연(홍콩과기대)

## 현대정치연구 2022년 봄호 (제15권 제1호)

인쇄 | 2022년 04월 25일  
발행 | 2022년 04월 30일

발행인 | 이현우  
편집인 | 조영호  
편집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펴낸곳 | 도서출판 (주)북크리 (bookcreer@naver.com)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Sogang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South Korea

TEL | (+82)2-705-8616 FAX | (+82)2-705-8617

E-mail | polsci@sogang.ac.kr

ISSN 1976-9466